발간등록번호
11-1250000-100009-10

통일백서

UNIFICATION WHITE PAPER

2025 한반도 평화공존의 기록들

WWW.UNIKOREA.GO.KR

통일부



2025년, 우리는 오랫동안 멈추어 있던 한반도 평화의 시계를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한반도는 2024년까지 적대와 대결의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남북 간 '강 대 강' 대결이 군사적 긴장을 연일 높였고, 무너진 남북관계와 실종된 평화는 국민의 일상을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접경지역에서는 전단과 오물풍선이 날아다니고, 확성기와 소음 방송이 주민들을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싸울 필요 없는 평화가 가장 확실한 안보'라는 확고한 인식을 가지고, 대결적 정책이 아닌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으로의 대전환을 선언했습니다. 북측의 체제를 존중하고, 흡수통일을 추구하지 않으며, 어떠한 적대행위도 하지 않는다는 평화공존의 3원칙을 확고하게 천명했습니다.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무너진 신뢰를 쌓음으로써 평화를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한 일관된 노력을 계속했습니다.

전단 살포를 막고 확성기 방송을 중지하는 등 우리 정부가 먼저 취한 긴장완화 조치에 북측도 호응함에 따라 접경지역은 평온한 일상을 되찾았습니다. 지난 1월 민간 무인기가 북한 지역에 불법 침투한 사건과 관련해 유감의 뜻을 전함으로써 불필요한 군사적 긴장 고조를 막았고, 재발 방지 대책도 마련했습니다. 우리 측의 유감 표명에 북측도 호응하면서, 남북 정상이 서로의 의사를 확인하는 진전도 있었습니다.

남북 대화와 교류협력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공동성장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기반도 다시 쌓았습니다. 통일부 조직 개편으로 「정부조직법」상 통일부의 핵심 기능인 남북 대화와 교류협력 기능이 전면 복원되었습니다. 법과 제도 정비를 통해 남북 교류협력의 추진 기반도 재건했습니다. 민간의 자율적이고 주도적 역할을 지원하고 촉진한다는 기조를 가지고, 허가제처럼 운영되던 북한주민접촉 신고제도를 본래 취지에 맞게 개선했습니다. 평화경제와 공동성장의 미래를 구상하고, 대화 재개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면서, 인도적 협력과 사회문화 협력을 복원하기 위한 민관 협력의 토대도 닦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국민의 목소리가 담긴, 국민께서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국민주권' 한반도 정책을 만들어 나가는 노력도 이어졌습니다. 사회적 대화를 위한 통일부장관 직속 '한반도평화경청단'이 신설되었고, 국민께서 북한 노동신문을 일반 간행물과 동일하게 열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북향민' 명칭을 사용함으로써, 다름을 강조하기보다 통합에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하나원 교육생들에게는 교육용 스마트폰을 지급해 세상으로 통하는 창을 열었습니다.

2025년에 우리는 완전히 무너져 폐허가 된 남북관계 위에 평화와 신뢰의 벽돌을 하나씩 쌓았습니다. 우리가 먼저 평화를 실천하면서,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의 희망도 엿보았습니다. 중동 전쟁으로 인한 전 세계적 불안 속에서도 우리 정부의 확고한 평화공존 의지는 전쟁의 위기가 한반도로 전이되는 것을 막는 '방화벽'의 역할을 했습니다.

남북관계는 아직 침묵 속에 있습니다. 격변하는 국제질서는 한반도 평화의 방정식을 더욱 복잡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한반도 평화는 우리에게 선택이 아닌 생명선입니다. 국민의 삶과 직결된 절체절명의 과제입니다.

2026년에는 한반도 평화공존이라는 목표를 향해 더욱 흔들림 없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말이 아닌 행동으로 평화를 실천해 나가면서, 남북이 평화롭게 공존하는 이웃으로 다시 마주 앉을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한반도 평화공존의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 나가는 길에 『2026 통일백서』의 독자 여러분께서 함께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26년 5월

통일부장관 정 동 영

발간사 2

Part 1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 12

제1절 정책 추진 환경 16

제2절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 추진 19
1. 이재명 정부의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 19
2.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 28
3. '전쟁과 핵 없는 한반도' 실현을 위한 노력 30
4. 접경지역 평화 및 주민 안전 지원 32

제3절 평화·통일 국민 공감대 확산 34
1. 통일문화 확산 노력 34
2. 청년세대와 함께하는 평화·통일 공감대 확산 노력 36
3. 통일정책 국민적 합의 형성 37
4. 지역별 통일+센터 설치 및 운영 39
5. 통일문화 콘텐츠 발굴 및 확산 43
6. 미디어를 통한 국민과의 소통 활성화 45
7. 통일·북한연구 생태계 활성화 49
8. 한반도 정책 관련 사회적 대화 활성화 51

제4절 국제사회와의 협력 52
1. 주요국 정부·의회 및 주한 공관 협력 강화 52
2. 국제회의 개최 및 평화·통일 공공외교 강화 56

2025 한반도 평화공존의 기록들

Part 2

정책 추진 기반 강화 66

제1절 조직개편 70

제2절 북한 정보 대국민 서비스 제공 73
1. 북한정보포털 운영 73
2. 북한자료센터 운영 74
3. (가칭)국립평화통일자료원 건립 76

제3절 법·제도적 기반 구축 78

제4절 남북협력기금 관리·운영 80
1. 남북협력기금 수입 80
2. 남북협력기금 지출 81

Part 3

평화교류협력 86

제1절 남북교류협력 추진 기반 강화 90
1. 교류협력 기반 재건을 위한 정책 전환 90
2. 교류협력 법·제도 개선 91
3.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거버넌스 강화 92

제2절 한반도 평화경제 및 공동성장 미래 준비 94
1. 「한반도 평화경제 미래비전」 제시 94
2. 남북경제협력 사업 재개 추진 95
3. 비무장지대(DMZ) 평화적 이용 97

제3절 인도적 협력 99
1. 인도적 상황 개선에 대한 일관된 입장 견지 99
2. 국제·민간 등 다양한 협력 통로 복원 노력 100
3. 인도적 협력을 위한 기반 조성 101

제4절 평화협력지구 추진 104
1. 평화경제특구 조성 추진 104
2. 개성공단 기업 지원 및 소통 강화 106

Part 4 **사회문화협력** 108

제1절 남북사회문화협력 추진 기반 강화 112
1. 『겨레말큰사전』 편찬 사업 112
2. 개성 만월대 발굴 사업 113
3. 종교 교류협력 네트워크 활성화 115
4. 기타 민간교류 추진 116

제2절 이산가족 문제 해결 노력 118
1. 이산가족 현황 118
2. 이산가족 교류 기반 구축 및 공감대 확산 119
3. 남북 간 인도적 사안 처리 124

제3절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 해결 노력 125
1. 현황 125
2. 문제 해결 노력 126
3. 국립6.25전쟁납북자기념관 운영 128

제4절 남북인권협력 추진 130
1. 남북인권협력 정책 수립·추진 130
2. 북한인권 실태 조사·기록 135

2025 한반도 평화공존의 기록들

Part 5 **남북대화** 136

제1절 남북대화 재개 노력 140
1. 남북회담 전담 조직 복원 140
2. 남북 연락채널 정상화 노력 141
3. 남북 합의사항 단계적 이행 준비 체계 마련 142
4. 남북대화 대국민 관심 제고 143

제2절 남북회담 역량 강화 147
1. 회담 전문성 제고 및 전문가·유관기관 네트워크 강화 147
2. 남북대화 재개 대비 모의훈련 실시 148

Part 6 **북향민 정착지원** 150

제1절 북향민 사회적응교육 156
1. 사회적응교육 프로그램 개편·운영 156
2. 건강 증진 및 정서 안정 162
3. 화천 분소(제2하나원) 운영 166
4. 북향민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 확산 169

제2절 북향민 자립·자활 기반 조성 171
1. 교육 지원 171
2. 일자리 지원 177

제3절 북향민 위기가구 지원 및 지역적응센터 역량 강화 184
1. 북향민에 특화된 위기관리시스템 운영 184
2. 북향민 지역적응센터 역량 강화 189

제4절 북향민 인식 개선 및 남북통합문화 조성 191
1. 제2회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행사 개최 191
2. 북향민에 대한 인식 개선 192
3. 남북통합문화센터 운영 193

Part 7

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 200

제1절 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 기반 확충 204
1. 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 방향 정립 204
2. 통일교육 콘텐츠의 개발과 보급 206
3. 통일교육과정 운영 210
4. 제13회 통일교육주간 운영 216
5. 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 연구센터 활동 강화 218

제2절 미래세대 통일교육 활성화 220
1. 참여·체험형 청소년 통일교육 강화 220
2. 학교 통일교육 모범사례 확산 및 교원 전문성 향상 221
3. 대학 통일교육 활성화 222
4. 2030세대 통일교육 활성화 224

제3절 사회 통일교육 내실화 225
1. 지역통일교육센터를 통한 통일교육 실시 225
2. 통일교육위원 활동 지원 228
3. 지역 통일관 운영 활성화 230
4. 공공부문 통일교육 지원 232

제4절 한반도통일미래센터 운영 234
1. 초·중·고 학생 대상 청소년 평화통일체험연수 확대 노력 235
2. 평화통일체험연수 대상 다양화 236
3. 계기별 특별행사 기획·추진 237
4. 첨단기술 활용 평화통일미래 체험공간 구현 238

2025 한반도 평화공존의 기록들

부록

APPENDIX 240

Ⅰ. 남북관계 주요 일지 242

Ⅱ. 남북관계 관련 주요 통계 254
1. 남북 왕래 인원 현황 254
2. 남북교역액 현황 255
3. 인도적 협력 현황 256
4. 개성공단사업 현황 257
5. 이산가족 현황 258
6.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현황 261
7. 남북회담 추진 현황 262
8. 북향민 정착지원 현황 263
9. 통일교육 및 연수 현황 272

Ⅲ. 남북협력기금 관련 통계 274
1. 기금 조성 실적 274
2. 기금 사용 실적 276

Ⅳ. 통일부 국정과제 현황 278

찾아보기(INDEX) 280

01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

제1절 정책 추진 환경

제2절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 추진

제3절 평화·통일 국민 공감대 확산

제4절 국제사회와의 협력

2025 한반도 평화공존의 기록들





UNIFICATION WHITE PAPER

제1장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

2025년은 남북관계 단절이 장기화되고, 미중 전략경쟁 심화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지속 등으로 대외환경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한반도 정세의 불확실성이 확대되었다. 북한은 남북 간 '적대적 두 국가관계' 기조를 유지하며 일체의 접촉을 차단하는 동시에, 핵·미사일 능력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였다. 이러한 상황은 남북 간 대화 재개를 어렵게 만들었으며, 한반도 안보와 일상의 평화에도 영향을 미쳤다.

6월 4일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적대와 대결의 남북관계를 화해와 협력의 관계로 재정립하는 것을 한반도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남북이 평화롭게 공존하고 함께 성장하는 한반도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담은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을 정립하였다.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은 남북 간 평화공존 제도화, 한반도 공동성장 기반 구축, 전쟁과 핵 없는 한반도 실현을 3대 목표로 제시하였다. 이와 함께, 정부는 남북 간 대화의 물꼬를 트기 위한 여건 조성에 힘썼다. 이를 위해,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회복을 위한 조치를 선제적·단계적으로 추진하였다. 정부는 대북 전단 살포 중단 요청(6.9.), 대북 확성기 방송 중지(6.11.) 및 철거(8.4.~5.) 등을 통해 접경지역의 긴장 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이에 북한도 대남 소음 방송을 중단하는 등 일부 호응하였다. 또한, 정부는 비무장지대 내 백마고지 일대 유해 발굴을 재개(10.15.)하고, 군사분계선 일대 우발적 충돌 방지를 위한 군사회담을 제안(11.17.)하는 등 군사적 신뢰 구축을 위한 노력도 지속하였다.

2025년은 광복 80주년이 되는 해였다. 정부는 국민이 광복 80주년의 의미를 되새기고 일상 속에서 평화·통일을 생각하며 체험할 수 있도록 통하나봄, 2025 평화통일마라톤, 찾아가는 북(北)스토리 토크콘서트 등 다양한 통일문화행사를 개최하였다. 또한, 기존의 대중음악 중심의 공모전을 숏폼, 웹툰, 디자인, 표어·슬로건, AI 활용 콘텐츠 등 디지털 콘텐츠 공모전으로 확대하여 젊은 세대를 포함한 국민의 참여를 높이고자 하였다. 통일방송(UniTV)은 참여·소통·통합을 지향하는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여 상시 송출함으로써 평화·통일 공감대 확산에 노력하였다. 이와 함께, 지역 차원에서도 한반도 평화공존에 대한 공감대 확산 노력을 지속하였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지역 주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통일업무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순차적으로 권역별 통일+센터를 설치하였다. 2025년 경기도 의정부시에 경기권 통일+센터를 개관하고, 충청남도 홍성군에 충청권 통일+센터를 준공하였다.

아울러, 정부는 한반도 평화공존 비전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감대를 확산하고 미국, 중국, 일본, 유럽연합(EU), 아세안 등 주요 국가들과 한반도 정책 협력을 강화하였다. 8월과 10월 두 차례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김정은 위원장과의 만남을 요청하며 '피스메이커(peacemaker)-페이스메이커(pacemaker)'의 역할 분담을 제안하는 등 한반도 문제와 관련하여 한미 협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통일부장관은 독일과 벨기에를 방문(9.28.~10.4.)하여 '제35회 독일 통일의 날' 기념행사와 「2025 국제 한반도 포럼(GKF: Global Korea Forum)」 독일 토론회에 참석하였다. 통일부장관은 독일과 유럽연합(EU) 주요 인사들과 만나 우리 정부의 한반도 정책에 대한 지지와 협조를 요청하였다. 이와 함께, 정부는 민간이 다양하게 참여하는 평화·통일 공공외교 활동도 확대하였다. 특히, 통일부의 대표적인 1.5트랙 국제회의인 「국제 한반도 포럼(GKF)」을 확대·개최하여 국제사회에 '한반도의 평화공존과 공동성장' 비전을 확산하고자 하였다.

제1절

정책 추진 환경

북한은 2019년 제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2020년 코로나19가 확산되자 국경 지역을 봉쇄하면서 남북관계를 사실상 전면 단절해 왔다. 특히, 2023년 12월 개최된 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 전원회의에서는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관계'이자 '전쟁 중인 두 교전국 관계'로 규정하였고, 2024년 1월 김정은 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을 통해 이를 재차 강조하였다.

2025년에도 북한은 이러한 대남 인식을 유지하면서, 남북 간 모든 공식·비공식 접촉을 차단하는 기조를 이어갔다. 더불어, 국제기구의 인도적 협력 제안에 대해서도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군사 분야에서는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와 재래식 전력 강화를 병행하였다. 10월에는 무장장비전시회 '국방발전-2025'(10.4.)를 통해 극초음속 미사일 화성-11마를 최초로 공개하였고, 노동당 창건 80주년 열병식(10.10.)에서는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화성-20형도 공개하였다. 이어 12월에는 소위 8,700톤급이라고 주장하는 핵동력 전략유도탄잠수함 건조사업 현장을 공개하며 무력 과시 행보를 이어갔다. 이와 함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축적된 경험을 토대로 무인기와 드론 등 현대전과 관련된 첨단 무기체계 개발도 지속하였다.

국제적으로는 미중 간 전략적 경쟁이 지속되는 가운데, 2022년 2월부터 시작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와 중동 지역 분쟁 격화가 맞물리며 국제환경의 불확실성은 더욱 커졌다. 이러한 지정학적 배경 속에서 북한은 러시아와의 군사적 밀착을 강화하였다. 2023년 9월 북러 정상회담을 개최하였고, 2024년 6월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에 이어 같은 해 10월에 대규모 전투 병력을 러시아에 파병하였다. 나아가 2025년 4월에는 북한이 러시아에 대한 병력 파견 사실을 공식화하고, 이후 관련 활동을 북한 매체에서 공개적으로 보도하였다.

북한은 중국 및 러시아와의 고위급 교류를 이어가는 등 대외활동도 병행하였다. 9월 김정은 위원장은 중국에서 개최된 중국 전승절 8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하여 북러 정상회담(9.3.)과 북중 정상회담(9.4.)을 연이어 개최하는 등 대외 행보를 확대하였다. 이러한 움직임은 북한이 북러관계 심화와 북중관계 발전을 중심으로 대외관계 노선을 강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북한 내부적으로는 2026년 초 제9차 당대회를 앞두고 대남·대미 전략 노선에 대한 숙고가 진행되었다. 동시에 '지방발전 20×10 정책'과 '보건혁명 원년 선포' 등을 통해 주민 생활 여건 개선을 주요 정책 목표로 제시하면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북한은 핵보유국 지위를 기정사실화하려는 입장을 고수하며, '비핵화' 요구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는 태도를 지속하였다. 대외적으로는 미국의 대북정책 전환을 요구하면서도, 북미대화 가능성을 열어두는 모습을 보였다. 김정은 위원장은 9월 21일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 "비핵화라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도 "우리와의 진정한 평화공존을 바란다면 미국과 마주 서지 못할 이유가 없다"라고 언급하였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10월 29일부터 30일까지 방한하여 한미 정상회담과 미중 정상회담을 개최하였다. 한국을 방문하기 직전인 10월 27일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과 잘 지내고 있고, 그가 만나기를 원한다면 나는 한국에 있을 것"이라며 김정은 위원장과의 회동을 제안하였으나, 북한은 이에 대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이처럼 유례없이 장기간 지속된 대화 단절과 긴장 고조의 상황에서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남북관계를 적대와 대결에서 화해와 협력으로 전환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를 위해 북한의 체제를 존중하고, 흡수통일을 추구하지 않으며, 적대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3원칙을 천명하고, 남북 간 평화공존과 한반도 공동성장을 추구하는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을 수립하였다. 또한, 남북 간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고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를 선제적으로 추진하였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여러 계기에 김정은 위원장과의 대화 의사를 밝히고 한반도에서의 전쟁 종식 의지를 표명하였다. 이에 정부는 한반도 평화를 진전시키기 위해 북미대화 성사를 지원하는 한편, 남북대화 재개 등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정부의 이러한 노력에 북한이 아직 호응하지 않고 있으나, 인내심을 가지고 남북관계 단절의 벽에 "바늘구멍을 뚫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제2절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 추진

1. 이재명 정부의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

(1) 한반도 평화공존을 위한 새로운 정책 방향 제시

이재명 정부는 한반도에서의 평화공존을 추구한다. 북한이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관계'라고 주장하면서, 핵과 미사일 능력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함에 따라, 한반도의 평화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이와 관련하여,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아무리 비싼 평화도 전쟁보다 낫다.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가 가장 확실한 안보"라고 천명하였다.

"아무리 비싼 평화도 전쟁보다 낫습니다.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낫고,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가 가장 확실한 안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사(6.4.)



이재명 정부는 평화가 국민의 안전과 행복, 번영의 토대라고 보고 남북관계를 '적대적 관계'에서 '평화적 관계'로 전환하는 데 중점을 둔 한반도 정책을 추진하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6.15 남북공동선언」 25주년 계기 SNS 메시지(6.15.)를 통해 “평화가 흔들리면 경제와 안보, 국민의 일상까지도 위협받는다”라며, “소모적 적대행위를 멈추고, 대화와 협력을 재개하겠다”라고 밝혔다.

“평화가 흔들리면 경제와 안보는 물론 국민의 일상까지도 위협받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배웠습니다. …
이재명 정부는 소모적 적대행위를 멈추고 대화와 협력을 재개하겠습니다. 군사적 긴장 완화와 평화로운 분위기 조성을 위해, 중단된 남북대화 채널부터 신속히 복구해 나가겠습니다.”

「6.15 남북공동선언」 25주년 계기 이재명 대통령 SNS 메시지(6.15.)



또한,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현재의 북한 체제를 존중하고, 흡수통일을 추구하지 않으며, 일체의 적대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한반도 평화공존의 3원칙을 발표하였다. 먼저, 상대에 대한 존중이 남북관계를 화해와 협력의 관계로 재정립하기 위한 필수 전제라고 보고, 정치적 실체로서 북한을 인정하고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통일을 위한 상대방으로서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아울러, 한반도의 통일은 남북 간 합의와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단계적·점진적으로 이루어 나가야 하며, 흡수통일을 추구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밝혔다. 한반도에서 불필요한 긴장을 초래할 수 있는 일체의 적대행위를 하지 않음으로써 남북 간 적대와 대결이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였다.

“현재 북측의 체제를 존중하고, 어떠한 형태의 흡수통일도 추구하지 않을 것이며 일체의 적대행위를 할 뜻도 없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이재명 대통령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사(8.15.)



“한 번 깨진 신뢰가 금세 회복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신뢰는 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행동과 실천에서 나오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엉킨 실타래를 풀듯 인내심을 갖고 임하겠습니다. 「9.19 군사합의」 정신 복원을 위해, 대화와 협력을 통한 한반도에서의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해, 대통령으로서 정부가 해야 할 일을 국민과 함께 차근차근 해나가겠습니다.”

「9.19 평양공동선언」 7주년 계기 이재명 대통령 SNS 메시지(9.19.)



“근본적으로는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평화가 흔들리면 민주주의도 경제도 국민의 안전도 위협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남북 간 신뢰 회복과 대화 협력 기반 조성을 위해 담대하고 대승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 관련 국회 시정연설(11.4.)



“위대한 대한국민이 함께 만든 국민주권 정부는 서로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대결과 적대에서 벗어나 남과 북이 평화롭게 공존하며 공동성장하는 미래를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제22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출범회의 의장 연설(12.2.)



정부는 주요 계기마다 ‘한반도 평화공존’ 기조를 지속적으로 표명하였다. 정부는 「9.19 평양공동선언」 7주년 기념식(9.19.), 제80차 유엔총회 기조연설(9.23.),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10.31.~11.1.), 2026년도 예산안 관련 국회 시정연설(11.4.), 제22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출범회의 의장 연설(12.2.) 등을 통해 한반도 평화공존 기조를 확인하고, 화해와 협력의 남북관계를 정립하기 위한 정책 구상을 제시하였다.

이와 함께, 통일부는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관계' 주장에 대하여 '통일을 지향하는 평화적 두 국가관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강조하였다. '통일을 지향하는 평화적 두 국가관계'는 남북 간 긴장 완화를 통해 북한이 느끼는 불신과 위협을 완화하고, '적대'를 '평화'로 전환함으로써 한반도 평화공존을 제도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통일부장관은 「2025 국제 한반도 포럼(GKF: Global Korea Forum)」 개회사(9.18.), 독일 통일 35주년 기념식(10.4.)을 비롯한 해외 주요 인사 면담과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통일을 지향하는 평화적 두 국가관계'의 비전과 구상을 제시하였다. 이 과정에서 남북 간 평화공존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시키고자 하였다.

또한, 통일부가 한국갤럽에 의뢰하여 2025년 12월 2일부터 8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자(전국 성인 1,005명)의 69.9%가 '통일 지향의 평화적 두 국가관계'에 찬성한다고 응답하였다.

한편, 정부는 남북대화가 장기간 단절된 상황에서 북미대화 재개가 남북관계 개선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북미대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두 차례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미국의 역할을 요청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피스메이커(peacemaker)' 역할을 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페이스메이커(pacemaker)'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노력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10.31.~11.1.)에서 한반도 문제의 해결을 위해 북한과 대화하겠다는 의지를 여러 차례 표명하였다.





통일부장관, 한반도 평화전략 자문단 회의 개최(12.3.)

아울러, 정부는 한반도 정세 변화에 맞춰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전략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발전시켜 왔다. 이를 위해, 통일부장관은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 김연철 한반도평화포럼 이사장 등으로 '한반도 평화전략 자문단'을 구성하고, 12월 3일 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통일부는 12월 19일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을 바탕으로, 새로운 한반도 정책 방향에 맞추어 2026년을 '한반도 평화공존의 원년'으로 만들기 위한 업무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하였다. 통일부는 2026년 5대 중점 추진 과제로 북미대화·남북대화 재개와 평화공존 제도화, 새로운 교류협력을 위한 창의적 접근 모색, 접경지역 평화 구축과 민생경제 활성화, 분단고통 해소와 인도적 현안 해결, 평화·통일 공감대 형성을 위한 경청과 국민 참여 확대 방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남북관계 단절의 벽에 "바늘구멍을 뚫기" 위해 '페이스메이커'로서 북미대화 재개를 추동하기 위한 전략과 남북대화 재개 추진, 평화공존 제도화 준비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보고하였다.





2026년도 업무계획 보고(12.19.)

(2) 이재명 정부의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의 의의 및 내용

이재명 정부의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은 남북 간 적대와 대결을 종식하고, 남북이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를 만들어 평화롭게 공존하며, 함께 성장하는 새로운 한반도를 만들기 위한 구상이다.

첫째,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은 안중근 의사의 '동양평화론'에 철학적 뿌리를 두고 있다. 안중근 의사는 뤼순 감옥에서 집필한 『동양평화론』에서 한반도를 넘어 동북아 평화 공동체의 청사진을 제시하였다. 『동양평화론』은 상호 존중에 기초한 평화적 관계의 형성과 공동 번영을 위한 연대를 추구하였으며 공동 은행 설립과 공용 화폐 발행 등 동북아의 평화공존을 위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까지 제시한 선구적인 구상이었다.

둘째,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은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채택 이래 역대 정부가 35년 동안 추진해 온 평화공존 정책을 계승하는 것이다. 「남북기본합의서」는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존중하고, 내부 문제에 간섭하지 않으며, 비방·중상을 하지 않고, 상대방을 파괴·전복하려는 일체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남북 간 평화공존의 기본 틀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남북 간 평화공존의 원칙과 규범은 1994년 「민족공동체통일방안」,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 2007년 「10.4선언」, 2018년 「판문점 선언」 및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계승·발전되어 왔다. 특히, 정부의 공식 통일방안인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화해협력 단계, 남북연합 단계, 통일국가의 완성이라는 점진적·단계적 통일경로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 중 남북연합 단계는 통일 이전 남북 간 평화공존을 제도화하는 단계라는 의미를 지닌다.

남북 간 평화공존을 위한 노력은 국제적 합의로도 뒷받침되었다. 2005년 「9.19 공동성명」에서 6자회담 참가국인 남·북·미·중·일·러는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공존을 위해 북미관계 정상화, 동북아의 항구적 평화·안정을 위한 공동 노력 등에 합의하였다. 이는 주변 4강을 상대로 한반도 평화에 대한 국제적 합의를 이끌어 낸 중요한 성과로, 우리가 주도해서 불안정한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로 나아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는 의미가 있다.

셋째, 이재명 정부의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은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 그리고 공동성장에 대한 국민적 염원을 실현하려는 것이다. 이는 전쟁의 참화를 겪은 비극적 상처를 극복하고, 다 같이 평화롭게 잘 살자는 온 민족의 열망을 담고 있다. 나아가 남북이 상호협력과 공동성장을 통해 다 함께 번영하는 미래를 열어가고자 하는 국민들의 소망을 반영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의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은 목표, 추진 원칙, 추진 전략, 중점 추진 과제의 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남북 간 평화공존 제도화, 한반도 공동성장 기반 구축, 전쟁과 핵 없는 한반도 실현을 3대 목표로 제시하였다. 첫 번째 목표는 '남북 간 평화공존 제도화'이다. 남북이 사실상의 두 국가로 존재하는 현실을 고려하여, 남북관계를 통일을 지향하면서 평화롭게 공존하는 관계로 만들어 나가고자 한다. 또한,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 조치의 일관된 추진과 상호 신뢰로 한반도 리스크를 해소하고, 남북 간 대화를 통해 지속 가능한 평화공존 체제를 확립하고자 한다.

두 번째 목표는 '한반도 공동성장 기반 구축'이다. 한반도의 평화를 바탕으로 남과 북, 그리고 국제사회가 함께 번영할 수 있는 공동성장 전략을 추진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평화가 경제협력을 촉진하고, 경제협력이 다시 평화를 공고히 하는 '평화경제'의 선순환 구조 구축과 함께, 남북 간 공동의 이익을 창출하는 호혜적 교류협력을 추진할 것이다. 나아가 유관국과의 다자협력을 통해 한반도를 상생의 공간으로 전환하고, 남과 북이 함께 성장하는 경제공동체를 실현해 나가고자 한다.

세 번째 목표는 '전쟁과 핵 없는 한반도 실현'이다. 단계적·실용적 접근을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핵 없는 한반도 실현이 서로 선순환을 이루는 구조를 만들고, 이를 통해 한반도에서 전쟁 위험을 근본적으로 제거하고자 한다. 또한, 남북 간 실질적 긴장 완화와 유관국 협력을 통해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고,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하는 창의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고자 한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이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천명한 이후 일관되게 견지해 온 북한 체제 존중, 흡수통일 불추구, 적대행위 불추진을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의 3원칙으로 재차 밝혔다.

정부는 한반도 평화공존의 3원칙을 바탕으로 앞서 제시한 세 가지 정책 목표를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두 가지 추진 전략을 제시하였다. 첫 번째 전략은 '교류-관계 정상화-비핵화의 포괄적 접근'이다. 남북 간 교류협력 재개, 북미관계 정상화를 비롯한 북한과 국제사회의 관계 개선 노력에 대한 지지, 핵 없는 한반도 실현을 위한 단계

적·실용적 접근을 포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한반도 평화공존과 공동성장의 새 시대를 열어 나가고자 한다. 두 번째 전략은 '국민·국제사회와 함께하는 열린 정책 추구'이다. 이재명 정부는 국민주권정부로서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에 대한 국민 동의와 참여를 확대하고, 국제사회와 소통하며 협력을 강화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한반도 평화공존이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한다.

정부는 한반도 평화공존 및 공동성장의 새 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구체적 실행 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6가지 중점 추진 과제를 제시하였다.

첫째, 화해·협력의 남북관계 재정립 및 평화공존 제도화이다. 우선, 남북 간 연락채널을 복원하고 남북대화를 재개할 것이다. 이와 함께, 「9.19 군사합의」의 복원 등을 통해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신뢰를 쌓아갈 것이다. 나아가 남북대화를 통해 (가칭)「남북기본협정」을 체결하는 등 지속 가능한 한반도 평화공존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자 한다.

둘째, 북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 진전 추구이다. 이를 위해 정전체제 해소와 핵 없는 한반도를 위해 남북·북미 간 대화 여건을 조성하고, 단계적·실용적 접근을 통해 핵문제의 실질적 진전을 이루고자 한다. 이와 함께,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노력도 병행하고자 한다.

셋째, 국민이 공감하는 호혜적 남북교류협력 추진이다. 먼저, 관련 제도를 개선하여 호혜적·안정적인 남북교류협력을 뒷받침하고, 체육·종교·역사·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교류 활성화를 지원할 것이다. 아울러, 기후재난 등 초국경적 위기에 대한 공동 대응과 인도적 상황 개선을 위해 협력해 나가고자 한다.

넷째, 분단고통 해소와 인도적 문제 해결이다. 우선, 남북 간 대화 협력을 통해 이산가족·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등 인도적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도모할 것이다. 또한, 상호 존중 원칙을 견지하면서 한반도 평화공존과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남북 인권협력 정책을 추진할 것이다. 아울러, 북한이탈주민(이하 '북향민')의 정착지원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주민과의 사회통합을 촉진하고자 한다.

다섯째, 한반도 평화경제와 공동성장을 위한 미래준비다. 정부는 평화경제를 구현하기 위한 남북 경협사업의 발전적 정상화를 모색하고, 남북의 여건과 수요 등을 반

영해 한반도 평화경제와 공동성장의 청사진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접경지역 내 평화경제특구에 대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비무장지대(DMZ)는 국제 생태·평화관광 협력지구로 개발해 나가고자 한다.

여섯째, 평화·통일 공감대 형성을 위한 국민참여와 국제협력 활성화이다. 정부는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에 대한 국민의 직접 참여를 확대하고, 미국·중국 등 주요국

이재명 정부의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 추진 체계도

목표	남북 간 평화공존 제도화	한반도 공동성장 기반 구축	전쟁과 핵 없는 한반도 실현
추진 원칙	북한 체제 존중	흡수통일 불추구	적대행위 불추진
추진 전략	교류·관계정상화·비핵화의 포괄적 접근	국민·국제사회와 함께하는 열린 정책 추구	
중점 추진 과제	① 화해·협력의 남북관계 재정립 및 평화공존 제도화 ② 북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 진전 추구 ③ 국민이 공감하는 호혜적 남북 교류협력 추진 ④ 분단고통 해소와 인도적 문제 해결 ⑤ 한반도 평화경제 및 공동성장의 미래 준비 ⑥ 평화·통일 공감대를 위한 국민참여 및 국제협력 활성화		

과의 협력을 내실화함으로써 한반도 평화·통일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감대를 넓혀나갈 것이다. 또한, 통일교육을 평화공존과 민주시민 의식을 중심으로 하는 참여형 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으로 전환·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이와 함께, 『노동신문』 개방에 이어 북한방송 등 북한 자료의 공개 범위를 넓힘으로써 주권자인 국민의 알권리도 보장하고자 한다.

2.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

남북 간 강 대 강 대결 심화와 군사적 긴장 고조 속에서 대남 오물·쓰레기 풍선 살포와 소음 방송 등은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일상의 평화를 위협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평화공존과 공동성장을 지향하며,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접경지역의 국민 안전을 위해 노력하였다.

먼저, 정부는 남북 간 긴장 완화와 신뢰 회복을 위한 선제적인 조치를 실행하였다. 새 정부 출범 직후인 6월 9일 정부는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대북 전단 살포 중지를 요청했으며, 통일부장관과 차관도 해당 단체와 꾸준히 소통하여 살포 중단 합의를 이끌어 내었다. 그 결과 민간단체 대북 전단 살포는 6월 14일 이후 확인된 바 없다.

대북 전단 관련 사전 예방 및 사후 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국방부·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경찰청·지방자치단체 등이 참여하는 유관기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기관별 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공유하는 등 협업 체계를 강화하였다. 아울러,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의를 거쳐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법률 개정을 지원하였다. 국토교통부 소관 「항공안전법」 개정안은 12월 2일, 경찰청 소관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은 12월 14일 각각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항공안전법」이 개정됨으로써 전단 살포용 무인자유기구를 더 이상 운용할 수 없게 되었으며,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으로 접경지역에서 「항공안전법」 위반행위 등을 제지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마련되었다.

남북 간 군사적 대치 상황을 완화하고 상호 신뢰 회복의 물꼬를 트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국방부를 포함한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6월 11일 대북 확성기 방송을 1년 만에 중지하였다. 대북 확성기 방송 중지는 남북관계 신뢰회복과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의지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국민께 약속드린 바를 실천하는 것이며, 소음 방송으로 피해를 겪고 있는 접경지역 주민의 고통을 덜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였다. 우리의 대북 방송 중지에 대해 북한도 호응하여 대남 소음 방송을 중지하였다. 이후 정부는 대북 확성기 방송 중지 조치의 일환으로 8월 4일부터 5일까지 확성기를 철거하여, 그간 소음으로 고통받던 접경지역 주민들의 평화로운 일상과 안전을 회복할 수 있었다. 이와 더불어, 상호 신뢰 회복을 촉진하기 위해 대북 라디오 방송 등 송출도 중지하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신뢰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만들어진다"라고 강조하며, "북한과 지금 당장 신뢰 회복과 대화 복원부터 시작하는 것이 순서라는 생각으로 취임 직후부터 전단 살포 중지,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정부는 실질적 긴장 완화와 신뢰 회복을 위한 조치를 일관되게 취해 나갈 것을 강조하였고, 북한에도 "일체의 적대 행위를 할 뜻이 없음"을 명확히 밝히며, 신뢰를 회복하고 단절된 대화를 복원하는 길에 북한도 화답하기를 촉구하였다.

군사회담 재개, 「9.19 군사합의」 복원,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운영 등 군사적 신뢰 구축 진전을 위한 노력도 지속하였다.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 메시지를 통해 「9.19 군사합의」의 선제적·단계적 복원에 대한 우리 정부의 의지를 표명하였다. 「9.19 평양공동선언」 7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은 「9.19 군사합의」 정신 복원 및 대화와 협력을 통한 한반도에서의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해 정부가 해야 할 일을 국민과 함께 차근차근 해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이후 정부는 남북 간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2022년에 중단됐던 강원도 철원 백마고지 일대 유해 발굴을 10월 15일부터 11월 28일까지 실시하였다. 이번 유해 발굴을 통해 약 40일의 기간 동안 총 25구의 유해와 1,962점의 전사자 유품을 수습하였다. 이는 6.25전쟁 전사자 유해를 가족과 조국의 품으로 돌려보내 드리는 노력이며,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로 만들기 위한 실질적 조치였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은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10.31.~11.1.)에서도 "대한민국 정부는 남북 간 군사적 긴

장 완화와 신뢰 회복을 위한 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해 왔다"며, "앞으로도 평화를 위한 대승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임을 강조하고, 국제사회에 "한반도의 평화공존이 현실이 되는 여정에 함께 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더불어, 남북 간 군사분계선 인식 차이에 따른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고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11월 17일 북한에 비무장지대 군사분계선 기준선 설정을 위한 군사회담 개최를 제안하였다. 이는 이재명 정부 첫 남북회담 제안으로, 한반도 긴장을 완화하고 남북대화 재개의 길을 열기 위한 주도적인 노력이었다.

3. '전쟁과 핵 없는 한반도' 실현을 위한 노력

정부는 '전쟁과 핵 없는 한반도'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우선, 이재명 대통령은 '핵 없는 한반도' 비전을 제시하였다.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평화로운 한반도는 '핵 없는 한반도'이며, 주변국과 우호적 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한반도"라고 규정하였다. 이어 현지 시각 기준 9월 23일 제80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한반도 핵 문제에 대해 중단-축소-폐기로 이어지는 실용적, 단계적 해법을 제시하였다.

"비핵화는 엄중한 과제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렵다는 냉철한
인식의 기초 위에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 되었습니다.
핵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 '중단'부터 시작하여,
'축소'의 과정을 거쳐 '폐기'에 도달하는
실용적, 단계적 해법에 우리 국제사회가
지혜를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대통령 제80차 유엔총회 기조연설(9.23.)



이어 12월 2일 제22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출범회의 연설에서도 한반도에서 전쟁 상태를 종식하고, 핵 없는 한반도를 추구하며 공고한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임을 거듭 강조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통일부는 2026년도 업무계획에서 '페이스메이커'로서 북미대화 재개를 촉진하기 위해 '한반도 평화 특사' 임명과 미국의 대북특별대표 지명 필요성을 제기하는 등 한미공조를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평화공존의 제도화를 위해 한국전쟁 종식에 대한 정치적 의지를 반영한 「종전선언」을 추진하고, 이를 바탕으로 평화협정 체결 등 평화체제 논의를 추진하는 방안을 12월 19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였다.

정부는 북핵문제를 해결하고 한반도의 평화체제를 진전시키기 위해 △정전체제 해소와 '핵 없는 한반도' 실현을 위한 대화 여건 조성 △단계적·실용적 접근을 통한 핵 문제의 실질적 진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병행 추진으로 구체화하였다. 세부적으로는 남북 간 긴장 완화 조치와 한미 간 협의를 바탕으로 남북·북미 간 대화 여건을 조성하고, 북미협상의 진전을 촉진하면서 동시에 한미동맹의 기반 위에서 주변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견인하려고 한다. 북핵 현실을 고려하여 '중단-축소-폐기'로 이어지는 단계적 문제 해결 전략을 마련·이행하고, 단계적 합의·동시 행동을 통해 합의 이행 촉진 및 한반도 평화공존을 위한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강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남북대화와 북미협상의 선순환적 발전을 통해, 평화협정 체결과 핵 위협이 사라진 한반도 실현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협력을 위한 4자·6자 협력 틀의 가동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비전 제시와 정책 구상 구체화에 더하여, '전쟁과 핵 없는 한반도' 실현을 위해 북미대화를 추동하기 위한 한미 간 지속적인 소통도 이어갔다. 이재명 대통령은 8월 26일 한미 정상회담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10.31.~11.1.)에 초청하며 가능하다면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의 만남도 추진해 보자고 권하여 북미대화를 촉진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였다. 이어 10월 29일 한미 정상은 8월 워싱턴에서의 '피스메이커, 페이스메이커' 역할 분담을 계속해서 이어 나가기로 하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반도의 긴장 완화와 핵 없는 한반도 실현에 대한 의지를 설명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의 노력을 평가하면서 2018년 싱

가포르 합의를 토대로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해 필요한 역할을 해나갈 것이며 그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긴밀히 상의해 나갈 것이라고 확인하였다.

4. 접경지역 평화 및 주민 안전 지원

정부는 접경지역의 평화와 주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였다. 6월경 북한 황해북도 평산의 우라늄 정련시설에서 정화되지 않은 방사성 폐수가 예성강을 거쳐 서해로 유입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인천광역시 강화군과 경기도 김포시 등 접경지역 주민과 어업 종사자 사이에서 우려가 확산되었으며, 지역 상권과 어업 활동에도 영향을 미쳤다.

정부는 이러한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통일부·기후에너지환경부·해양수산부·원자력안전위원회 등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회의를 7월 3일 개최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였다. 이어 강화도 북단, 한강·임진강 하구, 인천광역시 연안의 10개 지점에 대해 7월 4일 관계 부처 합동 특별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정부는 일회성 조사에 그치지 않고 주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특별 실태조사 대상 지점 가운데 7개 지점에 대해 부처 합동으로 12월까지 매월 정례 모니터링을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우라늄 및 주요 중금속 5종(카드뮴, 비소, 수은, 납, 6가 크롬) 농도가 평상시 수준이거나 환경기준 및 해양환경기준 미만이거나 일부 항목은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합동 특별 실태조사 해당 지역(7.4.)



접경주민 대상 토론회(11.10.)

이와 함께, 정부는 11월 10일 '접경의 목소리, 평화를 말하다'라는 주제로 파주 민간인 출입통제선 이북 지역 3개 마을 주민과 함께하는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 토론회는 그동안 전단 살포, 확성기 방송, 소음 방송 등으로 인해 고통받아 온 접경지역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접경지역의 평화와 주민 안전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통일부차관은 이 자리에서 평화가 일상이 되고, 남북이 공동으로 발전할 수 있는 평화로운 한반도 시대를 열어 나가야 함을 강조하였고, 북한의 조속한 호응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제3절

평화·통일 국민 공감대 확산

1. 통일문화 확산 노력

정부는 국민이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평화와 통일을 생각하고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통일문화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통일부는 2022년부터 「통하나봄」 행사를 전국에서 추진해 왔으며, 2025년에는 서울과 대전에서 행사를 진행하였다.

서울권에서 개최된 「홍대에서 통하나봄」(5.9.~10.)은 '광복 80주년 기념, 한류문화로 다시 하나되는 우리: 광복에서 통일로'라는 주제로 홍대입구역 광장에서 진행되었다. 행사에서는 광복 80주년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도록 남북 전통 풍물놀이 등을 공연하여 참여자가 남북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체감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특히, 북향민 요리사가 운영한 '한 끼 맛나봄' 프로그램은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통일부 청년인턴, 서울 소재 대학생, 통일부 2030 자문단이 참여하여 6개 부스를 직접 기획·운영하였다.

충청권에서 개최된 「대전에서 통하나봄」(10.18.~19.)은 대전 엑스포시민광장에서





홍대에서 통하나봄(5.9.~10.)

'광복 80년, 대전에서 다시 시작하는 평화'를 주제로 진행되었다. 이번 행사는 국민이 일상에서 평화와 통일의 의미를 생각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문화예술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다. '통하는 미래세대 마당'에서는 어린이를 포함한 모든 참여자들이 대형 벽화와 초크아트를 이용하여 평화롭게 하나 되는 남북화합의 모습을 자유롭게 표현하였다. '평화씨의 가을운동회'에서는 줄넘기, 평화 올려차기, 통하나봄 외치기, 어린이 꿈 놀이터 등 대전 시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체육·놀이 프로그램이 운영되었다.





대전에서 통하나봄(10.18.~19.)

또한, 정부는 파주 임진각 평화누리 일원에서 '광복 80주년, 우리가 만드는 평화'라는 주제로 「2025 평화통일마라톤」을 개최(11.16.)하였다. 이 행사에는 사전 신청을 통해 4,100여 명이 참가하였다. 대회는 임진각 평화누리에서 남북출입사무소까지 달리는 하프(21.0975km) 코스, 광복의 역사적 의미를 담은 8.15km 코스,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5km 코스 등 총 3개 구간에서 진행되었다. 이 중 하프 코스는 일반인이 평소에 가기 어려운 민간인통제구역에서 개최되어 행사의 의미를 더하였다. 참가자들은 남북 접경지역의 자연경관을 체험하며 평화와 통일의 의미를 되새기는





2025 평화통일마라톤(11.16.)

경험을 하였다. 행사장에서는 마라톤뿐만 아니라 평화·통일 체험 부스와 광복 80주년 기념 부스 등 다양한 부대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되었다.

2. 청년세대와 함께하는 평화·통일 공감대 확산 노력

정부는 청년세대의 통일 인식과 북한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찾아가는 北스토리」 토크콘서트를 개최하였다. 행사에서는 청년세대의 관심과 눈높이에 맞게 음악, 영화, 패션, 음식, 스포츠 등 다양한 주제를 선정하고 북향민과 함께 소통하는 참여형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찾아가는 北스토리」는 문화·예술 분야의 청년 패널(북향민 청년 및 남한 청년)과 함께 전국을 순회하며 진행된 토크콘서트 사업이다. 북향민의 생생한 증언을 통해 북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평화·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2030 청년세대를 대상으로 맞춤형으로 기획되었다.

통일부장관과 차관, 2030 청년세대 패널 등과 함께 통일·북한 문제에 대해 직접 설명하는 대국민 현장 소통을 총 17회 실시하였으며, 청년세대를 중심으로 1,600여 명이 참여하였다.



강원 행사(5.15.)



서울 행사(8.12.)



부산 행사(8.29.)

특히, 행사 전후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행사 참여를 통해 북한에 대한 이해와 평화·통일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었다고 응답한 참가자가 각각 92.8%, 87.2%로 통일·북한 문제에 대한 청년층의 높은 관심과 인식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서울을

2025년 「찾아가는 北스토리」 토크콘서트 개최 현황

회차	일시	지역	주제	장소	북향민 청년 패널
1	4.2.	서울	경제	헤이그라운드 성수시작점	-
2	4.29.	인천	음악	인하대 60주년기념관	기타리스트
3	5.15.	강원	영화	원주영상미디어센터	영화감독
4	5.28.	제주	음악	제주대 아라컨벤션홀	기타리스트
5	6.12.	세종	음악	조치원 문화정원	소해금 연주가
6	6.24.	청주	패션	동부창고34동	의상 디자이너
7	7.11.	천안	음식	신불당 아트센터 아트홀	요리사
8	7.18.	대전	음식	아로파 스페이스	요리사
9	8.12.	서울	평화, 미래	코엑스 studio 159	-
10	8.29.	부산	공연	부산사회복지종합센터	배우
11	9.3.	대구	공연	복합문화공간 노리터	배우
12	9.19.	서울	평화, 미래	북쌔즈	-
13	9.26.	울산	공연	울산 CS문화센터	배우
14	10.24.	용인	스포츠	강남대 국제회의실	격투기 선수
15	10.31.	전주	스포츠	JB문화공간	격투기 선수
16	11.13.	광주	음악	아이플렉스 스타트업빌	기타리스트
17	11.20.	순천	음악	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	소해금 연주가

시작으로 인천, 강원, 제주, 세종, 청주, 천안, 대전, 부산, 대구, 울산, 용인, 전주, 광주, 순천까지 전국 15개 도시에서 개최되어 지역사회에 통일인식을 확산하고, 북한 문제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3. 통일정책 국민적 합의 형성

정부는 2024년부터 '통일정책 국민적 합의 형성 사업'을 진행하였다. 2025년에는 일반 국민, 청년, 오피니언 리더로 대상을 세분화하여 총 13회의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먼저 '국민 대상 합의 형성 토론회'는 대상자별·권역별로 의제를 달리하여 영남권·충청권·강원권 지역 주민, 북향민 등 국민 712명을 대상으로 총 8회 개최하였다. 한반도 평화경제, 평화·통일교육, 평화·통일을 위한 사회적 대화 등을 주제로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토론회를 진행하였다. 특히, 제5차 토론회(9.13.)와 제6차 토론회(9.30.)는 각각 인천상륙작전 기념 주간 및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10.31.~11.1.) 성공 개최 기원의 의미를 더해 인천광역시, 경상북도·경주시와 협조하여 개최되었다. 제7차 토론회(11.4.)는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과 협업하여 일선 교사 등이 참여한 가운데 평화·통일교육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토론회로 진행하였다. 제8차 토론회(11.18.)는 사회적 대화 방식으로 진행하였으며 숙의 토론을 통해 남북 간 평화공존 추구와 평화·통일 지향에 대한 공감대 형성에 기여하였다.

'청년 대상 합의 형성 토론회'는 통일미래 세대인 청년층의 평화·통일에 대한 관심과 공감대 확산을 위해 호남권·영남권·경기권 및 서울에서 개최하였다. 권역별로 서로 다른 의제를 중심으로 토론이 이루어졌으며, 제2차 토론회(7.14.)는 '북향민과의 상생과 공존', 제3차 토론회(9.26.)는 '광복 80주년과 청년의 역할'을 주제로 사회적 대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특히, 제4차 토론회(11.15.)는 1~3차 토론회의 경험을 바탕으로 청년들이 평화·통일 퍼실리테이터로 활동할 수 있도록 역량 강화 프로그램으로 진행하였다. 행사에는 총 216명의 청년이 참여하였으며, 다양한 관점에서 통일 문제를 논의함으로써 상호 이해를 높이고 청년의 평화·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오피니언 리더 대상 합의 형성 토론회'는 통일·북한, 국제관계, 분야별 전문가 등 오피니언 리더 30명이 참가한 가운데 서울에서 개최(9.22.)하였다. 토론회에서는 참가자 간 합의로 한반도 평화경제 실현을 위해 미국 및 국제사회에 제안할 북한 개발안을 도출하였다.



제2차 청년 대상 합의 형성 토론회(7.14.)


오피니언 리더 대상 합의 형성 토론회(9.22.)



제3차 청년 대상 합의 형성 토론회(9.26.)

4. 지역별 통일⁺센터 설치 및 운영

정부는 한반도 정책에 대한 지역 주민의 관심을 높이고, 통일정책 관련 서비스를 지역에서 종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지역별 통일⁺센터 설치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2018년부터 시범센터로 운영되던 인천 통일⁺센터를 2025년 1월부터 인천광역시로 이관하여 정규센터로 재개관하였다. 또한, 정부는 2023년도에 호남권(목포) 통일⁺센터, 2024년도에 강원권(춘천) 통일⁺센터를 개관하였고, 2025년 9월에는 경기권(의정부) 통일⁺센터를 새로 개관하였다.

9월 15일 진행된 경기권 통일⁺센터 개관식에는 통일부장관, 경기도지사, 의정부시장, 국회의원 등 50여 명이 참석하였다. 개관식에 앞서 통일부장관과 경기도지사는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경기권 통일⁺센터를 중심으로 지역 내 평화통일 기반을 조성하고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하였다. 한편, 정부는 충청남도와 협력하여 홍성 내포 신도시에 충청권 통일⁺센터 건물을 준공하였고 2026년 3월 개관을 목표로 준비 작업을 진행하였다.


경기권(의정부) 통일⁺센터 전경



경기권(의정부) 통일⁺센터 개관식(9.15.)

정부는 통일⁺센터가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강화하였다. 우선, 2025년 1월에 통일⁺센터 운영 매뉴얼을 각 센터에 배포하였다. 또한, 12월에는 「통일플러스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통일부훈령 제728호)을 개정하여 정부 조직개편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고, 각 통일⁺센터와 지역 내 통일 관련 기관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지역통일협의회 구성·운영 조항도 신설하였다.

아울러, 중앙-지방정부 간 거버넌스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12월 18일 통일⁺센터 총괄운영위원회를 발족하였다. 총괄운영위원회에서는 연간 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정책 추진 방향을 공유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 방향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통일⁺센터는 센터별로 지역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였으며, 그 결과 센터별 프로그램 참여자 수가 2024년 1만 6,619명에서 2025년 4만 6,927명으로 증가하였다.

인천 통일⁺센터는 인천광역시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명사초청 특강, 남북 작가 특별전시회, 청년서포터즈 운영, 청년통일대화 등 참여·소통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또한, 제2회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행사, 남북청소년 통일공감 축구교실, '남북생애 나눔대화', 이산가족의 날 홍보·전시 등 남북한 주민 간 소통과 공감을 위한 프로그램도 실시하였다. 이 외에도, 인천 통일⁺센터는 남북음식문화체험, 인천광역시 공무원 대상 통일공감 교육, 가상현실(VR) 통일문화 체험, '인천에서 통일을 만나다' 공방 체험, 유치원생 대상 '통일아 놀자', 초·중·고 '찾아가는 통일문화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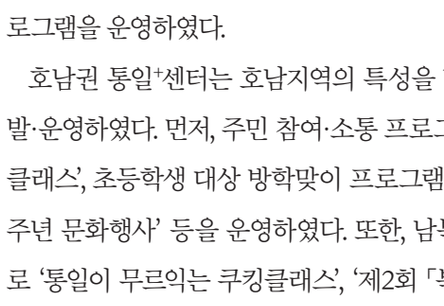
(인천센터) 청년 통일 아이디어 톡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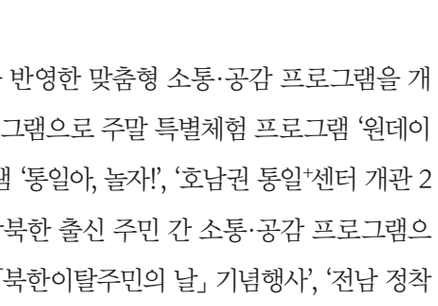
(인천센터) 남북청소년 통일공감 축구교실

호남권 통일⁺센터는 호남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소통·공감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였다. 먼저, 주민 참여·소통 프로그램으로 주말 특별체험 프로그램 '원데이 클래스', 초등학생 대상 방학맞이 프로그램 '통일아, 놀자!', '호남권 통일⁺센터 개관 2주년 문화행사' 등을 운영하였다. 또한, 남북한 출신 주민 간 소통·공감 프로그램으로 '통일이 무르익는 쿠킹클래스', '제2회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행사', '전남 정착 사진 공모전', '이산가족의 날 기념 고향방문행사' 등을 개최하였다. 이들 프로그램은 남북한 주민이 서로의 경험과 문화를 공유하고 이해를 넓힐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평화·통일 공감대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도 운영되었다. 통일교육주간을 계기로 '통일 골든벨'을 개최하였으며, '광복의 빛', '전남에서 통일의 길을 밝히다' 등의 문화행사도 진행하였다. 아울러, '호남권 통일⁺센터 SNS 서포터즈'와 상설 독서 지도 프로그램인 '북큐레이션'을 운영하여 통일과 북한 문제에 대한 지역 주민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고자 하였다. 이 외에도, 호남권 통일⁺센터는 지역 시민단체, 기초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하고, 지역 대표 축제에 홍보부스를 운영하는 등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였다.



(호남센터) 원데이클래스


(호남센터) 통일이 무르익는 쿠킹클래스

강원권 통일⁺센터는 지역 밀착형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참여자 수를 늘리고, 센터에 대한 지역사회의 인지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먼저, 지역 주민을 위한 참여·소통 프로그램으로 '명사초청 특강', 개관 1주년 기념행사 '강원 통일⁺페스티벌'을 개최하였

다. 행사에서는 통일과 북한 문제를 주제로 한 강연과 함께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남북한 주민통합 프로그램으로 '한반도 밥상 만들기',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식' 행사, '북향민 지역 정착 교육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였고, 평화·통일 공감대 형성·확산을 위해 상시 통일체험형 프로그램인 '남북한 퀴즈', '사진촬영', 'DMZ 그림 그리기' 등을 운영하였다.

이 외에도, 가족친화 프로그램인 '어린이 하루배움 교실', '오순도순 통일클래스'를 운영하였으며, 어린이집, 초등학교 등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통일교육 프로그램'과 '찾아가는 통일교육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였다. 특히, 강원권 통일+센터는 강원지역 특성에 맞는 지역 기관·단체와 강원도민을 대상으로 '통일핫스팟 로컬투어'를 운영하였다. 또한,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주관한 '메이커 페스티벌'과 육군 제2군단이 주관한 '전승행사' 참여를 통해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확대하였다. 이를 통해 센터의 활동을 지역 주민에게 알리고 참여를 확대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강원센터) 한반도 밥상 만들기



(강원센터) 교육기관 대상 통일교육

경기권 통일+센터는 개관 이후 센터의 초기 정착과 운영 기반 마련에 중점을 두면서, 경기지역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먼저, 지역 주민 참여·소통 프로그램으로 명사초청특강, 평화·통일영화제 등을 운영하였으며, 남북한 주민통합 프로그램으로 아로마클래스, 닥종이 공예, 누름꽃공예 등을 운영하였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남북한 출신 주민이 함께 참여하여 문화를 공유하고 상호 이해와 유대감을 높일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또한, 평화·통일 공감대 형성과 확산을 위해 경기지역

교원과 학생을 대상으로 센터 전시체험관을 활용한 체험교육을 실시하였다. 아울러, 경기지역 통일교육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통일교육 워크숍과 북향민 정착지원 유관기관 관계자 워크숍을 개최하였으며, 이를 통해 지역 내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이와 함께, 경기권 통일+센터는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작은 음악회를 개최하고 「2025 평화통일마라톤」 행사에 통일+센터 홍보·체험 부스도 운영하였다.



(경기센터) 평화·통일교육 교류협력 워크숍



(경기센터) 남북한 주민 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

5. 통일문화 콘텐츠 발굴 및 확산

정부는 디지털 소통과 참여, 인공지능(AI) 활용 등 최근 경향을 반영하여 「2025 통일문화 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하였다. 특히, 광복 80주년을 기념하여 시행한 이번 공모전은 기존의 대중음악 중심의 경연대회(평화·통일염원 대중음악 경연대회 「통일로가요」)를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 공모사업으로 확대하여 추진하였다. 이번 공모전은 '평화와 통일 미래'를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일반 분야(숏폼 영상, 웹툰·컷툰, 디자인, 표어·슬로건)와 AI 활용 분야(캐릭터, 숏폼, 스마트툰)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2025 통일문화 콘텐츠 공모전」에는 총 1,237점의 작품이 출품되었다. 정부는 1·2차 전문가 심사, 작품 감수, 국민 참여 온라인 투표와 공개검증 절차를 거쳐 총 66점을 수상작으로 선정하였다. 이 가운데 대상·최우수상·우수상 수상자 총 36명(팀)에게는 통일부장관상이 수여되었다.

「2025 통일문화 콘텐츠 공모전」 분야·부문별 대상 목록

분야·부문		수상 작품
일반	숏폼	닮은 우리를 만날 그날
	웹툰·컷툰	그래도 통일을 해야 하는 이유
	디자인	한반도 통일 알람시계
	표어·슬로건	좋아요 평화, 구독해요 희망, 함께 만드는 통일이야기
AI 활용	숏폼	고무신

수상작들은 공모전 누리집 및 통일부 누리소통망(SNS)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통일방송(UniTV)과 유니콘기자단의 취재 영상과 기사를 통해 수상자 인터뷰도 찾아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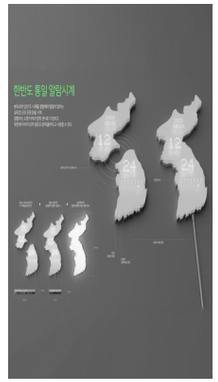
「2025 통일문화 콘텐츠 공모전」 주요 수상 작품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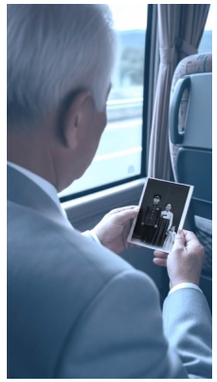
일반 숏폼 영상 대상
「닮은 우리를
만날 그날」



일반 웹툰·컷툰 대상
「그래도 통일을
해야 하는 이유」



일반 디자인 대상
「한반도 통일
알람시계」



AI 활용
숏폼 영상 대상
「고무신」

6. 미디어를 통한 국민과의 소통 활성화

(1) 누리집 및 누리소통망(SNS) 운영

통일부는 국민이 한반도 정책 관련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공식 누리집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엑스, 네이버 블로그 등 5개 대표 누리소통망(SNS)을 운영하고 있다.

대표 누리집 및 누리소통망(SNS)

구분	주소
대표 누리집	https://www.unikorea.go.kr
유튜브	https://www.youtube.com/@mounikorea
인스타그램	https://www.instagram.com/ministry_of_unification/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unikorea/
엑스	https://x.com/uni_kr
블로그	https://blog.naver.com/gounikorea/

대표 누리집은 메인화면에 주요 정책 소식을 직관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이미지를 배치하여 정부의 핵심 정책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또한, 이용자 관점에서 매뉴얼을 재구성하고 기능을 지속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국민이 편리하게 정책 관련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정부는 국민 이용률이 높은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을 정책홍보에 적극 활용하였다. 이를 위해, 다양한 기획 콘텐츠 시리즈와 숏폼(short-form) 영상을 제작·게시하였다. 또한, 유튜브의 라이브 스트리밍 기능을 이용해 주요 정책포럼과 학술회의를 온라인으로 중계함으로써 국민이 실시간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페이스북·엑스의 경우, 통일부 정책과 관련하여 국민과 상호 소통할 수 있는 채널로 활용하기 위해 다양한 콘텐츠를 게시하고 참여형 이벤트를 운영하였다. 또한, 블로그에는 통일부 청년 기자단이 작성한 통일 및 남북관계 관련 기사와 현장 취재 내용을 게시하여, 청년세대의 시각에서 통일과 남북관계 문제를 소개하였다.

(2)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 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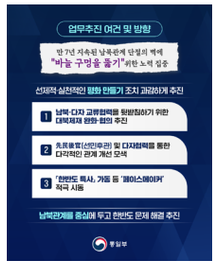
정부는 온라인을 통해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자 주요 정책과 보도자료를 시의성 있게 디지털 콘텐츠로 제작하여 게시하였다. 또한, 정책 현장을 생동감 있게 전달하기 위해 포토뉴스, 숏폼 영상 등의 형식을 적극 활용하였다. 아울러, 정부는 웹툰 작가, 비즈 아티스트 등 다양한 영역의 인플루언서와 협업을 진행하고 AI 활용을 통해 콘텐츠 제작 방식을 다각화하였다. 이를 통해, 한반도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 평화·통일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하였다.





포토뉴스





예산·업무보고 콘텐츠



숏폼 영상



AI 활용 콘텐츠





인플루언서 협업 콘텐츠

또한, 통일부 주요 소식을 국민 눈높이에서 전달하고자 캐릭터 '소통이'를 활용한 「소통이가 전하는 통일부 소식」, 「소통이가 간다」 콘텐츠 시리즈를 제작하였다. 이산가족 영상편지를 바탕으로 제작한 「소원이가 전하는 할머니, 할아버지 이야기」 웹툰 시리즈를 제작하여 이산가족 문제 해결에 대한 공감대를 높이고자 하였다. 또한, 대

학교 새내기 북향민이 출연하는 「우.하.해(우리 진주 하고 싶은 거 다 해)」 영상 시리즈를 제작해 북향민의 일상과 대학생활을 소개하고 북향민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개선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2025 평화통일마라톤」과 연계하여 「어쩌다 마라톤」 영상 시리즈를 제작하여 접경지역 평화 회복 성과를 홍보하였다.





캐릭터 '소통이' 활용 시리즈



소원이가 전하는 할머니, 할아버지 이야기



우.하.해(우리 진주 하고 싶은 거 다 해)



어쩌다 마라톤



오중석의 숏컷



평화의 시작, 일상의 소리

(3) 통일방송(UniTV) 운영

정부는 2011년부터 통일방송(UniTV)을 운영하여 평화·통일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한반도 정책과 남북관계에 대한 이해를 넓혀 왔다. 통일방송(UniTV)은 평화·통일과 북한 문제를 주제로 영상물을 제작하여 통일부 누리집과 누리소통망(SNS), 유튜브, 네이버TV캐스트 등 인터넷 매체를 통해 송출하고 있다.

2025년에는 「통일브리핑」, 「통일현장」, 「통일로그인」, 「선을 넘는 인문학」 등으로 구성된 정규 프로그램 「통일NOW」를 총 49편 제작하였다. 「통일브리핑」은 통일부장관과 차관의 주요 활동과 주요 정책 동향 등 통일부 소식을 전달하였고, 「통일현장」은 정부와 민간의 통일 관련 활동을 소개하였다. 「통일로그인」은 통일과 남북관계

현장에서 활동하는 인물을 발굴해서 알렸다. 「선을 넘는 인문학」은 각계 전문가가 출연하여 통일 문제와 관련된 다양한 일상적 소재를 다루는 토크쇼 형식으로 제작되었다. 또한, 「통일NOW」에서는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 방송도 매주 송출하고 있다.



통일NOW



통일브리핑



통일현장



통일로그인



선을 넘는 인문학



통일NOW(수어)

또한, 정부는 새로운 콘텐츠를 개발하여 국민이 평화공존과 통일 문제에 대해 보다 쉽고 재미있게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남과 북, 프랑스·독일 등 서로 다른 나라에서 온 젊은이들이 여행을 매개로 평화와 통일의 의미를 발견하는 「넘어온 김에 전국일주」(12회), 통일미래세대가 퀴즈풀이로 통일 문제에 다가가는 「유니퀴즈」(8회), 음악으로 평화를 이야기하는 「평화, 반딧불콘서트」(4회) 등을 제작하였다.



넘어온 김에 전국일주



유니퀴즈



평화, 반딧불콘서트



PEACE INSIGHT

아울러, 통일방송(UniTV)은 국민과 소통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서 유관기관의 방송채널을 통해서도 영상을 송출하였다. 「통일NOW」는 매주 KTV국민방송과 복지TV를 통해 송출되었으며, 영어 자막 서비스를 제공하는 「PEACE INSIGHT」는 아리랑국제방송TV로 매주 방영되었다. 또한, 통일방송(UniTV) 영상물을 보다 널리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과 민간기관 등에도 적극적으로 제공하였다.

7. 통일·북한연구 생태계 활성화

정부는 여러 분야의 학문적 역량을 결집하여 통일·북한연구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하 '경인사')와의 네트워크를 강화하였다. 경인사 산하 16개 국책연구기관으로 구성된 「한반도평화공존연구단」과 기획협동연구과제를 추

진하였다. 동 연구는 '한반도 미래 전망 및 평화·통일전략: 평화공존 추진 방향'을 주제로 6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되었다. 또한, 정부는 경인사 「한반도평화공존연구단」과 정례회의를 개최(3.21., 8.8., 10.20.)하고 연구 동향과 정보를 공유하였다.

이와 함께, 정부는 경인사와 공동으로 「한반도평화공존연구단」의 연구 실적을 공유하고 논의하는 학술회의를 개최(11.28.)하였다. 이를 통해, 지속 가능한 한반도 정책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 한반도 평화공존의 제도화를 실현하기 위한 공론의 장을 마련하였다.

이외에도, '통일·북한연구 신진 학자 소통의 밤' 행사를 개최(5.22.)하여 정치, 경제, 사회문화 등 통일·북한 관련 분야를 연구하고 있는 신진 학자 30여 명과 소통하였다. 아울러, 민간 차원의 신진 학자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통일·북한연구 생태계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였다.

경인사 한반도평화공존연구단 정례회의(3.21.)

통일·북한연구 신진 학자 소통의 밤(5.22.)

'평화공존·공동성장의 한반도 실현 방안' 학술회의(11.28.)

정부는 앞으로도 한반도 정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경인사 「한반도평화공존연구단」 통일·북한연구 플랫폼과 민간 차원의 신진 학자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통일·북한연구 생태계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특히, 2024년부터 중단된 신진 학자 정책연구비 지원사업을 2026년부터 재개하여 신진 학자의 연구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을 정례화할 예정이다. 또한, 신진 학자 간 교류와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연구 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통일·북한연구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고자 한다.

8. 한반도 정책 관련 사회적 대화 활성화

정부는 평화공존 기반 구축과 국민주권에 기반한 한반도 정책 추진을 위해 11월 통일부장관 직속으로 '한반도평화경청단'을 신설하였다. 이를 통해 한반도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부터 국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남북관계 원로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평화통일고문회의'를 설치하였다. 정부는 10월 31일 「평화통일고문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통일부훈령 제734호)을 제정하였으며, 남북민간교류 경험자·전문가, 청년층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소통 플랫폼을 개발하는 등 '경청' 전담 조직으로서의 기반과 전문성을 축적하고자 하였다. 또한, 한반도 정책에 대한 국민의 직접적인 참여 확대를 위해 사회적 대화 제도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국민이 직접 통일담론의 주체가 되어 의견을 형성할 수 있는 숙의의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정부는 평화·통일 사회적 대화를 '국민주권정부'의 국정과제(117-1)로 선정하여 사회적 대화의 활성화 및 제도화를 추진하였다. 과거 정부 역시 시민사회와 함께 국민적 공감대를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이를 지속적인 숙의의 장으로 정착시키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사회적 대화의 지속적·안정적 추진을 위한 제도화 방안 마련에 착수하였다. 먼저, 「평화와 통일에 대한 사회적 대화 2.0 거버넌스 제도화」 정책연구용역을 수행하였다. 해당 연구용역은 시민사회가 주체가 되어 추진한 연구로서, 국내외 사례 및 기존 경험을 토대로 사회적 대화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정부는 연구용역 결과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민간 주도, 정부 지원, 국회 협력'을 사회적 대화의 기본 원칙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사회적 대화 지원 체계 구축 및 독립재단 설립을 위한 법률 제정 등 다양한 제도화 방안을 검토·추진하였다.

제4절

국제사회와의 협력

1. 주요국 정부·의회 및 주한 공관 협력 강화

(1) 주요국 정부·의회 대화

한반도의 평화공존과 평화·통일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에서 국제협력의 중요성이 더욱 커짐에 따라, 정부는 미국, 중국, 일본, 유럽연합(EU), 아세안 등 주요 국가와 한반도 정책 협력을 위한 소통을 더욱 강화하였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이후 미국, 중국, 일본 등 주요 국가와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문제와 관련된 국제협력의 기반을 강화하였다. 특히,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남북관계 경색 국면이 장기화됨에 따라 우선 북미대화 재개를 통해 북한과의 관계를 대화와 협상 국면으로 전환하고 이를 기반으로 남북관계의 협력 공간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 아래 북미 간 대화 재개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다.

8월 26일에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한미 정상회담이 개최되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해 김정은 위원장과의 만남을 요청하였다. 이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한반도 문제에 있어 트럼프 대통령이 '피스메이커(peacemaker)' 역할을 하면 자신은 '페이스메이커(pacemaker)' 역할을 하겠다고 언급하며 한미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의 만남 의사를 밝히며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 의지를 표명하였다.

10월 29일에는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트럼프 대통령이 국빈 방한하여 제2차 한미 정상회담이 개최되었다. 이후 11월 14일 발표된 한미 공동 설명자료(Joint Fact sheet)에서 한미 양국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또한, 2018년 싱가포르 북미 정상 공동성명을 이행하기 위해 협력할 것을 약속하는 등 한반도 정책과 관련하여 긴밀한 공조에 합의하였다.

통일부장관은 독일과 벨기에를 방문(9.28.~10.4.)하여 독일과 유럽연합(EU) 주요 인사 및 전문가와 한반도 문제를 논의하였다. 9월 30일에는 독일 베를린자유대에서 '통일된 독일, 여전히 분단된 한반도'를 주제로 개최된 「2025 국제 한반도 포럼(GKF: Global Korea Forum)」 독일 세미나에 참석하였다. 통일부장관은 기조연설에서 "동서독이 걸었던 화해와 협력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반도는 '평화적 두 국가'와 교류-관계 정상화-비핵화의 포괄적 접근을 통해 평화공존과 공동성장을 위한 변화를 결단할 시점"이라고 강조하였다. 세미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통일 이후의 독일 상황과 분단이 지속되고 있는 한반도의 현실을 비교하며, 남북 평화공존을 위한 유럽의 교훈과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또한, 통일부장관은 10월 3일 독일 자르브뤼켄에서 개최된 '제35회 독일 통일의 날' 기념식에 우리 정부를 대표하여 참석하였다. 이 자리에서 프리드리히 메르츠 총리, 안케 레링어 연방상원의장, 엘리자베스 카이저 연방총리실 동독특임관 등 독일 의회 및 정부 인사를 만나 독일 통일 35주년을 축하하고, 우리 정부의 한반도 정책에 대한 독일의 지지와 협조를 요청하였다. 통일부장관은 또한 독일과 벨기에에서 정부와 의회, 유럽연합(EU) 인사와 전문가를 만나 한반도 문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독일에서는 보도 라멜로 하원 부의장, 귄터 자우터 연방총리실 외교안보보좌관, 노베르트 람머트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 이사장 등을 면담하고, 벨기에에서는 유럽연합(EU) 의회 한반도 관계 대표단(단장 : 세사르 루에나 의원), 올로프 스쿡 유럽연합(EU) 대외관계청 정무 사무차장을 만나 한반도 문제에 대해 논의하였다.

아울러, 통일부장관은 우리 정부가 추진 중인 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과 관련하여 독일 연방정치교육센터를 방문하였다. 이 자리에서 '보이텔스바흐 협약' 등 독일의 정

치교육 사례를 독일 전문가와 논의하였으며, 독일의 연방정치교육센터가 통일과 통일 이후 사회통합을 위한 시민교육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고 평가하였다. 또한, 한국의 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도 이러한 방향을 참고하여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통일부장관,
베를린자유대 특강(9.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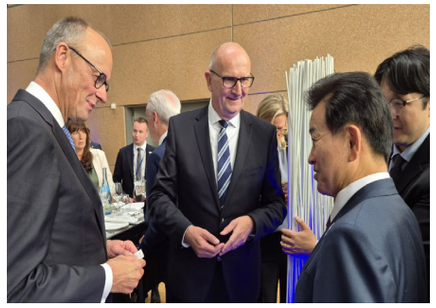
통일부장관, 「2025 국제 한반도 포럼」
독일 세미나 기조연설(9.30.)



통일부장관, 독일 연방정치교육센터 방문(9.30.)



통일부장관, EU 의회 한반도 관계 대표단 면담(10.2.)



통일부장관, 프리드리히 메르츠 총리 면담(10.3.)



통일부장관, 안케 레링어 연방상원의장 면담(10.3.)

통일부장관은 베를린자유대에서 한반도 정책을 주제로 특강을 하고, 독일의 2030 대학생들과 한반도 평화와 통일 문제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특강에 참석한 대학생들은 독일 통일 사례와 남북관계에 대한 시사점 등에 대해 질의하는 등 한반도 평화와 통일 문제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2) 주한 공관 소통 강화

정부는 대한민국과 해당국 간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각국 주한 공관과의 소통을 통해 한반도 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해를 높이고 지지를 확보하고자 노력하였다. 통일부장관은 취임 이후 주한 미국 대사대리를 접견(8.1., 11.25.)하여 북미대화 재개를 위해 미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주한 중국 대사(8.27.), 주한 일본 대사(9.11.)를 만나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 함께 노력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 밖에도 통일부장관은 스웨덴(8.11.), 영국(8.22.), 몽골(9.3.), 호주(9.11.), 프랑스(10.15.), 베트남(10.27.), 유럽연합(11.5.), 태국(11.10.) 등의 주한 대사들과 양자 면담을 갖고 남북관계 복원과 한반도 평화공존을 위한 협조를 요청하였다.

12월에는 통일부차관 주재로 주한 대사 및 국제기구 대표를 초청한 정책 설명회를 개최(12.16.)하였다. 설명회는 2025년 한반도 정세와 남북관계 현황, 2026년 정부의 한반도 정책 방향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고, 총 41개 주한 공관 및 국제기구 관계자가 참석하였다. 통일부차관은 정부가 평화공존의 남북관계



통일부장관, 주한 중국 대사 면담(8.27.)



통일부장관, 주한 일본 대사 면담(9.11.)



통일부장관, 주한 미국 대사대리 면담(11.25.)


주한 대사 및 국제기구 대표 정책 설명회(12.16.)

를 구축하기 위해 취해 온 선제적 조치와 평화공존의 3원칙을 설명하였고, 2026년을 한반도 평화공존의 원년으로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을 요청하였다. 참석한 각국 대사와 국제기구 대표들은 이번 설명회가 한국 정부의 한반도 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하였으며, 우리 정부의 한반도 평화 정착 노력을 지지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2. 국제회의 개최 및 평화·통일 공공외교 강화

(1) 「2025 국제 한반도 포럼」 개최

정부는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대한 국제사회의 담론을 확산하기 위해 2010년부터 「한반도 국제 포럼」을 국내외에서 연례적으로 개최해 왔고, 2024년부터는 「국제 한반도 포럼(GKF: Global Korea Forum)」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2025년에는 '광복 8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와 공동 주관하여 광복 80주년 기념사업으로 추진함으로써 사업의 위상을 높였다. 정부는 서울에서 국내 세미나 1차례(9.18.~19.), 일본 도쿄(6.30.)와 독일 베를린(9.30.)에서 해외 세미나 2차례를 개최하는 등 총 3차례의 세미나를 통해 '한반도의 평화공존과 공동성장'이라는 비전을 확산하였다.

국내 세미나는 9월 18일부터 19일까지 서울에서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공존으로의 전환'을 주제로 개최되었다. 첫째 날에는 통일부장관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마이클 샌델 하버드대학교 교수의 기조 강연 및 주요 석학과 국내외 전문가들의 토론이 진행되었다. 세미나에서는 민주주의 위기와 평화공존의 과제,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로드맵 등 지속 가능한 평화공존의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둘째 날에는 김희중 대주교와 채사장 작가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치유와 화해'를 주제로 대담을 진행하였다. 이어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발전 방향, 국가안보전략과 평화공존,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한 시민사회 역할 등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졌다. 또한, 외교·안보 분야 전문가뿐만 아니라 인문학자, 문화·종교계 인사, 국제기구 관계자, 시민사회 인사 등이 참여하여 다양한 관점에서 논의가 이루어졌다.

6월 30일에는 일본 도쿄에서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도쿄대와 공동으로 해외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세미나는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과 한반도 평화 협력'을 주제로

「2025 국제 한반도 포럼」 국내 세미나(9.18.~19.)



「국제 한반도 포럼」 일본 세미나(6.30.)


「국제 한반도 포럼」 독일 세미나(9.30.)

진행되었으며, 한반도 문제에 대한 한일 협력의 새로운 지평과 도전과제, 한반도 문제에 대한 동북아 협력 등에 대해 양국 전문가들의 폭넓은 논의가 이루어졌다.

「2025 국제 한반도 포럼(GKF: Global Korea Forum)」 주요 내용

구 분	세부 내용
국내 세미나(9.18.~19., 서울)	
주 제	•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공존으로의 전환
개회식	• 개회사 : 통일부장관 • 환영사 : 김성배(국가안보전략연구원 원장)
전체회의 (Plenary Session)	• 민주주의 위기와 평화공존의 과제 – 마이클 샌델(미국 하버드대 교수, 『정의란 무엇인가』 저자) 강연 •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공존에의 길 – 미국·중국·일본·러시아 한반도 문제 전문가 패널 참여 • 한반도 평화를 위한 치유와 화해 – 김희중(대주교, 전 광주대교구장) 강연 – 대담자 : 채사장(작가,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의 저자)
일반 세션	•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로드맵 • 트럼프 시대 한반도 평화공존의 과제
동시 세션	• 한반도 평화를 위한 다자 파트너십 •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발전 방향 • 국가 안보 전략과 평화공존 •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한 시민사회 역할 • 평화로운 한반도를 위한 국제기구의 역할 • 시민사회 연대를 통한 북한 인도지원 개발협력 방안 모색
국외 세미나 1(6.30., 일본 도쿄)	
주 제	•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과 한반도 평화 협력
개회식	• 개회사 : 한석희(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원장) • 환영사 : 엔도 켄(도쿄대 교수) • 축사 : 김남중(통일부차관, 영상), 스기야마 신스케(전 외무성차관)
주요 논의내용	• 한일 국교 정상화 60년, 한반도 통일을 위한 미래 협력 • 북한 동향과 한반도 정세 평가 • 한반도 문제에 관한 동북아 협력
국외 세미나 2(9.30., 독일 베를린)	
주 제	• 통일된 독일, 여전히 분단된 한반도
개회식	• 개회사 : 임상범(주독 한국 대사), 이은정(베를린자유대 교수)
기조연설	• 통일부장관
주요 논의내용	• 독일 통일의 성공과 한반도 분단의 지속 • 동독의 두 국가론과 북한의 두 국가론 • 독일 문학과 영화가 통일에 끼친 영향, 그리고 한국 분단 문학과 영화 • 남북 평화공존은 가능한가 : 유럽의 경험과 지정학적 접근

9월 30일에는 독일 베를린에서 해외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독일 세미나는 '통일된 독일, 여전히 분단된 한반도'를 대주제로 열렸으며, 한국과 유럽의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독일 통일 사례, 동독의 '두 국가론'과 북한의 '두 국가론', 독일 문학과 영화가 통일에 미친 영향 등을 논의하였다. 특히, 유럽의 경험과 지정학적 접근을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공존 가능성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하였다.

(2) 제14차 한독통일자문위원회 개최

정부는 2010년 독일 내무부와 체결한 양해각서(MOU)에 따라 2011년부터 매년 한국과 독일을 오가며 한독통일자문위원회를 공동 개최하고 있다. 독일 통일 35주년과 대한민국 광복 80주년이라는 의미를 갖고, 한국과 독일의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 개최되는 제14차 한독통일자문위원회는 11월 17일부터 18일까지 독일 베를린의 연방재무부에서 진행되었다. 우리 측에서는 공동위원장인 통일부차관을 대신하여 통일정책실장이 참석하였고, 각계 교수와 전문가 등이 자문위원으로 참석하였다. 독일 측에서는 구동독 지역의 경제·사회적 격차 해소 업무가 연방총리실에서 연방재무부로 이관됨에 따라 엘리자베트 카이저 연방재무부 정무차관 겸 동독지역 특임관이 위원장으로 참석하였다. 이와 함께, 독일 정부 관계자, 교수, 전문가 등도 회의에 참석하였다.

회의 참석자들은 국제 정세와 한반도의 현재 상황을 진단하고, 서독의 동방정책과 독일 통일 이후의 통합 과정을 평가하였다. 또한, 다양한 동·서독 간의 교류협력 사례



제14차 한독통일자문위원회(11.17.~18.)

를 검토하면서, 우리 정부가 추진 중인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이를 통해, 양측은 평화체제의 구축을 통해 분단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동시에 통일이라는 장기적인 목표를 향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 독일 통일의 교훈이라는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제14차 한독통일자문위원회 주요 내용

일시		내 용
11.17.	세션1	• 유럽통합 맥락에서 독일 통일의 의미 • 한반도 정세 평가
	세션2	• 동독의 대서독 정책 • 서독의 대동독 정책
	세션3	• 북한의 대남정책 • 남한의 대북정책
11.18.	세션4	• 음악과 문학을 통한 동서독 간의 교류 • 남북 민간교류, 관계를 복원하다
	세션5	• 동독 내에서의 시민운동 • 남북 평화공존을 위한 교류협력 방향
	세션6	• 독일 통일 과정에서의 정치교육의 역할 • 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의 과제와 방향 • 경제통합으로부터 얻는 다섯 가지 교훈

(3) 평화·통일 공공외교 강화

정부는 한반도 평화와 통일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높이고,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공공외교 사업을 추진하였다.

통일부장관은 2025년 11월 5일 독일 프리드리히 에버트재단(FES)·스톡홀름국제평화문제연구소(SIPRI) 대표단을 접견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국제적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통일부장관은 남북 간 신뢰 회복의 관점에서 평화공존의 가치를 강조하는 우리 정부의 한반도 정책 방향을 설명하였다. 또한,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 증진을 위해 남북관계의 진전뿐 아니라 다자협력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를 위한 국제관계 전문가의 다양한 제언과 협력을 요청하였다.





통일부장관, 에버트재단·스톡홀름 국제평화문제연구소 등 해외 전문가 면담(11.5.)

정부는 한반도 평화·통일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높이고, 통일공공외교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국가별 인식 데이터를 수집하고자 '글로벌 통일인식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조사는 세계 시민을 대상으로 한반도 통일에 대한 여론을 파악하기 위해 2024년에 처음 시행되었으며, 2025년에도 미국, 일본, 독일, 폴란드, 스웨덴, 이탈리아, 캐나다, 몽골 등 8개국 시민 9천여 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설문은 한반도 평화·통일, 남북한의 국가 이미지, 북핵 문제 등에 관한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조사 결과는 통일연구원 누리집을 통해 국문과 영문으로 제작되어 공개되었다.

또한, 정부는 두 차례의 국제세미나를 개최하여 해외 전문가들과 함께 조사 결과를 분석하고, 통일공공외교 정책의 함의를 도출하려고 하였다. 5월에는 일본에서 세



글로벌 통일인식조사 일본 세미나(5.22.)



글로벌 통일인식조사 이탈리아 세미나(9.1.)

미나를 개최하여 남북관계 등에 대해 현지 학자들의 다양한 견해를 청취하였다. 9월에는 이탈리아에서 미국과 유럽 전문가를 초청하여 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한반도 평화·통일 문제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러한 조사를 통해 주요 국가의 시민들이 갖고 있는 남북한에 대한 인식과 한반도 평화·통일에 대한 의견을 확인함으로써, 국가별 특성을 반영한 통일공공외교 전략 수립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해외 연구기관 통일정책 네트워크 구축 사업'은 해외의 한반도 문제 신진 연구자들과 통일·북한 문제를 주제로 온라인 토론회를 개최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었다. 정부는 총 6차례의 온라인 토론회 세션을 개최하였으며, 토론회 영상은 전체 영상, 연사별 영상, 쇼츠 등 다양한 형태로 편집하여 통일방송(UniTV)과 누리소통망(SNS)에 게시하였다. 주제별로 총 18명의 연구자가 참여하였으며, 북한 반도체·건축·관광, 북한을 둘러싼 지정학적 셈법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었다. 이를 통해 한반도 문제를 보다 폭넓고 다각적인 시각에서 이해할 수 있는 콘텐츠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와 함께 정부는 해외 연구자의 현지 세미나, 강연, 언론 기고 등을 지원하여 국제사회에서 한반도 문제의 공론화를 추진하는 '해외여론주도층 활동 지원사업'을 실시하였다. 2025년에는 존 에버라드 전 주북 영국 대사, 인도네시아의 라띠 인드라스와리 파라히양안 가톨릭대 교수 등 7명의 전문가를 지원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위촉된 전문가들은 각국에서 개별 강연,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 국제사회의 한반도 문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기여하였다.



전 주북 영국 대사 레딩대 강연 지원(9.25.)


인도네시아 가톨릭대 교수 주관 워크숍 지원(10.10.)

통일·북한 문제 연구의 저변을 확대하고 국제사회 내 한반도 연구자를 육성하기 위한 해외 학술교류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해외의 신진 학자를 대상으로 국내 통일·북한학 학위과정 지원사업을 운영하였으며, 기존에 선발되었던 4명의 연구자도 계속 지원하였다.

또한, 국내 외국인 유학생 등 청년세대를 대상으로 강의, 토크콘서트, 현장 방문 등의 활동을 지원하는 '글로벌 한반도 통일청년리더 활동 지원사업'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한반도 문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국내외 청년 간 네트워킹을 지원하였다.

정부는 2021년부터 북한 및 남북관계 전문 영문 웹저널인 Global NK(www.globalnk.org)의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이 웹저널은 국내 연구자의 한반도 문제 및 남북관계 관련 연구 성과를 영문으로 번역하여 제공함으로써 한반도 문제에 관심 있는 외국인이 쉽게 접근하여 균형적이고 종합적인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2025년에는 총 55건의 논평과 인터뷰 등을 게재하였다.

정부는 재외동포가 한반도 평화와 통일 문제를 보다 쉽고 친숙하게 접할 수 있도록 해외 통일문화행사도 개최하였다. 2025년에는 광복 80주년을 맞이하여 '이산가족'을 주제로 6월 일본 도쿄, 9월 영국 뉴몰든에서 총 2회의 행사가 개최되었다. 6월 일본 도쿄 행사는 한일 수교 60주년을 기념하여 양국의 공통 관심사인 억류자 문제를 이산가족 문제와 연계한 토크콘서트, 미디어 아트, 기억 갈피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으로 진행하였다. 9월 영국 뉴몰든 행사는 유럽 최대 한인 밀집 지역인 뉴몰든에서 런던 한류 페스티벌과 연계하여 진행하였다. '이산가족' 문제를 그리움


일본 지역 재외동포 통일문화행사(6.29.)



영국 지역 재외동포 통일문화행사(9.27.)

이라는 보편적 정서와 K-컬처를 매개로 접근하여, 재외 동포뿐 아니라 해외 현지인들도 한반도 분단의 현실과 평화·통일의 필요성에 공감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정부는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현지 한인 언론사에 전문가 칼럼 게재를 지원함으로써, 한반도 문제와 정책 현안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였다. 2025년에는 미국, 일본, 영국, 카자흐스탄 등 4개국의 한인 언론사 4곳을 대상으로 전문가 칼럼을 게재하여 한반도 평화공존과 통일 문제에 대한 재외동포 사회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자 하였다.

02

정책 추진 기반 강화

제1절 조직개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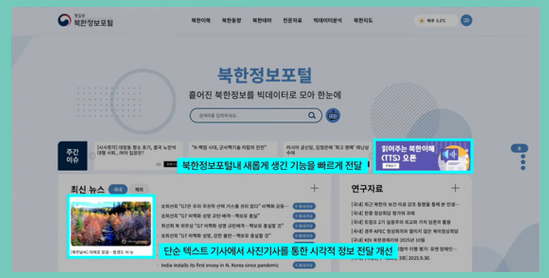
제2절 북한 정보 대국민 서비스 제공

제3절 법·제도적 기반 구축

제4절 남북협력기금 관리·운영

2025
한반도
평화공존의
기록들

UNIFICATION
WHITE PAPER





제2장

정책 추진 기반 강화

통일부는 조직개편을 통해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 추진을 위한 역량을 강화하였다. 통일부의 핵심 기능을 복원·정상화하고, '한반도 평화공존과 공동성장'이라는 국정목표를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조직을 정비하였다. 조직개편의 주요 방향은 화해협력의 남북관계 재정립을 위한 역량 회복, 한반도 평화경제 및 공동성장 추진 기능 강화, 국민주권정부의 핵심 가치 구현을 위한 조직 설치 등이다.

정부는 북한 정보에 대한 대국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였다. 2025년부터 북한정보포털의 AI 기능을 강화하여 국민이 북한 관련 정보를 더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정부는 북한자료센터를 확대·발전시킨 '(가칭)국립평화통일자료원' 건립을 추진하였다. 해당 사업은 2024년 12월 16일 착공 이후, 2025년 12월 말 기준으로 목표 공정률의 45%를 달성하였고, 2026년 말 준공 후 2027년 상반기 개관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통일정책 추진 근거를 법제화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민간 법제 전문가와 관계 부처가 협력하여 통일 과정과 통일 이후의 통합 과정에 대비한 법·제도 연구와 정비 작업을 진행하였다.

정부는 남북 간 교류협력 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남북협력기금의 목적에 따라 2025년 사업비 7,981억 원을 편성·운영하였다. 정부는 기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여 선제적 교류협력 추진을 위한 재정 지원을 확보하고 남북 공동성장의 미래를 이끌어 나가는 주요 재정적 수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특히, 2026년에는 한반도 평화공존을 목표로 남북관계를 재정립한다는 계획과 의지를 바탕으로 사업비 1조 1억 원을 편성하여 남북대화 재개 및 교류협력 활성화를 재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제1절

조직개편

통일부는 정부조직법상 핵심 기능을 복원·정상화하기 위해 조직개편을 실시하였다. 2023년 9월 남북대화 및 교류협력 전담 부서가 폐지되면서 통일부의 핵심 기능과 역할이 크게 약화되었다. 이에 정부는 남북대화 및 교류 기능을 회복하고, '한반도 평화공존과 공동성장'이라는 국정목표 구현을 속도감 있게 진행하기 위해 통일부 조직개편을 추진하였다.

이번 조직개편은 세 가지 기본 방향 하에 이루어졌다. 첫째, 화해협력의 남북관계 재정립을 위한 역량을 회복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남북 간 연락채널을 정상화하고, 남북대화 국면전환 여건 조성 및 남북회담 정례화·제도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남북회담본부를 복원하였다. 둘째, 한반도 평화경제 및 공동성장 추진 기능을 강화하였다. 남북 경제협력 재개,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 평화경제특구 조성을 추진하기 위해 평화교류실과 평화협력지구추진단을 신설하였다. 셋째, 국민주권정부의 핵심 가치 구현을 위한 조직을 설치하였다. 사회적 대화를 통한 국민 참여를 제도화하기 위해 통일부장관 직속으로 '한반도평화경청단'을 설치하고, 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을 통한 통일교육 발전 추진을 위해 기존의 국립통일교육원을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으로 재편하였다.

2025년 통일부 조직개편 주요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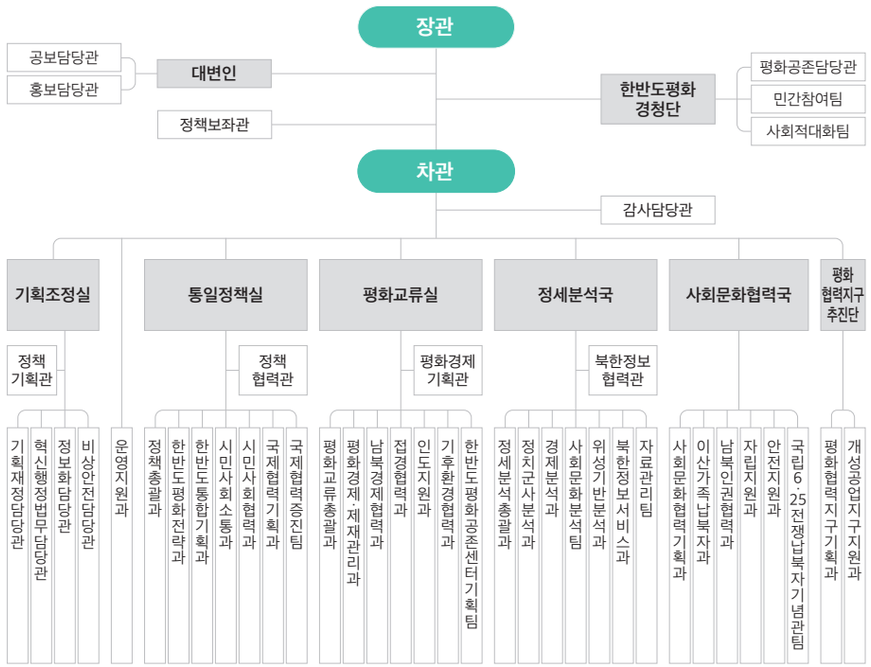
- 남북관계관리단을 폐지하고, 남북대화 재개 및 정례화·제도화 추진을 위해 남북회담 및 연락 전담 부서인 '남북회담본부' 복원
- 한반도 평화경제 및 공동성장의 미래 준비, 인도지원·기후환경 분야의 호혜적 남북협력 추진을 위해 '평화교류실' 설치
- 남북협력지구 운영 정상화 및 확대·발전을 통한 남북경제공동체 형성 촉진을 위해 '평화협력지구추진단' 설치
- 남북 평화공존 기반 구축 및 국민적 합의에 기반한 지속 가능한 한반도 정책 추진을 위해 '한반도평화경청단' 신설
- 인권인도실을 폐지하고, 안정적 남북사회문화교류 추진 및 이산가족 등 인도적 문제의 실질적 해결을 위해 '사회문화협력국' 설치
- 평화, 통일, 민주주의를 통합한 새로운 통일교육 추진을 위해 국립통일교육원 명칭을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으로 변경

통일부는 조직개편을 바탕으로 남북 간 평화·협력 추진 역량을 강화하여 평화공존의 한반도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향후 남북관계 진전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관련 조직과 기능의 추가적인 보강 방안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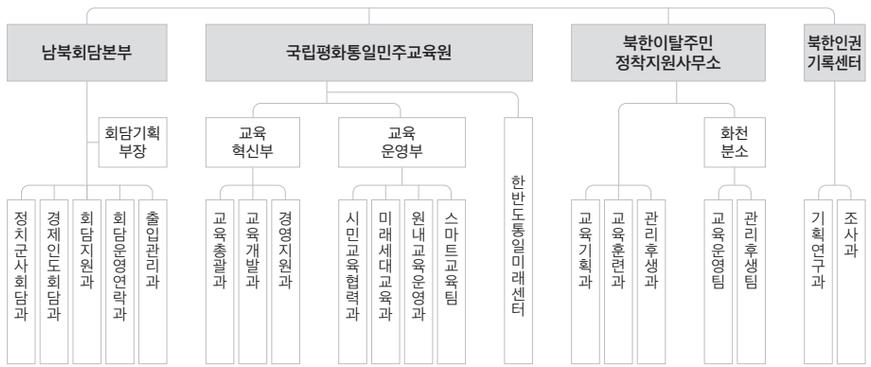
통일부 조직개편 기구도

(2026년 기준)

본부 : 3실 3국(1대변인 포함) 2단 4관 33과 6팀



소속기관 : 4소속기관 3부 1센터 16과 3팀



제2절

북한 정보 대국민 서비스 제공

1. 북한정보포털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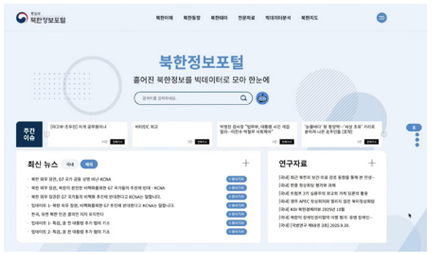
정부는 2011년부터 북한 종합 데이터베이스를 단계별 계획에 따라 구축해 왔다. 2013년에는 북한 정보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북한정보포털시스템(nkinfo.unikorea.go.kr)을 구축하였다. 2023년 12월 북한정보포털을 빅데이터 및 AI 기반으로 전면 개편하고, 2024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을 시작하였다. 이후 성능 개선과 다양한 홍보 활동을 통해 국민의 접근성과 이용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북한정보포털의 주요 콘텐츠로는 북한에 대한 객관적 이해를 돕기 위한 일일·주간·월간 단위의 동향, 정치·군사·경제·사회·문화 등 분야별 현황, 그리고 인물·사전·통계·간행물·영상 등 참고 자료가 있다. 부가 서비스로는 북한의 권력기구도와 함께, 북한 지형 정보를 기반으로 약 30만 건의 지명과 시설명을 검색할 수 있는 북한지도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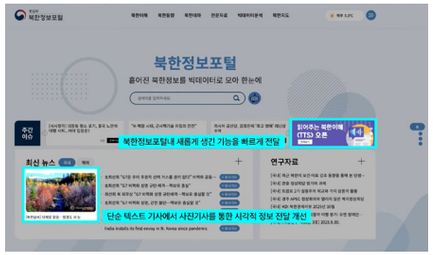
정부는 2025년부터 AI 기능을 더욱 강화하여 국민이 북한 관련 정보를 더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북한정보포털의 기능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였다. 이를 통해 AI를 활용한 주간·월간 북한동향 자료 요약, 읽어주는 『북한 이해』, 분야별 AI 북한리포트 등을 새롭게 제공함으로써 북한 정보의 탐색과 활용을 한층 수월하게 하였다.

또한, 정부는 북한 정보에 대한 접근성과 이용자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메뉴와 화면 구성을 개선하였다. 메인 화면에는 사진 추가 등 시각적 요소를 강화하여 주요 정보를 보다 직관적으로 검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현재와 과거의 북한 날씨를

확인·비교할 수 있도록 북한 날씨 테마 메뉴를 신설하고, 북한지도 기능도 보다 쉽게 보고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이를 통해 이용자들이 방대한 북한 관련 정보를 보다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북한정보포털 메인화면 개편 전



북한정보포털 메인화면 개편 후

2. 북한자료센터 운영

정부는 통일 및 북한 관련 정보자료를 수집·축적하여 국민의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1989년 5월 22일 북한자료센터(이하 '센터')를 개관하였으며, 현재 국립중앙도서관 본관 5층에서 운영하고 있다.

센터는 통일·북한 관련 단행본 8만 6,000여 권, 연속간행물 1만 5,600여 권, 시청각 자료 1만 9,000여 건, 통일부 발간 도서 7,300여 권 등 총 12만 7,830여 건의 자료를 보유하고 있다. 이 가운데 북한에서 발행한 자료는 단행본 2만 5,950권, 연속간행물 5,355권, 시청각 자료 1만 4,753건 등 총 4만 6,058건을 소장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센터의 소장 자료를 확대하기 위해 2025년부터 북한 정기간행물 구입을 재개하였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는 국내외 정기간행물을 연간 약 30종 수준으로만 구입하였으나, 2025년부터는 68종의 북한 정기간행물 구입을 재개하는 등 소장 자료를 확충하였다.

북한 발행 자료 보유 현황

(2025년 12월 말 기준) (단위: 건)

유 형	단행본	연속간행물	시청각 자료	계
보유 건수	25,950	5,355	14,753	**46,058**

북한 영화의 경우, 4,700여 편을 소장하고 있으며, 1990년부터 기관 또는 단체가 북한 영화 상영을 요청할 경우, 협의를 통해 지원하고 있다. 2025년에는 한양대학교를 비롯한 기관(대학)을 대상으로 북한 영화 상영, 북한자료센터 견학 등의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였고, 통일관 6곳에서 개최된 통일교육주간 행사에 영상자료를 지원하였다.



통일교육주간(5.21.)



북한자료센터 견학(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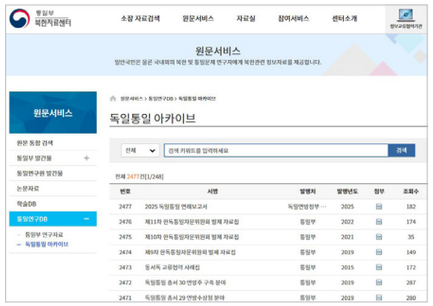
북한 영화 상영 지원(10.24.)

또한, 센터는 2010년부터 북한 자료 디지털 콘텐츠 서비스 기반을 구축하고 디지털 아카이브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북한 영상자료를 디지털 아카이브에 구축함으로써 이용자가 조선중앙TV의 방송 내용을 편리하게 시청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북한 단행본 및 신문·정기간행물 디지털 자료도 열람·출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2025년에는 보존 가치 등을 감안하여 마이크로피시 205종 4,577권 274,629면과 릴테잎 2종을 대상으로 디지털화를 추진하였다. 또한, 『노동신문』, 『근로자』 등 전자자료 560종 3,039권을 구입하여 디지털 아카이브를 확충하였다.

센터 누리집(unibook.unikorea.go.kr)에서는 소장 자료 및 기사 목록 등을 검색할 수 있으며, 북한 영화 소개와 북한 교과서 및 북한 만화 소장 목록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통일부 발간 자료 7,300여 건과 통일연구원 발간 자료 3,400여 건의 원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25년에는 통일·북한 분야 국내외 정책연구자료 618건 및 독일통일 아카이브 1,925건으로 구성된 「통일연구 DB」를 추가로 구축하여 누리집 원문서비스 기능을 강화하였다.



원문서비스 → '통일연구 DB' 추가



'통일연구 DB' → 독일통일 아카이브

한편, 센터를 방문하는 이용자는 통일·북한 관련 학술 DB 9천여 건과 함께 국립중앙도서관과 국회도서관의 원문 DB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2025년에는 북한 자료 공동 활용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정보교류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하였다. 센터는 자체 보유한 단행본 DB 2만 8천여 건과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정기간행물 기사 색인 DB 15만여 건을 상호 교환하였다. 또한, 통일연구원과는 북한 정기간행물 13종의 기사 색인 DB를 공동 활용함으로써 자료 검색의 편의성과 업무 효율성을 높였다.

3. (가칭)국립평화통일자료원 건립

정부는 국정과제인 '북한 자료 대국민 공개 확대'를 추진하고 북한자료센터의 장서 증가에 따른 서가·이용자 열람 공간 부족, 디지털 아카이브 공간 확충 수요 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북한 자료 아카이브 및 복합문화센터 기능을 수행할 (가칭)국립평화통일자료원을 건립하고 있다. 국립평화통일자료원은 건축 연면적 약 8,500㎡, 지하 1층에서 지상 3층 규모로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 제2전시장 인근 부지에 건립되고 있다. 총사업비 451억 원이 투입되는 건립 사업은 2024년 12월 16일 착공 이후 기초 토목공사, 골조 공사 등을 차질 없이 진행함으로써 2025년 12월 말 기준 목표 공정률의 45%를 달성하였다. 정부는 2026년 말 준공 후 2027년 상반기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개관 이후 국립평화통일자료원은 국내 최대 규모의 통일·북한 전문 도서관으로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핵심 거점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특히, 정부는 북한 자료 분류·관리 체계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편하는 등 제도 개선을 병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북한 자료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을 실질적으로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다.



조감도

제3절

법·제도적 기반 구축

정부는 헌법 제4조가 규정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원칙과 법치에 기반한 통일정책 추진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였다. 이를 위해 민간 법제 전문가와 관계 부처가 협력하여 통일 과정과 통일 이후 통합 과정에 대비한 다양한 법·제도 연구 및 정비 작업을 추진하였다.

통일부는 민간 법제 전문가와 법무부·법제처 등 관계 부처 간 통일법제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체계화하기 위하여 2009년 통일법제추진협의회를 구성하였다. 이후 매년 분기별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해 왔으며, 남북관계의 발전 단계에 따라 필요한 정책 연구 과제를 논의하고 통일법제 체계화 사업의 추진 방향을 조율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2025년에도 통일법제추진협의회를 4회 개최(2.18., 6.27., 9.29., 12.16.)하여 통일 준비를 위한 법·제도 현황을 점검하였다. 회의에서는 분야별 미비점과 향후 입법적 보완 사항 등을 검토하고, 통일과정에서 요구될 법적 기반과 제도 정비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통일법제 유관부처 공동학술회의(12.12.)


통일법제추진협의회 4분기 회의(12.16.)

한편, 통일부는 2013년부터 매년 법무부·법제처와 함께 통일법제와 관련한 공동학술회의를 개최하여,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연구과제를 논의해 왔다. 2025년에도 법무부·법제처와 함께 통일법제 공동학술회의를 개최(12.12.)하여 통일법제 업무의 부처 간 협업을 증진하고, 부처별 연구 성과를 공유하여 심도 있는 통일법제 연구를 진행하였다.

또한, 통일부는 통일법제 연구 생태계 활성화 및 신진 학자 육성 차원에서 2011년부터 서울대학교 헌법·통일법센터와 공동으로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 학술대회는 '통일법제 인프라 확충을 위한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매년 이어져 왔으며, 2025년에는 통일법제 관련 분야 박사급 연구진의 참여 하에 '통일기반조성을 위한 법체계 구축'이란 주제로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개최(11.11.)되었다.

이 외에도, 통일부는 대한변호사협회 통일문제연구위원회와 공동으로 '새 정부 통일정책과 법제 정비 방향'을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10.21.)하였다. 이 세미나에서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제기된 주요 통일 관련 법적 쟁점과 향후 법제 정비 방향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제4절

남북협력기금 관리·운영

1. 남북협력기금 수입

남북협력기금은 1990년 8월 1일 「남북협력기금법」 제정에 따라 남북 간 상호 교류와 협력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으로 설치되었다. 정부는 1991년 정부 출연으로 250억 원 규모의 남북협력기금을 최초로 조성하였고, 이후 기금은 남북협력사업을 지원하는 주요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다. 2025년 남북협력기금 수입은 7,449억 2,700만 원이며, 세부적으로는 경수로 관련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의 이자 상환 및 기금 사업비 충당을 위해 일반회계에서 788억 원을 출연 받았고,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의 원금을 상환하기 위하여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4,554억 원을 예수하였다. 여유자금에서는 통화금융기관 예치금 9,300만 원과 비통화금융기관(증권사 등) 예치금 1,899억 9,700만 원 등 총 1,900억 9,100만 원을 회수하였고, 자체 수입은 사업비 정산 환입 등 206억 3,600만 원이다.

2020~2025년 남북협력기금 수입 현황

(단위: 억 원)

구 분	'20	'21	'22	'23	'24	'25
정부 출연금	1,500	1,000	1,000	572	1,000	788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	5,486	2,370	1,055	4,300	5,200	4,554
여유자금 회수	624	1,419	1,763	1,625	1,634	1,901
자체 수입	331	140	95	132	131	206
합 계	**7,941**	**4,929**	**3,913**	**6,629**	**7,965**	**7,449**

2. 남북협력기금 지출

정부는 2025년 총 1조 4,438억 원(운영비 등을 제외한 사업비는 7,981억 원) 규모의 남북협력기금 지출계획을 수립하여 국회의 승인을 받았다. 사업비 지원을 위해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제337~339차, 총 3회) 및 남북협력기금관리심의위원회(제206~209차, 총 4회)를 개최하여 총 182억 6,100만 원의 기금 사용 계획을 의결하였다.

2025년 남북협력기금 지원 의결 현황

(단위: 백만 원)

안 건	금 액
2025년 한반도통일미래센터 운영경비 남북협력기금 지원(안)	5,043
2025년 이산가족교류촉진 사업 남북협력기금 지원(안)	193
2025년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 남북협력기금 지원(안)	2,621
2025년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발굴조사 관련 사업 남북협력기금 지원(안)	908
2025년 DMZ 통합시스템 관리 운영 사업 남북협력기금 지원(안)	326
2025년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위탁사업 남북협력기금 지원(안)	4,630
2025년 대북 반출물자 전략물자 전문판정 업무위탁 남북협력기금 지원(안)	119
2025년 경원선 남측구간 철도복원 사업 현장유지·관리 남북협력기금 지원(안)	277
2025년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운영경비 남북협력기금 지원(안)	847
2025년 판문점 견학 통합관리 운영 사업 남북협력기금 지원(안)	2,138
2025년 남북 이산가족 유전자 검사 사업 남북협력기금 지원(안)	610
2025년 남북 이산가족 영상편지 제작 사업 남북협력기금 지원(안)	315
2025년 남북 철도·도로 출입시설 역사관 운영 사업 남북협력기금 지원(안)	67
2025년 DMZ 통합시스템 관리 운영 사업 과업 변경 남북협력기금 지원(안)	166
총 의결액	**18,261**

※ 사업별 의결액의 합은 반올림으로 총 의결액과 다를 수 있음.

의결된 기금 사용 계획에 따라 한반도 평화공존 기반 구축을 위해 총 199건의 사업에 총 165억 1,000만 원이 집행되었다.

2025년 남북협력기금 사업비 집행 실적

(단위: 백만 원)

사업내용	금액	사업구분
2025년 한반도통일미래센터 운영경비 지원 78건	4,624	통일정책 (78건, 4,624)
2025년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 지원 4건	2,486	남북사회문화교류 (13건, 3,394)
2025년 개성 만월대 디지털 기록관 운영 4건	140	
2025년 개성 만월대 상설 전시 구축 2건	50	
2025년 개성 만월대 디지털 복원 사업 3건	718	
2025년 이산가족 교류 촉진을 위한 지원 2건	93	이산가족교류지원 (6건, 926)
2025년 남북 이산가족 영상편지 제작 사업 지원 2건	288	
2025년 남북 이산가족 유전자 검사 사업 지원 2건	545	
2025년 대북 인도지원 사업 통합관리체계 구축·운영사업 지원 4건	757	대북인도적지원 (4건, 757)
2025년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위탁사업 지원 4건	3,862	남북경제협력 기반조성 (94건, 5,962)
2025년 경원선 남측구간 철도복원 사업 현장유지 관리 지원 4건	261	
2025년 판문점 견학 통합 관리 운영 지원 61건	1,328	
2025년 DMZ 통합시스템 구축사업 지원 13건	450	
2025년 남북 철도·도로 출입시설 역사관 운영 12건	61	
2025년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운영경비 지원 4건	847	개성공단지원 (4건, 847)
총 집행액	**16,510**	**총 199건**

※ 사업별 집행액의 합은 반올림으로 총 집행액과 다를 수 있음.

사업별 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한반도통일미래센터 운영' 항목에서 통일체험연수 프로그램 운영 및 시설관리 등을 위하여 총 46억 2,400만 원을 집행하였다.

'남북 사회문화교류' 항목에서는 총 33억 9,400만 원을 집행하였다. 세부적으로는 민족공동체 회복을 위하여 지속해 왔던 교육 학술 협력사업인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에 24억 8,600만 원, 문화유산 협력사업인 '개성 만월대 남북 공동 발굴 관련 디지털 복원 및 디지털 기록관 운영 지원'에 8억 5,800만 원, '개성 만월대 상설 전시 구축 지원'에 5,000만 원 등을 집행하였다.

'이산가족교류지원' 항목에서는 총 9억 2,600만 원을 집행하였다. 세부적으로는 향후 남북 간 이산가족 교류에 대비하여 '이산가족 영상편지 제작 및 유전자 검사' 비용 등으로 8억 3,3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이산가족 교류 촉진을 위한 지원에 9,300만 원을 집행하였다.

'대북 인도적 지원' 항목에서는 총 7억 5,700만 원을 집행하였다. 세부적으로는 대북 인도지원 사업의 통합적 관리를 통한 체계적 업무 지원 및 대민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대북 지원사업 통합관리체계 구축·운영 사업 지원'(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에 7억 5,700만 원을 집행하였다.

'남북경제협력 기반조성' 항목에서는 총 59억 6,200만 원을 집행하였다. 세부적으로는 민간과 지방자치단체의 교류협력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남북교류협력 민간위탁 사업'(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에 38억 6,200만 원, '경원선 남측구간 철도복원 사업 현장유지 관리'에 2억 6,100만 원, '판문점 견학 통합 관리 운영 사업'에 13억 2,800만 원, 'DMZ 통합시스템 구축 사업'에 4억 5,000만 원, '남북 철도·도로 출입시설 역사관 운영 사업'에 6,100만 원 등을 집행하였다.

'개성공단지원' 항목에서는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운영 경비 지원에 8억 4,700만 원을 집행하였다.

이 밖에도, '공공자금관리기금 원리금 상환'에 5,165억 8,8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기금운영비'는 26억 2,400만 원을 집행하였다.

2020~2025년 남북협력기금 지출 현황

(단위: 억 원)

구 분		'20	'21	'22	'23	'24	'25
사업비	한반도통일미래센터	32	31	29	34	42	46
	남북 사회문화교류	43	35	34	35	35	34
	이산가족교류 지원	12	23	10	10	17	9
	대북 인도적 지원	139	17	34	8	8	8
	남북경제협력	128	122	325	67	177	60
	개성공단지원	88	84	347	71	52	8
	소 계	**442**	**312**	**779**	**224**	**330**	**165**
공공자금관리기금 원리금 상환		6,056	2,831	1,486	4,748	5,712	5,166
여유자금 운용		1,419	1,763	1,625	1,634	1,901	2,092
기금 운영비		24	23	23	23	22	26
합 계		**7,941**	**4,929**	**3,913**	**6,629**	**7,965**	**7,449**

※ 항목별 지출액의 합은 반올림으로 총 지출액과 다를 수 있음.

03

평화교류협력

제1절 남북교류협력 추진 기반 강화

제2절 한반도 평화경제 및 공동성장 미래 준비

제3절 인도적 협력

제4절 평화협력지구 추진

2025
한반도
평화공존의
기록들





UNIFICATION
WHITE PAPER

제3장

평화교류협력

이재명 정부는 출범 이후 남북교류협력 기반을 재건하고, 교류협력 생태계를 복원하겠다는 정책적 의지를 분명히 밝히고, 한반도의 지속 가능한 평화와 공동성장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평화교류협력 정책을 추진해 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공리공영·유무상통 원칙에 따라 남북 주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교류협력 기반 회복, 공동성장 여건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어 12월 2일 제22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출범회의 기념사에서는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으로 평화와 경제가 선순환하고 남북이 공동 성장하는 길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남북경제협력의 단계적 재개를 통해 '한반도 리스크'를 '한반도 프리미엄'으로 전환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정부는 한반도의 지속 가능한 평화와 공동성장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 수단으로서 평화교류협력 정책을 전면 재정비하였다. 기존의 관리·통제 위주의 접근에서 벗어나 민간의 자율성과 주도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정책 기조를 전환하고, 향후 남북관계 재개 가능성에 대비하여 교류협력의 제도적·구조적 기반을 선제적으로 복원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먼저, 정부는 남북교류협력 추진 기반을 재건하기 위해 정책·조직·제도 전반에 걸친 정비를 추진하였다. 북한 주민 접촉을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하던 내부 지침을 폐지하고 단순 접촉신고는 원칙적으로 수리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정상화하였다. 아울러, 교류협력 전담 조직인 '평화교류실'을 신설하여 교류협력 재개 준비와 새로운 협력 구상 기능을 강화하였다. 이와 함께, 정책

자문위원회, 전문가 워크숍, 지방자치단체 협의체 등을 운영하여 민관 협력과 중앙-지방 정부 간 협력 거버넌스를 강화하였다.

한편, 정부는 한반도 평화경제 및 공동성장 기반 조성을 위해 남북경제협력 재개 여건을 체계적으로 조성하였다. 정부는 금강산-원산 연계 관광 등 새로운 관광 협력 모델을 검토하고, 철도·도로 협력 분야에서는 남북중 등 다자협력 방식의 철도협력사업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고자 노력하였다. 또한, 남북경제협력 중단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협·교역·금강산관광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경영 실태조사, 기금 상환 유예, 판로 개척 지원 등 실질적 지원을 통해 경제협력 재개에 대비한 역량 유지를 지원하였다.

정부는 정치·군사적 상황과 무관하게 인도적 협력을 우선으로 추진한다는 원칙도 일관되게 견지하였다. 북한의 국경 봉쇄와 국제기구 철수로 인해 인도적 상황 파악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제기구와 민간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보건의료, 기후환경, 재난 대응 등의 분야에서 협력 재개를 준비하였다.

아울러, 정부는 평화경제특구와 개성공업지구의 발전적 재개를 중점 과제로 설정하고 관련 전담 조직을 신설하였다. 정부는 제1차 평화경제특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또한,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의 사과와 함께 경영 안정화와 판로 지원을 병행함으로써 신뢰 회복과 향후 정상화 여건을 조성하려고 노력하였다.

제1절

남북교류협력 추진 기반 강화

1. 교류협력 기반 재건을 위한 정책 전환

정부는 장기간의 남북관계 경색과 교류협력 위축 상황을 감안하여, 남북교류협력의 기반을 재건하고, 민간의 자율성과 주도성을 지원·촉진하는 방향으로 정책 기조를 전환하였다.

정부는 우선, 7월 북한 주민 접촉을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하는 근거가 된 「북한 주민 접촉신고 처리 지침(2023년 6월 제정)」을 폐지하였다. 해당 지침 폐지 이후, 행정 내부 기준에 따른 과도한 사전 통제를 해소하고, 민간 분야의 단순 접촉신고는 원칙적으로 수리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크게 낮아졌던 접촉신고 수리율도 점차 정상화하였다. 또한, 정부는 각종 위반 사항에 대한 모니터링 목적으로 2023년 8월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에 설치했던 「남북교류협력 위반신고센터」의 운영도 중단하였다.

사전 접촉신고 수리율

(2025년 12월 말 기준)

구분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	윤석열 정부	이재명 정부
수리율	99.7%	97.6%	95.6%	99.8%	62.9%	98.4%

* 수리율 계산 시 철회/검토 중 건수 제외

그동안 대폭 축소되었던 통일부의 교류협력 전담 조직의 규모와 기능도 복원하였다. 정부는 11월 4일 통일부 내에 '평화교류실'을 신설하여 남북교류협력 재개를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새로운 형태의 교류협력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였다. 또한, 정부는 '남북교류협력 추진 기반 재건 및 실질적 지원체계 구축'을 국정과제로 선정하는 등 향후 남북관계 재개에 대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추진하였다. 이를 통해, 민간 교류협력의 생태계를 선제적으로 복원하고, 지속 가능한 교류협력 추진 기반을 구축하고자 하였다.

2. 교류협력 법·제도 개선

정부는 교류협력 기반 재건을 위한 정책 전환을 안정적으로 뒷받침을 할 수 있도록, 관련 법·제도의 점검과 개선을 추진하였다. 지난 1990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하 「남북교류협력법」)이 제정된 이후, 남북관계 환경과 교류 여건은 크게 변화해 왔으며, 이를 반영하기 위한 법·제도의 개선 필요성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정부는 민간교류를 활성화하고 교류협력을 지원·촉진하기 위해 국회에서 발의된 관련 법안에 대한 입법을 지원하였다. 제22대 국회에서는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 9건과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안 5건이 발의되어 논의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되어 왔던 북한 주민 접촉신고를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로 전환하는 방안과 남북협력기금을 교류협력 기반 조성 사업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기금 지원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

정부는 보다 체계적으로 법·제도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법제화를 추진하기 위해 10월 교류협력 민간단체 관계자, 남북협력사업 유경험자, 법률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교류협력 법·제도 자문단'을 발족하였다. 자문단은 입법 진행 상황과 주요 쟁점을 검토하고, 중장기 우선 추진 과제 등을 논의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입법화 및 제도화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국민이 보다 편리하게 남북교류협력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의 유지 관리와 이용 환경 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2025년에는 민원서

불러오기 기능을 추가하였고, 모바일 민원서 상세 화면과 통합검색 결과 현황판 등 시스템 서비스를 개선하였다.

3.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거버넌스 강화

정부는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민관 거버넌스를 강화하기 위해 2월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전체회의를 통해 2025년 통일부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설명하였다. 이후 분과별 자문과 소통을 통해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였으며, 4월과 9월에는 교류협력 분야 정책자문회의를 개최하여 관련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제언을 수렴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였다. 또한, 12월에는 전문가 워크숍을 개최하여 '평화교류실' 신설 이후 민관 네트워크를 재정비하고 평화공존과 공동성장의 한반도를 위한 남북교류협력 사업 방안을 함께 모색하였다.

정부는 남북교류협력의 주요한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도 강화하였다. 8월에는 전국 17개 광역시·도가 참여한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실무협의회를 개최하였고, 9월에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와 시·도 통일업무 담당자 워크숍을 개최하여 '국민주권정부'의 한반도 정책에서의 지방자치단체 역할 등 지방자치단체 통일업무 활성화에 대해 논의하였다. 12월에는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정책협의회를 서면으로 개최하여 현재의 남북관계 상황에서도 추진 가능한 사업 발굴의 필요성과



지자체 남북교류협력 실무협의회(8.22.)



시·도 통일업무 담당자 워크숍(9.11.)

지방자치단체 남북협력기금의 안정적인 관리·운영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또한,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시·도지사협의회 등 유관기관과 교류협력 행사나 단체장 면담 등을 계기로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한 상호 이해를 증진하였다.

한편, 정부는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이하 '교추협')를 3회 개최하여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발굴조사 관련 사업 등 총 12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 교추협은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라 설치된 협의체로 통일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관계 부처의 차관급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들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개최 현황 및 주요 의결 내용

차수	일자	방식	주요 심의·의결 내용
제337차	1.21.	서면	2025년 남북협력기금 운용계획(안) 등 8건
제338차	2.27.	서면	2024년 남북협력기금 결산보고 등 3건
제339차	10.13.	서면	2025년 남북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등 1건

제2절

한반도 평화경제 및 공동성장 미래 준비

1. 「한반도 평화경제 미래비전」 제시

정부는 한반도의 평화를 바탕으로 남북이 함께 번영할 수 있는 공동성장 전략을 추진한다는 입장 하에 평화경제 구상을 구체화해 나가고 있다. 평화경제 구상은 평화가 경제협력을 촉진하고, 경제협력이 다시 평화를 공고히 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여 한반도의 평화공존과 공동번영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한반도 평화경제 미래비전」 기본계획(안)을 마련하기 위한 분야별 전문가 자문을 실시하고, 「한반도 평화경제 미래비전 협력모델 구축」 연구용역을 진행하여 북한의 수요를 반영한 협력 프로그램 개발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또한, 정부는 「한반도 평화경제 미래비전 국제세미나」를 개최(11.25.)하여 장기간 중단된 남북경제협력 사업의 재개 및 발전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를 통해, 평화경제 구상에 반영할 정책과제를 논의하고 국내외 공감대 형성을 추진하였다.

정부는 앞으로 평화경제를 실현하기 위해 남북한의 여건과 수요, 국제환경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남북 간 협력의 우선순위가 높은 기후·환경, 관광, 인프라 분야들을 중심으로 세부 사업별 추진 방안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한반도 평화경제 미래비전 국제세미나(11.25.)

2. 남북경제협력 사업 재개 추진

(1) 남북관광협력

정부는 한반도 평화경제 및 공동성장의 미래 준비를 위해 남북관광협력 재개를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발전적 재개를 모색하였다.

우선 정부는 남북관광협력 재개에 대한 국내 공감대 확산을 위해 관련 업계 및 기업과의 소통을 지속하였다. 8월 12일 통일부장관은 경협·교역·금강산관광 관련 기업·단체와 면담을 갖고, 금강산 관광을 비롯한 남북경제협력 사업의 발전적 재개 방안에 대한 기업들의 의견을 청취하였다. 또한, 통일부장관은 현대그룹 현정은 회장과의 면담(9.22.)에서 금강산 관광협력 사업의 정상화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피력하고, 남북이 함께 금강산 관광의 발전적 미래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통일부장관, 경협·교역·금강산 기업 단체 면담(8.12.)



통일부장관, 현대그룹 현정은 회장 면담(9.22.)

통일부는 12월 19일 대통령 업무보고 계기, 국제 원산갈마 평화관광의 단계적 추진 방안을 수립하였다. 1단계로 재외동포 고향방문 형식의 개별관광 추진, 2단계로 중국과 협력하여 남북중 환승관광 프로젝트로 업그레이드, 3단계로 이산가족을 시작으로 우리 국민의 북한 관광을 추진하는 계획이다.

당면하여 정부는 재외동포 원산갈마 평화관광 성사를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적극 강구해나갈 것이다. 아울러, 남북관광협력을 발전적으로 재개하고, 「한반도 국제 평화관광」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국제사회와 적극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2) 남북 철도·도로협력

정부는 남북간 경제공동체 건설의 핵심 인프라인 철도·도로 연결을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발전적 재개를 위해 노력하였다.

경원선 남측구간 복원사업 재개 준비를 위해 국토교통부,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 등과 유관기관 회의를 개최(8.11.)하고, 공사 부지 등 현장점검(9.16.)을 실시하였다. 남북 철도·도로협력 관련 전문가·유관기관과도 수시로 협의(11.19., 11.21., 12.11.)하며, 사업 재개 및 향후 추진 방향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

통일부는 대통령 업무보고(12.19.) 계기 서울-평양-베이징 고속철도 연결 구상을 수립하였다. 한중·국제기구 협력을 통해 고속철도 연결을 추진하고, 이와 병행하여 북한 철도 현대화를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당면하여 서울-베이징 고속철도 연결을 위한 준비 작업으로서 한중 공동연구를 추진해 나가면서, 북한의 참여를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중국·러시아, 국제기구(OSJD 등)와 적극 협력하여 단절된 남북 철도를 연결하고, 장기적으로 대륙철도(TCR, TSR)와의 연결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3) 경협기업과의 소통·협력 강화

남북관계 경색 및 북한의 대남 단절 기조 유지로 남북 간 경제협력 중단이 지속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남북경제협력 중단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협·교역·금강산 기업의 애로사항 파악 및 경영안정화 지원 등을 위해 「경영 현황 실태조사」를 추진(6.11.~23.)하였다.

9월에는 「남북경협 기업인 초청 세미나」를 개최(9.18.)하여 과거 남북경제협력 사업의 경험을 공유하고, 발전적 남북경협 재개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또한, 정부는 경협기업의 경영안정화를 위해 2025년부터 소비재 박람회 「2025 메가쇼」(11.13.~16.) 참가 지원 등 기업의 판로 개척 및 홍보·마케팅 등 맞춤형 지원사업을 추진하였다.

정부는 한반도 평화경제와 공동성장 기반 유지를 위해 경협기업들이 경협 역량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극 소통하고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3. 비무장지대(DMZ) 평화적 이용

정부는 DMZ의 생태·평화적 가치를 활용하여 세계인들이 찾는 한반도의 평화 관광 명소로 개발하기 위해 국정과제로 'DMZ 국제 생태·평화관광 협력지구 개발'을 선정(국정과제 118-3번)하는 등 DMZ 평화적 이용을 다시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먼저, DMZ 평화적 이용 추진을 위한 기반과 이행 체계 마련에 착수하였다. 정부는 이를 위해 약 3년 만에 접경협력과를 평화교류실 아래로 재설치하고, DMZ 보전과 평화적 이용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국회에서 발의된 관련 법률안들의 제정을 지원하였다.

또한, 정부는 9월 통일부·외교부·국방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기후에너지환경부를 비롯한 9개 중앙행정기관과 인천광역시·경기도·강원도 3개 광역단체 등 총 12개 기관으로 구성된 「DMZ 평화적 이용 범정부 협의체」를 발족하였다. 협의체에서는 국정과제 추진 방향을 협의하고 해외사례 조사 및 주요 현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정부는 앞으로 DMZ 평화적 이용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지속 가능성과 안정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고, 국내외 공론화를 통해 DMZ에 대한 관심과 공감대를 높이며, 중장기 전략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정부는 「판문점 선언」 1주년인 2019년 4월 27일 고성 구간을 시작으로 운영된 'DMZ 평화의 길' 가운데 2024년 4월에 중단된 DMZ 내부 구간을 조속히 다시 개방하고, 'DMZ 평화걷기'를 2년 만에 재개하며, 'DMZ 국제포럼'을 4년 만에 다시 개최할 예정이다.

제3절

인도적 협력

1. 인도적 상황 개선에 대한 일관된 입장 견지

코로나19 이후 북한의 국경 전면 봉쇄와 북한에 상주하던 국제기구 인력의 철수 등으로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은 사실상 중단된 상황에 있다. 세계보건기구(WHO), 유엔아동기금(UNICEF) 등 유엔기구는 평양으로 복귀 필요성을 촉구하고 있으나, 북한은 반응하지 않고 있어 북한 주민의 인도적 환경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대북제재의 장기화와 국제적 공적개발원조(ODA) 감소로 인해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원 규모도 크게 축소되었다.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UN OCHA)에 따르면, 대북 지원 규모는 2001년에 3억 7,760만 달러에 달했으나 2025년에는 약 238만 달러 수준으로 급감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인도적 협력은 정치·군사적 상황과 무관하게 최우선 순위로 실시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해 왔다. 특히, 남북협력기금 편성 시 인도적 협력 분야에 재원을 우선 배분하고 있으며, 남북 간 소통 채널이 복구되면 과거 남북이 합의한 사항부터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산림을 포함한 민생협력 예산을 800억 원 증액한 총 6,676억 원으로 편성하였다. 또한, 12월 2일 제22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출범회의 기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남한과 북한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협력으로 기후환경, 재난 안전, 보건의료 등의 사업부터 차근차근 시작해 나갈 것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2. 국제·민간 등 다양한 협력 통로 복원 노력

정부는 정치·군사적 상황과 무관하게 인도적 협력을 추진한다는 원칙하에 국제사회·민간단체와 협력하여 북한의 인도적 상황에 대한 다각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였다.

우선, 민간 차원의 대북 소통 채널 복구를 목표로 민간 대북접촉을 전면 자유화하였다. 북한이 대남기구를 폐지하여 과거 민간단체가 협의해 오던 채널이 사라진 상황이나, 30여 개의 민간단체가 접촉 채널을 복구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아울러, 정부는 민간단체와 민간 차원의 대북 접촉 상황을 공유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가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하였다. 특히, 통일부장관은 8월 4일 남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북민협) 회장단과의 면담을 진행하면서 단체들의 북한과의 접촉 결과를 보아가며 향후 남북협력기금 지원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언급하였다.

한편, 국제기구와의 협력도 지속하였다. 세계식량계획(WFP), 유엔아동기금(UNICEF), 세계보건기구(WHO) 등 주요 국제기구 관계자와 면담을 통해 유엔기구의 북한 복귀 관련 준비 상황을 공유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모색하였다. 특히, 유엔기구 중 유일하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유엔아동기금(UNICEF)과 함께 북한 영유아 백신접종 상황을 평가하고, 진행 중인 사업과 협력할 수 있는 창의적 방안을 찾아나가기 위한 협의를 지속하였다.

아울러, 결핵퇴치국제협력사업단(STOP TB-Partnership) 사무총장 면담(9.15.) 등을 통해 국경 봉쇄로 북한 내 결핵 진단·치료에 공백이 발생하고 있는 데 대해 우려를 공유하고, 북한이 호응해 나오기 이전이라도 공동연구 등 협력을 준비할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함께하였다.

세계식량계획(WFP) 및 세계보건기구(WHO)와 향후 현장 복귀 및 사업 재개 여건 조성 시 적극 협력하기로 하고, 북한의 인도적 상황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였다. 정부는 인도적 협력을 위한 민간·국제사회 통로 복원을 목표로 앞으로도 국제기구·민간단체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통일부장관, 북민협 면담(8.4.)

3. 인도적 협력을 위한 기반 조성

정부는 전문가·유관기관과 함께 포럼 및 세미나를 개최하여 북한의 취약계층의 건강·영양, 인도적 위기 대응 등 분야별 상황을 평가·진단하고 향후 대응 방향을 모색하였다. 특히, 2025년에는 보건의료, 기후환경, 재난 대응 등 남북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공동으로 대응해야 할 분야를 우선 협력과제로 설정하였다. 정부는 두 차례 보건의료 세미나를 개최(6.13., 12.5.)하여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토대로 감염병 대응과 병원 현대화 등을 포함한 남북보건의료 협력 방안을 마련하였다.

또한, 정부는 기후·재난 분야와 관련해서 세 차례 포럼을 개최(7.11., 9.17., 11.21.)하였다. 포럼에서는 기후, 환경, 산림, 생태계 등 기존 남북 합의사항에 대한 기관별 준



지속 가능 발전 협력 방안 세미나(7.11.)



기후대응 협력 의제 발굴 간담회(9.17.)



한반도 기후환경협력 포럼(11.21.)



보건의료 전문가 세미나(12.5.)

비 현황을 공유하는 동시에,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산림녹화 지원, 탄소배출권 거래 등 향후 새롭게 추진할 수 있는 호혜적인 협력 모델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한편, 정부는 매년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를 통해 청년들의 남북교류와 인도적 협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관련 분야의 청년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인도협력 아카데미」 과정을 운영해 오고 있다. 2025년에도 상·하반기에 각각 한 차례씩 총 두 차례의 아카데미를 운영하였고, 총 72명이 과정을 이수하였다.

아카데미에서는 남북 인도적 협력의 역사와 현황, 과거 북한에서 진행한 사업에 대한 현장 전문가의 경험을 공유하였다. 또한, 북한 주민 접촉신고·물품 반출입·제재면제 절차 등 인도협력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절차를 교육하였다. 참가자들은 남북출입사무소와 도라산역을 방문하여 남북교류 현장을 직접 체험하였으며, 소그룹별로 협



제1차 인도협력 아카데미(3.13.~4.10.)



제2차 인도협력 아카데미(8.20.~9.24.)

력사업 아이디어를 구상하고 발표하는 활동에도 참여하였다. 이를 통해 청년들이 인도적 협력 분야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창의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제4절

평화협력지구 추진

1. 평화경제특구 조성 추진

정부는 11월 개성공업지구 등 남북이 합의한 지구(남북협력지구)와 평화경제특구를 전담하기 위한 조직으로 '평화협력지구추진단'을 신설하였다. 이를 통해, 평화경제특구 조성 추진과 개성공단의 발전적 재개를 위한 조직적, 인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평화경제특구는 남북 간 경제적 교류와 상호 보완성을 증대하고, 장기적으로 남북경제공동체를 실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북한 인접 지역에 지정·고시된 구역을 의미한다. 정부는 2023년 12월 시행된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평화경제특구법」')에 따라 2025년 「제1차 평화경제특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평화경제특구 대상 지역을 확대하는 등 관련 제도를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다.

통일부장관은 「평화경제특구법」에 따라, 평화경제특구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해 계획기간이 10년 이상인 「평화경제특구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3월부터 12월까지 산업연구원을 연구용역 수행기관으로 선정하여 관련 연구를 진행하였다. 또한, 북한 인접 지방자치단체 담당자가 참여하는 지자체협의회를 개최하여 「평화경제특구 기본계획」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제1차 평화경제특구 기본계획(안)」을 마련하였다.

이후 정부는 '평화경제특구위원회' 제2차 회의를 서면으로 개최(12.16.~18.)하여 「제1차 평화경제특구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하였다. 평화경제특구위원회는 통일부

장관이 위원장을, 국토교통부차관이 부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13개 부처 차관급 공무원과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평화경제특구 비전·목표·추진 전략 및 추진 과제

비전	평화와 번영이 공존하는 남북경제공동체의 기반 마련		
추진 목표	• 남북교류협력에 기여하는 평화경제특구 지정 및 조성 • 투자유치, 일자리 창출 및 정주여건 개선을 통한 지역경제 성장 • 지속 가능한 한반도 평화경제 기반 마련을 위한 추진 체계 구축		
추진 전략 및 추진 과제	추진 전략		10대 추진 과제
	1. (평화경제) 남북경협 기반 마련		(1-1) 평화경제특구 지정·조성 (1-2) 남북경협 인프라 확충 (1-3) 평화경제특구를 기반으로 남북경제협력 추진
	2. (지역경제) 지역 주도의 차별화된 특구 조성		(2-1) 입주기업 유치를 위한 투자 지원 (2-2) 평화경제특구 개발사업 지원 (2-3) 외국인 투자 환경 개선 (2-4) 역사·관광·문화 등 비산업 자원의 평화경제 동력화
	3. (추진 체계) 효율적인 특구 추진 체계 구축		(3-1) 평화경제특구 성과 제고를 위한 법·제도 개선 (3-2)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효율적 협업 체계 구축 (3-3) 특구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발전모델 개발

또한 정부는 「평화경제특구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북한 인접 지역의 범위를 당초 15개 시·군(강화군, 옹진군, 고양시, 파주시, 김포시, 양주시, 포천시, 동두천시, 연천군, 춘천시,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에서 가평군과 속초시를 추가한 17개

시·군으로 확대하였다.

정부는 평화경제특구 대상 지역 지방자치단체와의 소통도 지속하였다. 평화경제특구 대상 지방자치단체를 방문(광역 3회, 기초 8회)하여, 평화경제특구 준비 상황 등을 확인하였으며, 세미나와 토론회를 통해 전문가 및 지역사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부의 추진 구상을 설명함으로써 평화경제특구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하였다.



경기지역 평화경제특구 공감대 형성 세미나(8.27.)



제2차 평화경제특구 지자체협의회(11.19.)

2. 개성공단 기업 지원 및 소통 강화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2016년 개성공단 운영이 전면 중단된 이후에도 남북관계가 개선될 경우 공단이 다시 가동될 수 있다는 기대 아래 경영활동을 이어 나가고 있다. 그러나, 장기간의 공단 운영 중단으로 인해 일부 기업은 정상적인 기업 운영이 힘들 정도로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개성공단 입주기업과 단체의 애로사항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과 소통을 강화하였다.

먼저, 통일부장관은 개성공단 기업 대표들과의 간담회를 열어 정부 차원에서 처음으로 개성공단 중단에 대해 공식적인 사과를 하고 남북대화 재개 시 기업의 방북 등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한 실질적 지원도 병행하였다. 남북협력기금 대출을 받은 100개 기업을 대상으로 대출 원리금 상환 유예와 만기 연장 등의 조치를 실시하여 금융 부담을 완화하였다.

또한, 정부는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다양한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하였다. 기업의 수요를 반영하여 제품개발, 홍보·마케팅, 시험분석 등 분야별로 총 19개 기업에 지원금을 지급하였다. 아울러, 판로 확대를 위한 소비재 박람회(메가쇼, 파주 장단콩 축제 등) 참여를 지원하고, 라이브 커머스 등 온라인 홍보·판매·교육을 통해 기업의 자생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정부는 기업운영과 관련한 민원 및 법·세무 상담 등 분야별 애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상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였다. 이를 통해,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향후 공단 재개에 대비하여 경영 역량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였다.



통일부장관, 개성공단 기업 대표 간담회(7.31.)



2025 메가쇼(11.13.~16.)

04

사회문화협력

제1절 남북사회문화협력 추진 기반 강화

제2절 이산가족 문제 해결 노력

제3절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 해결 노력

제4절 남북인권협력 추진

2025 한반도 평화공존의 기록들





UNIFICATION WHITE PAPER

제4장

사회문화협력

이재명 정부는 평화·통일기반을 차분하게 다져 나간다는 차원에서 대북 민간단체 지원을 지속하면서, 분단의 고통을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였다. 직접적인 남북교류가 사실상 불가한 상황에서도 대북 민간단체의 역할과 역량을 강화하여 향후 남북 민간교류의 토대를 유지하고자 하였다. 또한, 이산가족과 납북자 문제는 분단으로 발생한 대표적인 인도적 과제라는 점에서, 국민의 공감대 형성과 참여 확대를 위해 노력하였다. 아울러, 남북인권협력 또한 북한 주민의 인권상황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국내외 협력 기반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추진하였다.

정부는 민족 동질성 회복 사업도 지속하였다. 『겨레말큰사전』 편찬 사업과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 발굴 사업 성과를 국민에게 알리고, 이를 통해 남북교류협력의 필요성과 의미를 확산하고자 하였다. 또한, 종교·학술·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대북 민간단체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함으로써 남북교류협력 네트워크를 유지·활성화하였다.

정부는 분단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우리 국민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한 노력도 이어갔다. 우선, 「제5차 남북 이산가족 교류촉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이산가족·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 해결을 위한 중장기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또한, 「이산가족의 날」, 「6.25 전쟁 납북자 기억의 날」 기념행사 등을 통해 분단으로 인한 국민의 아픔을 위로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공감대 확산 노력도 기울였다. 아울러, 국제사회가 이산가족·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국제협력도 강화하였다.

남북인권협력 분야에서는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정착과의 조화를 고려하면서, 북한 주민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증진시키기 위해 북한인권 정책의 기조를 남북인권협력을 중심으로 재정립하였다. 이를 위해, 국내외 전문가와 국제기구가 참여하는 국제회의를 개최하여 남북인권협력 방안을 논의하였고, 다양한 주제를 다루는 「2025 인도·인권 상호대화」 토크콘서트와 라운드테이블 행사를 진행하였다.

또한, 정부는 민간단체 공모 방식으로 북한인권 증진 활동 지원사업을 실시해 시민사회와 북한인권 관련 협력을 강화하였다. 아울러, 북향민을 대상으로 북한 인권 실태를 조사·기록하고, 이를 법무부 인권기록보존소에 이관하여, 향후 남북인권협력 정책 수립과 북한 인권 상황 분석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1절

남북사회문화협력 추진 기반 강화

1. 『겨레말큰사전』 편찬 사업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이하 '편찬사업회')는 남과 북, 해외에서 사용하고 있는 '겨레말'을 집대성하고 민족 동질성을 회복하기 위해 2005년 설립되었다. 편찬사업회는 그동안 서울, 평양, 금강산, 중국(베이징, 선양, 다롄) 등에서 총 25회의 남북공동편찬회의(이하 '공동회의')를 개최하여 『겨레말큰사전』에 수록할 약 30만 7천 개의 표제어를 선정·집필하였다.

2015년 12월 이후 공동회의가 중단된 상황에서도 2021년 3월에 대북 협의용 『겨레말큰사전』 가제본(1질 10권)을 제작하고 2023년 6월에 『미리 만나는 겨레말작은사전』(통합본)을 발간하는 등 남북한 언어의 이질성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다. 편찬사업회는 법정 기한인 2028년 4월 내 『겨레말큰사전』 종이사전 및 『전자 겨레말큰사전』 발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2024년과 2025년에는 표제어 원고의 교열과 정비에 집중하였으며, 동시에 『전자 겨레말큰사전』 정보화 전략 계획(ISP)을 수립하고 원고 전산화도 추진하였다.

또한, 편찬사업회는 『겨레말큰사전』 편찬 성과를 국민에게 알리고, 그 결과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였다. 2025년에는 '지역어로 시 창작 도전기'를 주제로 「전국 겨레말 나들이 우리 동네 시인들」 영상을 제작(10.10.)하였다. 또한, 유네스코와 함께 토착어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제6회 유네스코-겨레말큰사전 국제학술포럼」을 개최(10.23.)하였다.

편찬사업회는 교육 프로그램인 겨레말문화학교도 운영하였다. 봄·가을학기를 통해 편찬사업회와 대학교, 관련 기관 등이 참여하여 남북 언어와 교류협력의 의미를 주제로 다양한 강좌를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남북한의 언어 차이를 이해하고, 장기적으로 남북 간 언어 통합과 민족 동질성 회복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전국 겨레말 나들이 '우리 동네 시인들'(10.10.)



제6회 유네스코-겨레말큰사전 국제학술 포럼 개최(10.23.)


겨레말문화학교 봄학기 운영


겨레말문화학교 가을학기 운영

2. 개성 만월대 발굴 사업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 발굴조사 사업은 고려 왕조의 궁궐 유적인 만월대를 공동으로 조사·발굴함으로써 남북이 공유하는 역사적 뿌리를 확인하고 민족 동질성을

회복하기 위해 추진된 사업이다. 이 사업은 2007년부터 2018년까지 총 8차례 실시되었다. 남북공동 발굴이 중단된 이후에도 정부와 관련 기관은 그동안의 발굴 성과를 활용하는 사업을 지속하였다. 우선, 8차례의 남북공동 발굴 성과를 활용하여 개성 만월대 디지털 기록관(manwoldae.org) 운영, 개성 만월대 디지털 복원 사업 및 디지털 복원 플랫폼 대국민 서비스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다.

특히, 디지털 기록관은 2020년 12월부터 대국민 서비스를 시작하였으며, 남북공동 발굴조사에서 생산된 자료 약 60만 건 중 11만 8천여 건을 디지털로 구축하여 4만 6,517점을 공개하였다. 개성 만월대 디지털 기록관에서는 발굴 유물과 조사 자료뿐 아니라, 만월대의 역사와 의미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월대의 옛 기록', '만월대 이야기' 등 새로운 콘텐츠도 함께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지 않더라도 개성 만월대의 역사와 발굴 성과를 접할 수 있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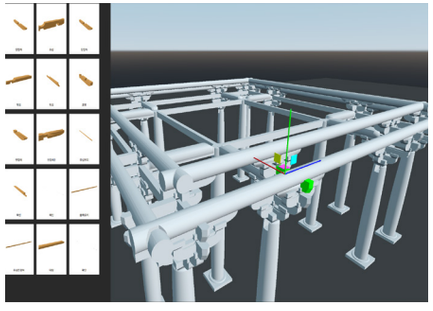
개성 만월대 디지털 복원 콜로키움(6.26.)



개성 만월대 발굴 고려청자 전문가 특강(6.26.)



개성 만월대 디지털 복원 학술대회(12.5.)



개성 만월대 디지털 복원 재현 공개(12.5.)

개성 만월대 디지털 복원 사업은 고려 황궁의 모습을 3D 데이터로 복원하여 만월대를 체험할 기회를 제공하고자 2021년부터 5년간 추진한 사업으로 2025년에 마무리하였다. 개성 만월대 디지털 복원 콜로키움(6.26.), 개성 만월대에서 발굴된 고려청자 관련 전문가 특강(6.26.), 개성 만월대 디지털 복원 결과보고회(11.14.), 개성 만월대 디지털 복원 학술대회(12.5.)를 개최하여 사업 성과를 국민에게 공유하였다. 또한, 개성 만월대 디지털 복원 플랫폼을 일반에게 공개하여 북한 지역에 위치한 개성 만월대를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현실을 보완하고자 하였다. 이 플랫폼은 국민에게는 역사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연구자들에게는 자료 공유와 학술 교류를 위한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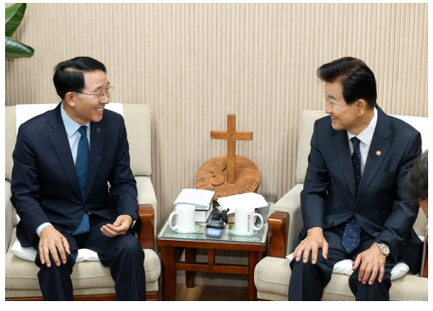
3. 종교 교류협력 네트워크 활성화

남북 간 사회문화교류가 중단됨에 따라 종교 분야의 교류협력도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정부는 종교계가 남북화해와 협력에 기여할 수 있도록 불교, 기독교, 천주교, 원불교 등 주요 종교계와의 소통을 지속하였다.

통일부장관은 취임 직후 주요 계기마다 종단 지도자를 예방하여 남북 간 교류 재개,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전환을 위한 종교계의 지지와 협력을 요청하였다. 예방



통일부장관,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 예방 (8.4.)



통일부장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김종생 목사 예방 (9.12.)



통일부장관, 천주교 정순택 대주교 예방(10.23.)



통일부장관, 원불교 나상호 교정원장 예방(12.17.)

을 통해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의 주요 방향과 기조를 설명하고, 남북 종교 교류의 필요성과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종교계는 종교 교류를 비롯해 민간교류 활성화를 위한 대북 접촉 적극 허용 등 정부의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특히, 남북관계 단절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종교계 차원에서 국제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교류의 계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아울러, 대북 인도적 지원, 북향민 정착지원, 통일교육 등 종교계가 중요한 역할을 해 온 분야 전반에 대해서도 폭넓게 의견을 교환하였다.

또한, 통일부차관은 「화해와 평화의 교회 창립 예배」(8.11.), 「8.15광복 80주년 기념 남북의 평화와 화합 기원 법회」(8.14.)에 참석하는 등 종교계와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4. 기타 민간교류 추진

2025년 북한은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지역 예선」, 「2025 아시아역도선수권대회」(5.9.~15.), 「2025 세계수영선수권대회」(7.11.~8.3.), 「2025 FIFA U-17 여자 월드컵」(11.9.) 등 각종 국제경기에 적극적으로 참가하였다. 특히, 북한은 모로코에서 개최된 「2025 FIFA U-17 여자 월드컵」 결승에서 네덜란드를 상대로 3대0으로 우승하였다. 비록, 국제경기에서 남북 간 유의미한 접촉과 교류는 성사되지 않았으나, 미얀마

양곤에서 개최된 「AFC 여자 챔피언스리그(AWCL)」(11.12.)에서 남한의 '수원FC위민' 팀과 북한의 '내고향' 팀과의 남북한 경기가 진행되기도 하였다.

한편, 북한이 남북 간 민간교류를 담당해 왔던 대남기구를 폐지함에 따라 민간단체의 교류협력 추진은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관련 민간단체·유관기관과 소통을 지속하고, 역량을 강화하면서 향후 교류협력 재개 상황에 대비하였다. 정부는 사회문화교류분야의 남북협력기금 사업자를 대상으로 예산집행 교육을 실시(2.21.)하고, 남북 사회문화교류 및 대북 인도지원 관련 38개 단체 관계자를 대상으로 초청행사를 개최(9.26.~27.)하였다. 아울러 '평화공존과 번영의 한반도를 구현하기 위한 과제'를 주제로 통일부장관 특강도 진행(9.26.)하였다. 이를 통해, 정부는 대북 민간단체와 함께 향후 남북 간 교류와 협력의 재개 가능성을 모색함과 더불어, 민간단체 상호 간에도 소통과 협력을 촉진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대북 민간단체 초청행사(9.26.~27.)



통일부장관, 대북 민간단체 초청행사 특강(9.26.)

제2절

이산가족 문제 해결 노력

1. 이산가족 현황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이하 '「남북이산가족찾기」', reunion.unikorea.go.kr)에 등록된 이산가족찾기 신청자는 2025년 12월 말 기준으로 총 13만 4,516명이다. 이 중 10만 148명이 사망하여 생존자는 3만 4,368명이다.

이산가족찾기 신청자 중 생존자 현황

(2025년 12월 말 기준)

① 연령별

구분	90세 이상	89~80세	79~70세	69~60세	59세 이하	합계
인원(명)	10,885	11,655	6,277	3,554	1,997	**34,368**
비율(%)	31.7	33.9	18.3	10.3	5.8	**100**

② 출신지역별

구분	황해	평남	평북	함남	함북	경기	강원	기타	합계
인원(명)	6,612	3,436	1,987	3,040	1,046	1,047	503	16,697	**34,368**
비율(%)	19.2	10.0	5.8	8.9	3.0	3.0	1.5	48.6	**100**

③ 성별

구분	남자	여자	합계
인원(명)	20,955	13,413	**34,368**
비율(%)	61.0	39.0	**100**

④ 거주지별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인원(명)	8,614	1,425	824	2,751	330	715	289	10,396	2,073	1,170
비율(%)	25.1	4.2	2.4	8.0	1.0	2.1	0.8	30.2	6.0	3.4

구분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세종	해외	합계
인원(명)	1,097	581	505	1,066	883	370	140	1,139	**34,368**
비율(%)	3.2	1.7	1.4	3.1	2.6	1.1	0.4	3.3	**100**

생존해 있는 신청자 중 70대 이상의 고령층은 2만 8,817명(83.9%)이며, 평균 연령은 82.8세이다. 신청자 중 2025년에만 2,798명이 사망한 점을 고려할 때, 이산가족 문제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안이다.

2. 이산가족 교류 기반 구축 및 공감대 확산

(1) 이산가족 교류 기반 구축

정부는 이산가족의 고령화가 심화됨에 따라 이산가족 상봉과 생사 확인 등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였다.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실향민 간담회(10.3.), 제3회 「이산가족의 날」(10.4.) 이재명 대통령 축사 등 주요 계기마다 북한이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와 교류에 호응할 것을 촉구하였다.

정부는 2023년 「제4차 남북 이산가족 교류촉진 기본계획」에 이어 2025년 「제5차 남북 이산가족 교류촉진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동 계획에서는 「남북 이산가족 생사 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 추진할 이산가족 정책 방향으로,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이라는 비전 아래 2대 목표와 4대 추진 전략, 6대 중점 추진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제5차 남북 이산가족 교류촉진 기본계획」은 이산가족 고령화라는 시급한 상황에서 이산가족 생사 확인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고, 북한과의 대화를 통한 생사 확인·소식 교류·상봉의 단계적 해결,

민간교류 활성화, 이산가족의 역사와 문화를 후손 세대와 공유하는 사업을 담고 있다.

정부는 2014년부터 이산가족 사후에도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이산가족 유전자 검사 및 유전정보 보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산가족찾기 신청자를 대상

「제5차 남북 이산가족 교류촉진 기본계획」 추진 체계

비전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	
목표	이산가족 교류 재개 및 정례화	정책 추진 기반 확대 및 국내외 공감대 확산
추진 전략	① 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 간 소통체계 구축 ② 다각적·단계적 이산가족 교류 추진 ③ 이산가족 세대별·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 추진 ④ 국내외 홍보·협력 강화	
6대 중점 추진 과제 22개 세부 과제	1. 당국 차원의 이산가족 교류 재개	① 생사 확인 ② 소식 교류 ③ 대면상봉 ④ 화상상봉 ⑤ 고향 방문
	2. 민간 차원의 이산가족 교류 활성화	① 민간교류 지원제도 개선 ② 민간교류 단체 지원 및 교류 절차 홍보 강화
	3.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 해결	① 납북자 문제 해결 ② 억류자 문제 해결 ③ 국군포로 문제 해결
	4. 이산가족 교류기반 확대	① 이산가족 정보 관리 및 시스템 개선 ② 영상편지 제작 ③ 유전자 검사 ④ 이산가족 실태 파악 ⑤ 신규 이산가족 발굴 및 정책 대상 확대
	5. 이산가족 위로 및 국내외 공감대 확산	① 이산가족 초청·위로 ② '이산가족의 날' 기념행사 확대 ③ 국민 공감대 확산 ④ 국제사회 공감대 확산 및 협력 강화
	6. 이산가족 역사·문화 계승 및 후손 세대 참여 확대	① 이산가족 역사·문화 기록·보존 ② 이산가족 기념 사업 준비 및 체계화 ③ 이산 후손 세대 참여 확대

으로 유전자를 채취하여 향후 남북 간 이산가족 교류 시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세 가지 검사(상염색체, Y염색체, 미토콘드리아)를 실시하고 있다. 2025년에는 1,568명의 유전자 검사를 진행하였고, 2014년부터 2025년 12월 말까지 누적 검사 인원은 총 3만 887명이다. 유전자 검사 결과는 2015년 구축한 「이산가족 유전정보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고 있다.

또한, 2017년부터는 그동안 민간 검사기관이 보관하고 있던 유전자 검사 잔여 대상물(혈액, 타액, 모발 등)을 질병관리청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으로 이관함으로써 유전자 검체 보관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제고하였다.



제3회 「이산가족의 날」 기념행사
- 이산가족 대상 유전자 검체 채취(1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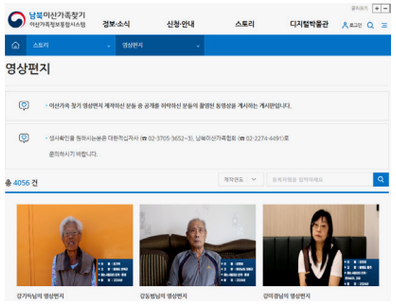


이북도민 체육대회 행사
- 이산가족 대상 유전자 검체 채취(10.19.)

정부는 2005년 국가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4,013편의 이산가족 영상편지를 제작하였고, 2008년에는 남북 간 합의에 따라 각각 20편의 영상편지를 제작하여 시범적으로 교환하였다. 2012년에는 고령 이산가족의 기록을 보존하고 향후 남북 간 교류에 대비하기 위해 희망자를 대상으로 영상편지 제작 사업을 재개하였다. 2025년에는 1,010편의 영상편지를 제작하였으며, 2005년부터 2025년 말까지 제작 편수는 2만 8,112편이다. 이 중 당사자가 공개에 동의한 4,057편의 영상편지는 「남북이산가족찾기」 누리집에 게시하고 있다. 한반도, 일본, 중국 등 동북아시아 지역을 청취 권역으로 하는 한국방송공사(KBS) 라디오 「한민족방송」과 협업하여 2022년 2월부터 매주 수요일 이산가족 영상편지의 음성을 송출하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국민이 이산가족 관련 정보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남북이

산가족찾기」 누리집을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이산가족 사연을 담은 웹툰 및 영상물과 북녘 고향 사진 서비스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남북이산가족찾기」 누리집 영상편지 게시



「한민족방송」 이산가족 영상편지 음성 송출

(2) 이산가족 위로 사업 추진 및 국민 공감대 확산

정부는 이산가족을 위로하고 이산가족 문제에 대한 국민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2023년 3월에는 민간 차원에서 기념해 오던 「이산가족의 날」(음력 8.13.)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는 「남북 이산가족 생사 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공포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25년 제3회 「이산가족의 날」 기념식을 개최(10.4.)하였다. 기념식에는 이산가족과 유관기관 관계자, 국회의원, 통일부차관 등 370여 명이 참석하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서면 축사를 통해 이산가족 문제가 우리 사회의 가장 시급한 인도적 과제임을 강조하며, 이산가족의 아픔을 위로하고, 남북 간 대화와 협력을 통한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 의지를 표명하였다. 또한, 정부는 지역별 통일+센터를 중심으로 문화행사(강원·인천·호남)를 개최하였다. 이를 통해, 이산가족 문제 해결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사회적 관심과 공감대를 확산하고자 하였다.

정부는 2008년부터 매년 국내에 거주하는 고령 이산가족을 초청·위로하는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2020년 및 2021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방식의 위로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2022년부터는 상황이 완화됨에 따라 대면 방식으로 전환하여 지





제3회 「이산가족의 날」 기념행사(10.4.)

역별로 찾아가는 위로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2025년에는 수도권(서울)·강원권(춘천)·충청권(청주·대전)·경남권(진주·사천·거제)에서 「이산가족 초청 위로 행사」를 진행하여 이산의 아픔을 위로하고 심리적 치유를 지원하였다. 또한, 정부는 설·추석 명절마다 파주시 임진각 망배단에서 개최되는 이산가족 경모 행사를 지원하였다.

한편, 정부는 이산가족의 고령화가 심화되는 상황을 고려하여, 이산가족 생애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보존하는 사업을 추진하였다. 정부는 「남북 이산가족 영상편지 및 생애기록물의 제작·수집 등에 관한 규정」(통일부훈령 제732호)을 제정·시행(12.30.)하였고, 2026년 예산에 「이산가족 생애기록물 수집·디지털화」 사업 예산으로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다. 이 사업은 이산가족의 사진, 편지, 일기, 증언, 영상 등 다양한 생애 기록물을 수집·디지털화하여 체계적으로 보존하려는 것이다. 수집된 이



충청권 이산가족 초청 위로 행사(6.26.~27.)



통일부차관, 이산가족 위로 방문(10.1.)



경남권 이산가족 초청 위로 행사(11.27.~28.)



통일부장관, 이산가족 위로 방문(12.24.)

산가족의 생애 기록물은 향후 남북 간 이산가족 상봉과 가족관계 확인에 활용될 뿐만 아니라, 분단의 역사와 이산가족의 삶, 평화의 가치를 후손에게 전하는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3. 남북 간 인도적 사안 처리

정부는 육로·해로 등을 통해 남측 지역으로 넘어온 북한 주민이 있는 경우,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의 자유의사를 확인한 뒤 귀순 또는 귀북 조치를 하고 있다. 2025년에는 서해상에서 구조된 북한 주민 2명과 동해상에서 구조된 북한 주민 4명의 귀북 의사를 확인하고, 이들을 북한으로 송환(7.9.)하였다.

또한, 정부는 우리 관할수역에서 발견된 북한 주민 사체에 대해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북한에 인수를 요청하고 있다. 북한이 이에 응답하지 않거나 인수를 거부하는 경우 관계 법령과 절차에 따라 무연고 장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2025년에는 인천 석모도 인근 해안에서 발견(6.21.)된 북한 주민 추정 사체에 대하여 북한 측에 사체 전달 계획을 통보(7.29.)하였다. 그러나, 북한이 이에 응답하지 않음에 따라 정부는 유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무연고 장례 절차를 진행(8.11.)하였다.

제3절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 해결 노력

1. 현황

납북자는 북한에 의해 강제로 납북되어 북한에 억류 또는 거주하게 된 사람으로, 6.25 전쟁 중 납북자(이하 '전시납북자')와 정전협정 체결 이후 납북자(이하 '전후납북자')로 구분된다.

2010년 제정된 「6.25 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하 '「6.25납북자법」')」에 따라 설치된 「6.25 전쟁 납북 진상규명 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정부 차원에서 작성된 납북자 명부 등을 토대로 전시납북자 전체 규모를 10만 명 내외로 추정하였다. 그러나, 위원회에서 전시납북자로 최종 결정한 인원은 4,777명이었다. 이는 정부가 납북피해 신고를 적극적으로 홍보했음에도 불구하고,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약 5년간 신고 접수되고 심사된 납북피해 사건은 총 5,505건이었기 때문이다.

전후납북자 현황(추정)

(단위: 명)

구분		어선원	대한항공(KAL)납치	군·경	기타		계
					국내	해외	
피랍자		3,729	50	30	6	20	**3,835**
귀환자	송환	3,263	39	-	-	8	**3,310**
	탈북·귀환	9	-	-	-	-	**9**
미귀환자		457	11	30	6	12	**516**

한편, 전후납북자와 관련하여 정부가 추정하고 있는 인원은 총 3,835명이다. 이 중 3,319명이 귀환하였다. 귀환자 중 3,310명은 북한이 송환하였고, 9명은 2000년 이후 북한을 탈출하여 귀환하였다. 정부는 2025년 12월 말 기준 북한에 억류된 전후납북자를 516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북한에 억류된 우리 국민은 2025년 12월 말 기준 북향민 4명을 포함하여 총 7명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북한은 2013년 김정욱 씨를 억류한 데 이어 2014년에는 김국기 씨와 최춘길 씨를 억류하였다. 북한은 이들에 대한 재판 과정을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공개한 바 있다.

미귀환 국군포로는 6.25 전쟁 중 북한군의 포로가 되어 북한에 억류된 우리 군인을 말한다. 유엔군과 공산군은 1953년 4월부터 1954년 1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전쟁포로를 교환하였다. 당시 유엔군 측은 국군 실종자의 수를 8만 2천여 명으로 추정하였으나, 공산군 측으로부터 최종 인도된 국군포로는 8,343명에 불과하였다. 이에 따라, 상당수의 국군포로가 북한에 억류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1994년 조창호 중위가 자력으로 귀환한 이후 2025년 12월 말 기준 총 80명의 국군포로가 북한을 탈출하여 귀환하였다.

2. 문제 해결 노력

정부는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한편, 이들의 명예 회복과 생활 안정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2024년 「6.25납북자법」의 개정(12.20.)으로 그동안 민간 차원에서 기념해 오던 '6·25전쟁 납북희생자 기억의 날'이 법정기념일로 지정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25년 제1회 「6.25 전쟁 납북자 기억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6.28.)하여 납북자 가족의 아픔을 위로하고 납북자들의 송환과 문제 해결을 염원하는 시간을 마련하였다.

또한, 정부는 「2025 서울 국제정원박람회」(5.22.~10.20.)에 '세송이 물망초의 연못'을 조성하는 등 문화적 접근을 통해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또한, 정부는 제58차 유엔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안」과 제80차 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안」 채택 과정에서 이산가족·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 해결을 북한에 촉구하고, 국제사회가 이 문제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6.25 전쟁 납북자 기억의 날」 기념행사(6.28.)


통일부장관, 전후납북자 단체장 및 가족 면담(8.8.)

정부는 전후납북피해자의 권익 향상과 명예 회복을 위한 지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2007년 4월 27일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치된 「납북피해자 보상 및 지원 심의위원회」는 2025년 12월 말까지 피해위로금 등 약 154억 원을 납북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지급하였다.

정부는 법정단체인 (사)전후납북자피해가족연합회에 매년 1억 8,500만 원의 국고보조금을 지급하여 고령 납북피해자에게 의료비 및 생계비 등을 지원하였다. 또한,

2007~2025년 피해위로금 등 지급 현황

(단위 : 건, 백만 원)

구분	신청	지급 결정	지급액
피해위로금	444	432	13,374
정착금·주거지원금	9	9	1,773
보상금	14	3	261
합계	**467**	**444**	**15,408**

정부는 단체장 면담, 납북자 가족 위로 방문 및 간담회도 연중 수시로 실시하였으며, 무주택 납북피해자에 대한 주거 지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아울러, 고령 귀환 납북자에 대한 생활 안정 지원을 확대하고, 부처 간 협업(통일부·경찰청)을 통해 과거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한 전후납북자 가족의 소재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 납북피해자에 대한 지원 확대를 위해 노력하였다.

한편, 전시납북자 유관 단체를 법정 단체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6.25 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 회복에 관한 법률」 개정이 의원입법으로 추진되고 있다. 법 개정이 이루어질 경우, 전시납북자 관련 단체의 안정적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전시납북자 가족에 대한 지원과 권익 보호를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 국립6.25전쟁납북자기념관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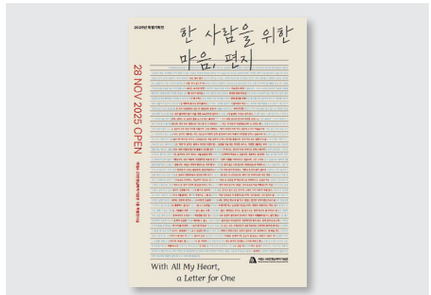
정부는 전시납북자 명예 회복 사업의 일환으로 2017년 11월 경기도 파주시 임진각 관광지 내에 국립6.25전쟁납북자기념관(이하 '기념관')을 개관하였다. 기념관은 전시납북의 아픔을 국민과 함께 나누고, 우리의 가족이자 이웃이었던 납북자들을 기억하며 납북 사건의 실상 및 평화·공존의 가치를 후손에게 일깨워 주는 공간으로 운영되고 있다.

기념관은 제1종 전문 박물관으로 전시납북자 관련 유물 6천여 점을 수집·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상설전시 및 특별전시를 운영하고 있다. 전시 유물은 주로 납북자 가족으로부터 기증받은 납북자 개개인의 사진·저작물·생활용품과 구입·복제 등을 통해 수집한 전시납북 관련 문서·신문·서적·사진·영상이다.

2025년에는 유물 287점을 새로 구입하고 '한 사람을 위한 마음, 편지'라는 주제로 특별전시를 개최하였다. 또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기증받은 유물 450여 점을 담은 『기증자료집Ⅲ』을 발간하는 등 납북문제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였다.

기념관은 젊은 세대에게 6.25 전쟁 및 납북사건의 실상을 알리기 위해 체험교육 프로그램인 「꺼지지 않는 희망-물망초에 담긴 마음」, 「잃어버린 영웅들-납북된 독립운동가」를 운영하였다. 아울러, 파주시, 경기관광공사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내·외국인의 기념관 방문을 확대하고, 납북문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을 위해 노력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2025년에는 4만 9,138명의 관람객이 방문하였으며, 개관 이후 누적 관람객은 29만 6천 명을 넘어섰다.



특별전시 '한 사람을 위한 마음, 편지' 포스터



기증유물연구자료집 「기증자료집Ⅲ」

한편, 정부는 전시납북자의 명예 회복과 권익 신장을 위해 매년 (사)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에 국고보조금을 편성·지원하고 있으며, 전시납북자 가족을 초청하여 기념관 개관 8주년 기념 특별전시 개막식 행사를 개최(11.28.)하는 등 납북자들을 기억하고 가족을 위로하는 사업도 추진하였다.





전시납북자 가족 초청, 특별전시 개막식 행사 개최(11.28.)

제4절

남북인권협력 추진

1. 남북인권협력 정책 수립·추진

정부는 남북관계 발전 및 한반도 평화정착과 조화를 이루는 방향 하에, '북한 주민 인권의 실질적 증진을 위한 남북인권협력' 중심으로 북한인권 정책 기조를 재정립하였다. 남북 간 상호 존중 원칙에 기반해, 북한의 수용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장애인, 여성, 아동 부문부터 협력을 추진하여 단계적으로 협력을 확대하고자 하였다.

정부는 북한 주민의 인권을 포괄적이며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국제사회 및 민간 부문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특히, 북한이 호응하는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의 틀을 활용하여, 남북협력을 통해 빈곤 감소, 장애인·아동 등 취약계층 지원, 보건인프라 확충 등 북한 주민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자 하였다. 정부는 북한인권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북한인권 증진 추진현황」을 논의하여 국회에 보고(9.3.)하였다.

상반기에는 '북한인권 담론의 확장과 국제연대의 새로운 지평'이라는 주제로 「2025 북한인권 국제회의」를 개최(5.19.)하였다. 회의에서는 미국·유럽연합(EU)·일본 등 주요국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북한 주민의 삶의 질 개선 방안을 논의하였다. 하반기에는 남북인권협력에 대한 공감대 확산과 정책 방안 모색을 위해 '미래지향적 한반도 평화의 도전과 과제: 평화, 발전, 인권'이라는 주제로 「2025 남북 평화·발전·인권 연계 국제회의」를 개최(12.9.)하였다. 회의의 제1세션은 '국제질서 변화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도전과 과제'라는 주제로 각 분야의 해외 전문가와 토론하였고 다양한 주

체가 협력하는 관여의 필요성에 공감하였다. 제2세션 '한반도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공동 성장을 위한 도전과 과제'에서는 유엔의 세 기둥인 평화, 발전, 인권과 연계한 남북관계 개선 방안을 논의하였다. 제3세션 '북한인권의 실질적 개선을 위한 도전과 과제: 인권-발전-평화의 상호 연계적 접근'에서는 북한의 최근 경제적 상황 등을 논의하고 국제규범과 북한의 수용성을 고려한 정책 방향을 논의하였다. 이들 국제회의를 통해 정부는 압박과 대결이 아닌 관여와 협력을 통해 북한 주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남북 평화·발전·인권 연계 국제회의(12.9.)

정부는 남북인권협력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로 「2025 인도·인권 상호대화」 토크콘서트 행사를 진행하였다. 8월 서울과 9월 부산에서 '인도적 지원을 통해 본 북한 주민 인권의 실질적 개선'이라는 주제로, 10월 서울에서는 'SDGs·교류협력·인도지원 등 남북 간 협력을 통한 북한 주민 인권의 실질적 개선'이라는 주제로 토크콘서트를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는 전문가, 학자가 중심이 되는 세미나, 학술회의와 다르게 토크콘서트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이를 통해 북한인권 문제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체감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고자 하였다. 특히, 정부는 젊은 세대가 보다 친숙하게 북한인권 문제를 접할 수 있도록 음악, 이야기, 경험 공유를 결합한 방식으로 행사를 구성하였다. 행사에는 음악가, 학자, 북한인권 활동가, 북한 방문 경험이 있는 외국인, 청년 등 다양한 분야의 인사가 참여하였다. 참석자들은 인도적 지원과 남북

협력, 국제사회의 역할, 북한 주민의 일상과 삶의 질 개선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으며, 상호 이해와 공감대를 넓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2025 인도·인권 상호대화」 1차 토크콘서트(8.29.)



「2025 인도·인권 상호대화」 2차 토크콘서트(9.24.)





「2025 인도·인권 상호대화」 3차 토크콘서트(10.17.)

「2025 인도·인권 상호대화」

구분	일시·장소	주 제
토크 콘서트	8.29., 서울	인도적 지원을 통해 본 북한 주민 인권의 실질적 개선
	9.24., 부산	인도적 지원을 통해 본 북한 주민 인권의 실질적 개선
	10.17., 서울	SDGs·교류협력·인도지원 등 남북 간 협력을 통한 북한 주민 인권의 실질적 개선
라운드 테이블	11.13.~14., 강릉	[전문가] 평화와 공존의 시대, 북한 주민의 인권과 복지
	11.14., 강릉	[청년] 평화와 공존, 그리고 북한인권: 청년세대에게 길을 묻다

또한, 정부는 젊은 세대가 북한인권 문제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새로운 형

식의 「2025 인도·인권 상호대화」 라운드테이블 행사를 진행하였다. 이번 행사는 국제기구, 학자, NGO 등 인도·인권 관련 다양한 전문가가 모여 라운드테이블 형식으로 의견을 나누고 소통하였다.

행사는 제1부 '평화와 공존의 시대를 위한 제언', 제2부 '대북인권정책: 과제와 전망'이라는 주제로 구성되었다. 참가자들은 북한인권 문제를 둘러싼 다양한 시각과 정책 방향을 논의하며, 상호 간의 간극을 줄이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특히, 청년세대 라운드테이블(11.14.)은 '평화와 공존, 그리고 북한인권: 청년세대에게 길을 묻다'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다. 지역 대학생 4~5명으로 구성된 총 5개 팀이 북한 여성, 아동, 장애인, 식량 지원, 보건의료지원 등 팀별 미션을 가지고 사전 자료 검토 및 토론을 통해 실천 방안을 도출하고 발표하는 경연을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정부는 MZ세대를 비롯한 청년층의 관심과 공감대를 확산하고 전문가·청년





상호대화 4차 라운드테이블(11.13.~14.)





상호대화 5차 라운드테이블(11.14.)

세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와 함께, 정부는 민간단체 공모 방식으로 북한인권 증진활동 지원사업을 실시해 시민사회와 북한인권 관련 협력을 강화하였다. 공모와 보조사업자 선정위원회 심사를 통해 37개 단체를 선정하여, 총 25억 8천만 원을 지원하였다. 지원 대상 단체들은 7건의 국제협력, 13건의 문화·예술, 5건의 콘텐츠 제작, 5건의 실태조사, 4건의 학술행사, 3건의 활동가 양성 사업 등을 수행하였다. 특히, 장애인·아동 인권, 에너지 인권 등 북한인권 연구 분야의 확대, 인도·아프리카·동유럽 등 국제협력 대상국 확대 등 민간의 네트워크와 전문성을 활용한 다양한 활동을 통해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기반 마련에 노력하였다.



연극 '다정미용실' 공연(7.9.)



뮤지컬 '은경' 공연(7.13.)



가나 북한인권 세미나(7.18.)



'국제협력과 함께하는 북한 장애인 재활치료의 새로운 모색' 전북 세미나(9.5.)

2. 북한인권 실태 조사·기록

북한인권기록센터(이하 '기록센터')는 「북한인권법」에 따라 북한 주민의 인권상황을 파악하고, 인권 증진을 위한 정보를 수집·기록하기 위해 2016년 9월 28일 설립되었다. 기록센터는 북한의 전반적 인권상황과 북한 주민이 겪은 구체적인 인권침해 사례에 관한 기록을 중심으로 법령에 의해 부여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기록센터는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인권 조사 원칙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정부의 북한인권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를 생산하고 있다. 하나원에 입소한 북향민을 대상으로 전반적인 북한의 인권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구체적인 인권침해 사례를 기록하는 문답서를 작성하고 있다. 문답서는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정에 따라 관리하고 있으며, 조사된 기록 원본은 「북한인권법」 제13조에 따라 매 분기 종료 후 법무부 북한인권기록보존소로 이관하고 있다.

북한인권 조사 항목은 '시민·정치적 권리(자유권)'와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사회권)' 등 인권 실태 전반을 포괄하고 있다. 조사 항목 중 '자유권'은 생명권, 신체의 자유와 안전, 이동 및 거주의 자유, 사생활의 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을, '사회권'은 식량권, 건강권, 근로권, 교육권 등을 파악하는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와 함께 여성, 아동, 장애인 등 취약계층과 북한 내 이산가족·납북자·국군포로의 인권과 관련된 실태도 조사하고 있다.

기록센터는 2017년부터 2025년까지 총 4,001명의 북향민을 대상으로 북한인권 실태를 조사하였다. 2025년 조사 대상자는 총 220명으로, 2025년 하나원에 입소한 북향민 196명(여성 181명, 남성 15명)과 2017년 이전에 우리 사회에 정착한 사회진출 북향민 24명(여성 17명, 남성 7명)이다. 조사 대상자의 성별은 여성이 90%, 남성이 10%였으며, 출신 지역별로는 함경북도 45.0%, 양강도 33.6%, 평양시 2.3% 등이었다.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구체적 인권침해 사례에 관한 기록은 총 217건으로, 기록 원본은 「북한인권법」에 따라 매 분기 종료 후 법무부로 이관하였다. 또한, 북한인권 실태 주요 조사 결과는 「북한인권 증진 추진현황」에 포함하여 매년 국회에 보고되고 있다.

05

남북대화

제1절 남북대화 재개 노력

제2절 남북회담 역량 강화

UNIFICATION WHITE PAPER

2025 한반도 평화공존의 기록들





제5장

남북대화

새 정부는 출범과 함께 대결과 적대의 남북관계에서 벗어나 대화와 협력을 통한 한반도 평화 구축 의지를 밝혔다. 정부는 2019년 이후 중단된 남북관계를 재정립하고 상호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이재명 대통령 취임식, 「6.15 남북공동선언」 25주년 기념식,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식 등 주요 계기마다 대화 재개를 촉구하는 대북 메시지를 발신하였다.

또한, 정부는 제80차 유엔총회와 「2025년 국제 한반도 포럼(GKF: Global Korea Forum)」 등 주요 국제회의를 통해서도 남북대화 의지를 강조하고 국제사회의 지지를 확보하고자 하였다. 이와 함께, 정부는 남북회담의 기획 및 운영, 연락 기능 등을 전담하는 남북회담본부를 복원(11.4.)함으로써, 향후 남북대화와 회담 재개에 대비한 조직 체계를 정비하였다.

정부는 2023년 4월 7일 이후 단절된 남북 연락채널 복원을 위해 단절 이전부터 남북이 합의하여 운영해 오던 방식대로 대북 통화를 지속적으로 시도하였다. 아울러, '남북 연락채널 복원 모색 자문단 회의' 등을 통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였다. 또한, 정부는 회담 재개에 대비하여 남북 합의사항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단계적 이행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통일부를 중심으로 유관부처와 함께 협의체를 구성하여 범정부 차원의 이행 방안을 마련하였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남북대화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서도 노력하였다. 정부는 남북회담문서를 두 차례 공개(2.13., 9.2.)하였고 QR코드를 통한 모바일 접속 및 온라인 열람 방식을 새롭게 도입하여 접근성을 강화하였다. 아울러, 국민이 남북회담과 남북출입의 현장을 체험할 수 있도록 판문점과 남북출입사무소 견학 기회를 제공하였다.

한편, 정부는 언제 남북대화가 재개되더라도 적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회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도 기울였다. 남북회담 전략자문단 회의, 남북대화 협상사례 연구모임 등을 개최하여 남북협상 및 회담 업무 역량을 강화하고, 유관기관 및 전문가와의 소통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전문성을 강화하였다. 또한, 남북통신망 운영 및 출입경 모의훈련 등을 실시하여 회담 대비 태세를 유지하였다.

제1절

남북대화 재개 노력

1. 남북회담 전담 조직 복원

정부는 한반도 문제 당사자로서 주도적 역할을 강화하고 한반도 정세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11월 4일 남북회담본부를 복원함으로써 상시적 회담 준비 체계를 구축하였다. 남북회담본부는 2023년 9월 8일 통일부 조직개편 시에 남북관계관리단의 일부로 통합되어 그동안 회담 기능과 역할이 축소된 바 있다. 이번 조직 복원 시에는 남북회담 기획 및 대책 수립, 회담 절차 운영 및 지원, 남북 간 연락 및 출입경 업무 등을 전담하는 5개 부서로 개편하여 전문성과 협상력을 강화하였다. 이로써 남북 연락채널 복원과 대화 재개를 준비하고 지속 가능한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회복하게 되었다.



남북회담본부 청사 정문 현판 교체(11.4.)



회담장 현판 교체(11.4.)

2. 남북 연락채널 정상화 노력

정부는 남북대화가 장기간 중단된 상황에서도 대화 재개 의지를 지속적으로 표명하며 북한의 호응을 촉구하는 한편, 남북 연락채널 정상화를 위해 필요한 노력을 꾸준하게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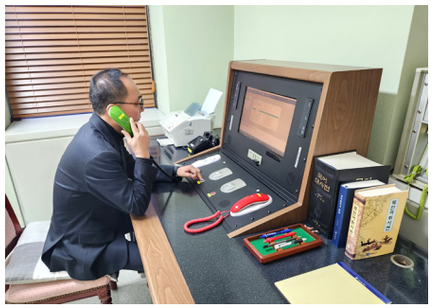
2025년 6월에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화해·협력의 남북관계를 재정립하고 남북대화 재개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주요 계기마다 일관된 대북 메시지를 발신하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사(6.4.)를 통해 북한과의 소통 창구를 열고 대화와 협력을 통해 한반도 평화를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또한, 통일부장관도 취임사(7.25.)에서 남북이 상호 공존하기 위해서는 연락 채널을 신속히 복구하고 대화를 이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정부는 「6.15 남북공동선언」 25주년 기념식(6.12.),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식, 「9.19 평양공동선언」 7주년 기념식(9.19.) 등 주요 계기마다 남북 간 실질적 긴장 완화와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남북대화 복원이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대화 재개를 위한 북한의 호응을 촉구하였다.

또한, 정부는 제80차 유엔총회(9.24.)와 「2025년 국제 한반도 포럼」(9.18.) 등 주요 국제회의를 통해서도 남북 간 대화와 소통 의지를 적극 표명하였으며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한편, 정부는 우발적인 충돌이나 재난·재해 등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호출 시도(매일 09:00, 17:00)


적십자연락사무소 호출 시도(매일 09:00)

남북 간 통신망은 최소한으로라도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하에, 남북 간 연락채널 복원을 위해 노력하였다. 정부는 2023년 4월 7일 북한의 일방적인 연락채널 중단 이후에도, 남북이 기존에 합의하여 운영해 오던 방식대로 매일 유선 정기통화(09:00 개시, 17:00 마감)를 위한 직통전화 호출을 계속해서 시도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우리 정부의 남북 연락채널 정상화 노력에 호응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남북 간 연락채널 복원을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풀(Pool)을 구성하고, 지속적인 자문이 가능하도록 '남북 연락채널 복원 전문가 자문단'을 운영하였다. 자문단은 학계·연구기관 등 통일분야 전문가와 전직 관료 등으로 구성하였고 상시 자문과 소통이 가능하도록 실무경험이 있는 전문가도 포함하였다. 정부는 자문단 회의를 세 차례(8.6., 8.27., 9.29.) 개최하여 남북 연락채널 복원 방안을 검토하였다. 회의에서는 남북 간 공식 연락채널 재가동 방안, 민간을 통한 대북 접촉 채널 모색 등을 주제로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자문 결과는 남북관계 복원과 대화 추진을 위한 정책에 반영하였다.

3. 남북 합의사항 단계적 이행 준비 체계 마련

이재명 대통령은 8월 18일에 개최된 제1차 을지 국무회의에서 기존 남북 합의 중 이행이 가능한 부분부터 단계적으로 준비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를 통해 남북 간 신뢰를 회복하고, 향후 남북대화 재개 시 합의사항을 실질적으로 이행해 나가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분명히 하였다.

남북 간에는 1971년부터 2025년 12월 말까지 총 258건의 합의가 채택되었으나, 남북관계 상황에 따라 합의가 이행되다가 중단되는 경우가 빈번하였다. 정부는 기존 남북 합의의 현황과 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현실성과 시의성이 높은 2018년 「판문점 선언」 및 「평양공동선언」을 중심으로 단계적 이행 방안을 마련하였다. 또한, 남북 합의사항의 이행 단계를 남북관계 진전 상황에 따라 3단계로 구분하고, 합의사항의 시급성과 신뢰 구축 효과, 실행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우선순위를 결정한 후 사안별 세부 이행 계획을 검토하였다.

아울러, 정부는 통일부를 중심으로 여러 유관부처가 참여하는 「남북 합의사항 이행·점검 협의체」를 구성하였다. 이를 통해 범정부 차원에서 남북 합의사항과 향후 이행 방안을 점검하고 부처 간 네트워크를 재정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12월 23일 개최된 동 협의체 회의에서는 주요 남북 합의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부처별 소관 사항에 대한 이행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정부는 앞으로도 협의체를 통해 남북 합의사항의 이행 방안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4. 남북대화 대국민 관심 제고

정부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한반도 정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생산 또는 접수된 지 30년이 지난 남북회담 문서를 공개하고 있다. 회담문서 공개는 「남북회담 문서 공개에 관한 규정」(통일부훈령 제726호)에 따라 전직 회담 참여자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예비심사위원회를 통해 예비 심사를 하고, 그 결과에 대해 관계기관 협의 및 남북회담문서 공개심의회 의결을 거쳐 진행하였다.

정부는 2022년 5월 최초로 남북회담 문서를 공개한 이후 매년 한두 차례 사료를 공개하고 있다. 2025년에는 상·하반기 두 차례(6차·7차) 남북회담 문서를 공개하였다. 6차(2.13.) 공개 문서에는 분단 이후 최초로 개최된 남북경제회담과 국회회담 예비접촉 등 1980년대 중·후반 남북 간 대화 및 접촉 실상을 알 수 있는 문서와 1990년대 남북고위급회담 개최를 위한 남북 간 예비회담의 기록 등이 포함되어 있다. 7차(9.2.) 공개 문서에는 1990년대 초 당시 20여 년 남북회담 역사에서 가장 최고위급 회담으로서 남북한 총리가 수석대표로 참여한 8차례에 걸친 남북고위급회담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7차 공개 문서에는 분단 이래 처음으로 남북관계를 포괄적으로 정의한 남북기본합의서 체결 과정이 담겨 있다.

정부는 두 차례에 걸쳐 남북회담 문서를 공개(6차 2,266쪽, 7차 3,172쪽)함으로써 1980년대 중·후반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 남북 간 진행된 주요 회담 내용을 국민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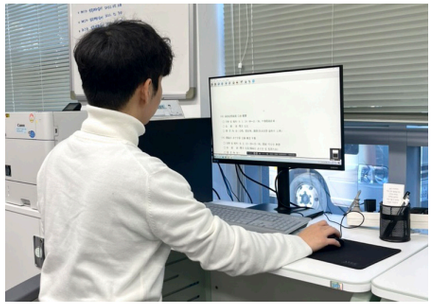
연구자들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남북관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관련 연구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정부는 남북회담 문서에 대한 접근 편의성을 높이고자 방문 열람 장소를 지방으로까지 확대하였다. 남북회담본부,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북한자료센터, 국회도서관, 호남권 통일+센터(목포), 국회부산도서관 등 6곳에 남북회담문서 열람 장소를 마련하여 직접 방문하면 열람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정부는 QR코드를 통한 모바일 접속 및 온라인 열람 신청 방식을 새롭게 도입하였다. 국민들은 QR코드로 남북회담본부 누리집에 접속하여 열람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결과를 이메일로 회신하여 온라인으로도 문서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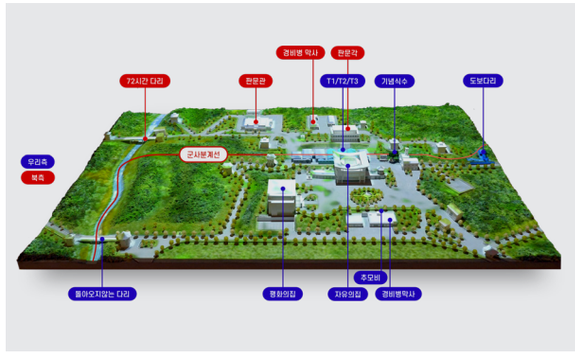
7차 남북회담문서 공개(9.2.)



남북회담문서 열람

정부는 남북대화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해 남북회담 주요 장소인 판문점을 방문하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려고 노력하였다. 정부는 2018년 「판문점 선언」과 「9.19 군사합의」를 통해 비무장화된 판문점을 우리 국민이 편리하게 견학할 수 있도록 2020년 11월 4일 판문점견학지원센터를 개소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판문점견학지원센터 개소와 함께 재개된 판문점 견학은 코로나19, 주한미군 병사의 월북 등 대내외 상황에 따라 중단과 재개가 반복되었다.

2023년 주한미군 병사의 월북 사건 이후 중단된 판문점 견학은 2025년 5월 16일에 국내외 주요 인사를 대상으로 하는 특별견학에 한하여 재개되었고,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견학은 2025년 말까지 재개되지 못하고 있다.



판문점 주요 시설

이러한 여건 속에서도 정부는 판문점견학지원센터를 통해 2025년 한 해 동안 총 22회에 걸쳐 341명에게 판문점 견학 기회를 제공하였다. 또한, 2020년 센터 개소 이후 누적 기준으로는 총 447회, 1만 1,272명이 판문점을 견학하였다.

연도별 판문점 견학 현황

(2025년 12월 말 기준)
(단위: 회, 명)

구분	일반견학		특별견학		합 계	
	횟수	인원	횟수	인원	횟수	인원
2020년	38	1,285	6	198	**44**	**1,483**
2021년	89	1,605	27	380	**116**	**1,985**
2022년	73	2,329	64	1,320	**137**	**3,649**
2023년	83	2,835	44	938	**127**	**3,773**
2024년	-	-	1	41	**1**	**41**
2025년	-	-	22	341	**22**	**341**
합계	**283**	**8,054**	**164**	**3,218**	**447**	**11,272**

판문점 견학 후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평화·통일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높아졌다'는 응답과 '판문점 견학에 매우 만족한다'는 응답이 90% 가까이 나오는 등 판문점 견학에 대한 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판문점 견학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만족도가 높은 점을 감안하여, 향후 보다 많은 국민이 판문점을 방문할 수 있도록 일반견학 재개를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판문점 견학과 더불어 남북출입사무소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남북출입사무소는 남북 간 육로로 이동 시 출입경 심사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인근에는 오두산통일전망대·도라전망대·제3땅굴(파주), 고성통일전망대·DMZ박물관(고성) 등 국민이 많이 찾는 견학시설이 위치하고 있다. 남북출입사무소는 이러한 지리적 이점을 활용하여 2011년부터 유관기관과 국민을 대상으로 출입시설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2025년에는 주요 인사, 청소년, 외국인 등 4,934명이 총 126회에 걸쳐 남북출입사무소를 방문하여 출입경 시설, 역사관, 그리고 도라산역을 견학하였다.



남북출입사무소 견학(5.22.)



판문점 견학(10.18.)

제2절

남북회담 역량 강화

1. 회담 전문성 제고 및 전문가·유관기관 네트워크 강화

정부는 남북대화 중단이 장기화된 상황에서도 북한이 대화에 호응할 경우 적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회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정부는 3월 5일 남북회담 분야 원로와 전문가로 구성된 남북회담 전략자문단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향후 남북회담 추진 전략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또한, 회담 담당 직원의 대북협상 능력과 실무 역량을 높이기 위해 '남북대화 협상사례 연구모임'을 총 4회(3.26., 5.26., 9.17., 11.25.) 개최하였다. 연구모임에서는 남북대화 재개 방안 및 회담본부 협상 역량 강화 방안 등을 주제로 남북회담 유경험자의 강연과 토론 등을 실시하였다.

아울러, 정부는 분쟁지역 평화협상 사례를 연구하기 위해 영국과 아일랜드를 방문



제4차 남북대화 협상사례 연구모임(11.25.)



분쟁지역 평화협상 사례조사(12.14.~20.)

(12.14.~20.)하였다. 이를 통해 북아일랜드 평화정착의 기반이 된 벨파스트 협정(The Belfast Agreement)의 체결과 이행 과정을 조사하였다. 정부는 협정 체결 및 이행의 성공 요인, 유럽연합(EU) 등 국제사회의 역할, 브렉시트 이후 변화 상황 등을 분석함으로써 남북협상과 한반도 평화구축에 적용 가능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한편, 정부는 유관기관 업무협의 및 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하여 대화 재개에 대비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였다. 정부는 12월 26일 국방부와 합동으로 향후 군사회담 재개에 대비한 역량 강화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워크숍에서는 남북회담 추진 체계 및 준비 사항을 공유하고 군사회담 재개 시 기관 간 협조 방안과 역할 분담 등을 논의하였다.

또한, 정부는 대한적십자사 등 유관기관을 방문하여 북한의 경제 및 인도분야의 상황을 청취하고 향후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아울러, 정치·군사, 관광, 철도·도로, 전력, 농업, 기후변화, 산림 등 분야별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여, 향후 남북대화 재개 시 회담 추진 방향과 회담의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이를 통해 정부는 분야별 전문성을 강화하고, 남북회담이 재개될 경우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2. 남북대화 재개 대비 모의훈련 실시

정부는 남북회담 행사 운영에 필요한 준비 사항을 점검하고, 남북통신망 운영 및 출입경 모의훈련 등을 실시함으로써 남북회담 행사 운영 능력을 제고하고, 언제 어떠한 방식으로 회담이 재개되더라도 즉시 대응할 수 있는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자 하였다.

정부는 남북대화 재개에 대비하여 회담 통신망의 안정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매월 1회 정기적으로 남북통신망 운영 모의훈련을 실시하였다. 모의훈련에서는 남북회담본부와 판문점 자유의집 간의 남북 직통전화 회선의 정상 작동 여부를 점검하고, 회담 영상 및 문서 전송 상태를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정부는 남북통신망의 이상 유무를 사전에 점검하고, 향후 남북대화 재개 시 즉각적인 통신망 운영이 가능하




남북통신망 운영 모의훈련(11.18.)

도록 준비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2020년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등으로 남북 간 출입경 중단 상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향후 남북관계 개선과 출입경 재개에 대비한 준비를 지속하였다. 통일부는 출입경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및 유지를 위해 법무부·관세청·군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인원 및 차량심사, 검역 등 일련의 출입경 절차를 점검하고 실제 상황과 유사하게 모의훈련을 진행하였다. 2025년에는 총 8회의 훈련을 실시하여 기관별 출입경 매뉴얼 숙지, 전산시스템 및 장비점검, 유관기관 연락망 현행화 등을 통해 출입경 재개에 대비하였다. 특히, 「남북출입사무 운영협의회」(4회)를 개최하여 모의훈련 계획 수립부터 시행, 평가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대해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의하고 조정하였다.


법무부 출경 심사 모의훈련(12.17.)


남북출입사무 운영협의회 개최(12.17.)

06

북향민 정착지원

제1절 북향민 사회적응교육

제2절 북향민 자립·자활 기반 조성

제3절 북향민 위기가구 지원 및 지역적응센터 역량 강화

제4절 북향민 인식 개선 및 남북통합문화 조성

2025
한반도
평화공존의
기록들

UNIFICATION
WHITE PAPER





제6장

북향민 정착지원

정부는 북향민에 대한 기본적인 정착지원과 보호를 넘어 우리 사회의 차별과 편견을 해소하고 함께 성장하는 통합 지향적 정착지원 정책을 추진하였다. 이를 위해, 북향민의 자립·자활을 강화하고 사회적 연결망을 확대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2025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정착지원 제도를 개선하고 사업의 효과를 높이고자 하였다.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우리 사회로의 통합 강화를 위해 2026년부터 '탈북민' 대신 '북향민(北鄕民)' 명칭을 사용하기로 하였다. 그동안 '탈북민'의 부정적 어감으로 인해 명칭 변경 논의가 반복 제기되어 왔으며, 정부는 사회통합 관점에서 연구용역, 전문가 자문, 의견 수렴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북향민' 용어를 선정하였다. 북향민은 '북한에 고향을 둔 사람'이라는 뜻으로, '북한 출신이면서 남한 국민으로 살아가는 복합적 정체성'을 표현하는 포용적 용어이다. 북향민의 영문 표기는 'North Korean-born citizens'이며, 북향민이 우리 법률에 의해 보호받는 동등한 시민임을 강조하는 뜻을 담고 있다.

정부는 북향민의 초기 정착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정착기본금을 2024년 대비 50% 인상하여 지급하였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북한이탈주민법」') 개정(2024)에 따라 2025년 하반기부터 교육지원 대상이 '북향민과 그 자녀'까지 확대·적용되었다. 이외에도, 북향민을 추가 고용하는 기업에 소득세 및 법인세 공제 혜택을 부여하여 북향민 근로자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확충하였다.

정부는 북향민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경제활동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서도 다양한 지원을 추진하였다. 북향민의 특성과 여건을 고려한 체계적인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창업디딤돌센터를 개소(8.7.)하는 한편, 미래행복통장 가입 조건을 완화(2.11.)하여 거주지 보호 기간 이후에도 가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미래행복통장 가입자는 2024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하였다.

그 결과, 『2025 북한이탈주민 정착실태조사』에서 북향민의 남한 생활 만족도는 81.2%로 조사 이래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다. 또한, 자신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앞으로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고 응답한 비율은 72.2%로 남한에서의 미래 삶에 대한 기대가 긍정적으로 형성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경제활동 측면에서도 북향민의 참여 수준은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 2025년 북향민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64.8%로 매년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2025년 북향민 고용률은 61.3%로 2024년 60.5% 대비 상승하였다. 여성 실업률은 6.1%로 2024년 대비 1.6% 하락하였으나, 일반국민(여성) 실업률 2.6%에 비해 여전히 2배 이상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어, 여성 북향민의 일·육아 병행을 지원하는 정책의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한편, 정부는 복지 사각지대에 처한 북향민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특히, 위기 사례 발굴, 예방 및 자원 연계, 서비스 이력 등을 관리할 수 있는 북향민 통합지원시스템 기능을 대폭 강화하였다. 이를 통해, 기존에는 북향민의 위기지표 해당 여부만 파악할 수 있었으나 추가 정보 연계를 통해 세부적인 위기 수준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지역적응센터(이하 '하나센터')가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시설로 지정됨에 따라 안전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종사자의 처우 개선과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이를 통해 북향민에 대한 안정적·전문적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졌다.

정부는 북향민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해서도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제2회 「북한이탈주민의 날」(7.14.)을 계기로 기념식을 개최하고, 전국 17개 시·도와 유관기관에서 토론회, 문화 공연, 북한문화 체험 등 30여 개의 행사가 개최되었다. 또한, 남북통합문화센터에서는 북향민과 지역 주민이 직접 소통하고 문화를 매개로 교류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이를 통해 상호 이해와 공감대를 넓히고, 통합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였다.

북향민 정착지원 과정

보호 신청 및 국내 이송

- 보호 신청 시 외교부, 관계부처에 상황 보고 및 전파
- 해외 공관 또는 주재국 임시보호시설 수용
- 신원 확인 후 주재국과 입국 교섭 및 국내 입국 지원

국내 입국

조사 및 임시보호 조치

- 입국 후 국정원이 보호 결정 여부를 위한 조사 및 긴급한 치료 등 임시보호조치 실시
- 조사 종료 후 정착지원시설인 하나원으로 이송

보호 결정

-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 심의를 거쳐 보호 여부 결정 (세대 단위 결정)

'하나원'에서 정착 준비

- 사회적응교육(12주, 400시간)
  - 우리 사회 이해증진, 진로지도 및 직업탐색, 양성평등·법정 교육, 정서 안정 및 건강검진 등
- 초기 정착지원: 가족관계 창설, 주거 알선, 정착금·장려금 지원 등

거주지 전입

거주지 보호 (5년)

- 사회적 안전망 편입(생계·의료급여 지급)
- 일자리 지원: 취업·창업·영농 관련 교육훈련, 취업 알선, 자격 인정 등
- 교육지원: 특례 편입학 및 등록금 지원
- 보호담당관: 거주지·취업·신변 보호 담당관 제도 운영

민간 참여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을 통한 종합 서비스 제공
- 지역적응센터(전국 25곳) 지정·운영
- 정착도우미 제도: 민간자원봉사자 연계
- 북향민 전문 상담사 87명
  - 종합 상담 및 애로사항 해결 등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 제공

북향민 입국 동향

2025년 국내에 입국한 북향민은 223명으로 2024년의 236명 대비 소폭 감소하였다. 2025년 12월 말까지 국내에 들어온 북향민 누적 인원은 총 3만 4,537명이며, 그중 여성 입국자는 2만 4,944명으로 전체 입국자의 72.2% 수준이다.

누적 인원 중 최근 보호시설에 입소한 일부 인원을 제외한 세부 현황은 다음과 같다. 연령별 현황은 입국 당시 30대가 28.8%(9,907명)로 가장 높으며 20~30대가 전체의 56.9%(1만 9,604명)를 차지한다. 북한에서 가졌던 직업은 무직·부양자가 44.4%(1만 5,297명), 노동자가 39.8%(1만 3,709명)로 2개 직업군이 전체의 84.2%(2만 9,006명)를 차지하고 있다. 북한 학력은 중·고등학교가 69.2%(2만 3,835명)로 가장 높고, 전문대 10.6%(3,635명), 대학 이상은 7.0%(2,397명)이다. 출신 지역은 함경북도 58.3%(2만 59명), 양강도 18.0%(6,201명), 함경남도 8.5%(2,936명) 순으로 함경도와 양강도 출신 비율이 높다.

2016~2025년 북향민 입국 현황

(단위: 명, %)

구분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남	302	188	168	202	72	40	35	32	26	25
여	1,116	939	969	845	157	23	32	164	210	198
합계	**1,418**	**1,127**	**1,137**	**1,047**	**229**	**63**	**67**	**196**	**236**	**223**
여성비율	78.7	83.3	85.2	80.7	68.6	36.5	47.8	83.7	89.0	88.8

제1절

북향민 사회적응교육

1. 사회적응교육 프로그램 개편·운영

(1) 사회적응교육 프로그램 개요

국내에 입국한 북향민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이하 '하나원')에 입소하여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사회적응교육을 받는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연간 50명 수준으로 급감하였던 교육 인원은 2023년 이후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며 2025년에는 2024년과 비슷한 수준인 238명이 하나원을 수료하였다.

2024~2025년 하나원 수료 현황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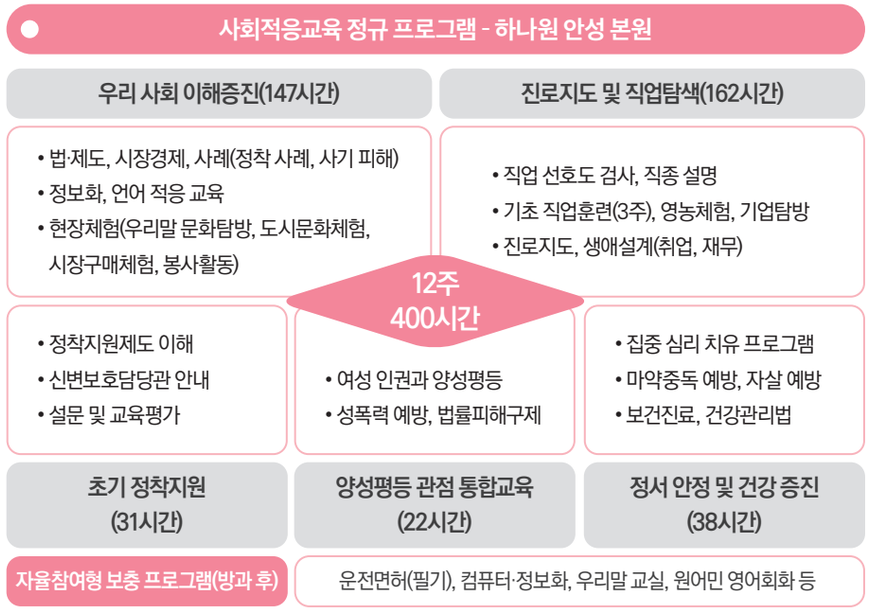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2024	20	11	13	23	17	8	6	29	18	28	41	28	**242**
2025	19	21	15	22	21	14	20	15	27	33	14	17	**238**

정부는 국내 정착을 앞둔 하나원 교육생에게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전문가와 유관기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하나원 교육생과 사회에 진출한 북향민 등의 의견을 종합하여 「2025년 하나원 사회적응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강의식 이론 위주의 수업 대신 실제 사례·체험·선택형 교육을 강화하여 교육 몰입도를 높이고 다양한 직업훈련을 통한 직업적응능력 제고를 위해 노력하였다.

개편된 기본계획에 따라 5개 영역, 12주 400시간의 기초교육생 사회적응교육을 편성·운영하였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규정에 정해진 사회적응교육의 5개 영역은 ①우리 사회 이해증진 ②양성평등 관점의 통합교육 ③정서안정 및 건강증진 ④진로지도 및 직업탐색 ⑤초기 정착지원 등이다.

하나원은 연령에 따라 영아반, 유치반, 초등반, 청소년반, 성인반, 경로반으로 나누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연령별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성인반은 남녀를 분리하여 여성 성인반은 안성 본원에서, 남성 성인반은 화천 분소에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여성 성인반과 남성 성인반은 기본 교육의 5개 영역은 동일하나, 직업훈련 과목, 양성평등 관점 통합교육의 세부 과목 등에서는 교육 내용에 남녀 간 차이를 반영하여 운영하였다.



(2) 실제 사례 및 현장 중심 사회적응교육 강화

정부는 사회적응교육 운영에 있어 교육생의 이해도와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강의식 교육을 지양하고 실제 사례 및 현장 체험 중심의 교육을 강화하였다. 도시문화체험, 영농체험, 시장구매체험, 봉사활동, 기업탐방 등 다양한 현장체험 과목을 운영하여 북향민 교육생이 우리 사회의 생활환경과 문화를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현장 중심 교육을 통해 교육생의 사회 적응력을 제고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였다. 또한, 제3국 체류 기간 장기화로 우리말 어휘 이해가 부족한 교육생을 대상으로 언어 능력을 점검하고, 어휘·표현 학습, 표준화법 연습, 발음·억양 교정 등 단계별 언어교육을 운영하였다. 더불어, 컴퓨터·정보화 교육은 기존 PC 중심 교육에서 벗어나 모바일과 생성형 AI 활용 교육으로 확대하여, 수료 이후에도 실생활에서 정보 접근과 활용이 가능하도록 교육 방향을 조정하였다.

아울러, 마약 등 범죄 예방을 위한 법률 교육을 강화하고, 자살 예방 및 정서 안정을 위해 집중 심리 치유 프로그램과 요가 등 생활체육 활동을 병행 운영함으로써 교육생의 심신 회복과 건강증진을 지원하였다.

(3) 진로지도 및 심화 직업훈련 과정 운영

정부는 북향민이 실질적인 취업 능력을 높여 보다 나은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도록 2020년에 하나원 내에 직업교육관을 개관하여 기초교육생과 수료생을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직업교육은 빠르게 변하는 고용시장 수요에 대응하여 기업 현장에서 필요한 자격 취득과 기술 습득을 목표로 운영·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기초교육생을 대상으로 개인의 적성과 선호도를 반영한 맞춤형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기초직업교육, 진로상담, 직종 설명, 기초직업훈련(자격증반, 직종체험반), 취업 설계(생애 설계) 과정 등을 통해 북향민의 합리적인 진로 의사 결정과 직장 적응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특히, 2025년에는 현장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인근 지역에 있는 민간 사업장을 방문하여 작업환경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농촌진흥청 전문가 초빙강의를 통해 한국영농산업의 발전 과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고, 시·군 영농기술센터의 지원제도 등의 정보를 제공하여 영농 정착의 기회를 마련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



기업탐방



영농체험

심화 직업훈련은 하나원을 수료한 북향민의 실질적 취업 능력 강화와 질 좋은 일자리 선택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으며, 국내 노동시장 수요를 반영하여 국가·민간 자격증 취득 과정과 현장실무 교육과정으로 진행되고 있다. 2025년에는 13개 과정에 총 233명이 참여하여 223명이 수료하였으며, 수료생 중 90%(실무과정 제외)가 해당 분야의 자격증을 취득하였다.

통일부는 고용노동부와 협력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업과 연계하고 있으며, 2025년에는 기초교육생 13개 기수 167명 중 106명이 신청하여 63.5%가 참여하였다.



헤어 디자이너 과정



정리수납 전문가 과정



바리스타 과정



도배기능사 과정



미용 취업·창업 과정



요양보호사 과정

(4) 하나둘학교 운영

하나원 내 하나둘학교는 교육생을 유치반(만 3~5세), 초등반(만 6~12세), 청소년반(만 13~18세)으로 편성하고 연령, 학력, 한국어 수준을 고려하여 수준별 맞춤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청소년반은 교육부 파견교사가 담당하고, 예체능 등 일부 과목은 외부 강사를 활용하여 교육하고 있다. 유치·초등반은 하나원 인근 삼죽초등학교와 병설유치원에 위탁교육 중이며, 남한 학생과 함께 통합수업을 진행한다. 최근 제3국 출생 청소년이 증가함에 따라 한국어 특별반을 편성하여 우리말 소통 능력 향상 교육을 강화하였다. 한국어 특별반은 한국어 교육 시간을 대폭 확대(기존 25시간 → 100시간)하고, 한국어 우수자 표창 등 인센티브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연도별 교육인원 현황(제3국 출생 자녀 포함)

(단위: 명)

구분	'99~'10	'11	'12	'13	'14	'15	'16	'17	'18
청소년	1,089	198	114	106	90	68	86	116	108
초등	568	179	124	97	87	49	46	43	49
유치	259	69	42	38	28	28	25	36	20
합계	**1,916**	**446**	**280**	**241**	**205**	**145**	**157**	**195**	**177**

구분	'19	'20	'21	'22	'23	'24	'25	합계
청소년	105	52	3	7	13	22	18	**2,195**
초등	57	19	1	-	1	8	7	**1,335**
유치	23	7	-	1	5	1	8	**590**
합계	**185**	**78**	**4**	**8**	**19**	**31**	**33**	**4,120**

청소년반 정규 프로그램은 12주 총 400시간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기초학력 증진 및 학력 결손 보충 232시간(58.0%) △우리 사회 이해 70시간(17.5%) △정서 안정 및 건강 증진 72시간(18.0%) △진학·진로 탐색 및 설계 26시간(6.5%)으로 구성하였다. 교육과정 중 현장 체험학습은 △역사·문화(박물관) △도시문화(쇼핑센터) △금융교육(은행) 등으로 실시되었다.

진로 체험, 학교 탐방, 대안학교 설명회(10개교 참여), 담임교사 상담 등을 통해 개인별 적성에 맞도록 진학·진로를 지도하였다. 또한, 경기도교육청에 학력 인정을 신청하여 하나둘학교 졸업생이 초등학교 졸업 등 학력인정증명서를 발급받고 졸업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상급학교 진학을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하나둘학교 졸업생의 거주지 학교 적응을 지원하고 학업 중단을 예방하고자 다양한 사후지도를 진행하였다. 하나둘학교 파견근무 경험이 있는 교사 중 10명을 '하나교사'로 위촉하여 졸업생 26명과 멘토-멘티로 매칭하여 학습, 진로, 생활 상담 등 총 50건의 멘토링을 진행하였다. 또한, 하나둘학교 졸업생 17명과 전직 교사 14명을 하나원으로 초청하여 하나원 시절의 추억을 떠올리고 사제 간 정을 나누며 진로·진학 상담도 하는 사제동행 캠프(7.23.~24.)를 진행하였다. 아울러, 하나둘학교 졸업생과 담임교사가 함께하는 수학여행(10.17.~19.)을 다녀왔다.




2025 사제동행 캠프(7.23.~24.)




2025 졸업생 수학여행(10.17.~19.)

2. 건강 증진 및 정서 안정

(1) 하나의원 운영

정부는 북향민의 건강관리를 위해 하나원 내 하나의원을 운영하고 있다. 하나의원은 1차 의료기관으로 의사, 간호사 등 20명의 의료전문 인력이 상시 근무하며 북향민의 입국 초기 건강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안성 본원은 내과·가정의학과, 정신건강의학과, 한방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치과 등 6개의 진료과목을, 화천 분소는 내과, 치과, 한방과 등 3개의 진료과목을 운영하고 있다.

2025년에는 북향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다양한 의료지원 사업을 추진하였다. 입

소 교육생 대상 개인별 진료 및 복약지도, 감염관리, 예방접종, 보철치료, 보건교육 등 건강 증진 사업을 운영하였다. 또한, 2024년 하반기에 도입된 최신 초음파 의료 장비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질병 조기 발견과 예방치료도 병행하였다. 중증 환자 관리는 2차, 3차 협력 의료기관에서 정밀검사 및 입원·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였다.

2025년 하나의원 진료 건수는 연간 3,300여 건에 달하였다. 또한, 외부병원 입원 시 간병인 지원이나 간호·간병 통합병동 이용을 연계하는 등 보다 집중적이고 세심한 의료 지원을 제공하여 치료와 회복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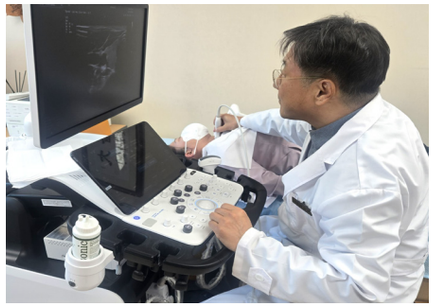
2025년 하나의원 진료 실적

(단위: 건)

진료과목	내과·가정의학과	정신건강의학과	한방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치과	합계
실적	928	276	467	287	482	855	**3,295**

시호나눔재단은 2014년부터 하나원 교육생 시력검사 및 안경 제작을 지원하고 있으며, 2024년에 시력검사실을 신설하여 2025년에는 총 13회에 걸쳐 188명에게 시력검사를 실시하고 143명에 대하여 안경을 지원하였다.

하나의원은 하나원 수료 시 개인별 의무기록을 배부하고 사회 정착 초기 수료생의 건강관리를 지원하고자 전국 25개 하나센터, 67개의 협력병원 및 단체와 의료지원 협업 체계를 강화하였다.



하나의원 초음파 의료장비 운용(수시)



시호나눔재단 협력 시력검사 및 안경 제작 지원(매월)

2025년에는 북향민에게 특성화된 양질의 의료를 제공하고자 맞춤형 응급상황 대응매뉴얼과 감염병 대응 지침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절차 등을 전면 개정하였다.

(2) 마음건강센터 운영

정부는 북향민의 심리적 어려움을 돕기 위해 하나원 내 마음건강센터를 두고, 정신과 진료 및 개인상담, 심리·정서안정 교육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다. 마음건강센터는 하나원에 입소하는 모든 교육생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마음건강검사와 정신과 진료를 진행하고, 교육생 맞춤형 심리 상담을 실시하여 이들이 겪는 트라우마나 심적 고충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사례 검토 회의를 통해 교육생의 원내 생활 적응을 지원하고 마음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한편,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선제적 발굴과 심리적 회복을 지원하는 맞춤형 정신건강 서비스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기존 정서 안정 프로그램을 개편하여 10월부터 2박 3일 집중 심리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구체적으로 프로그램 1일 차에는 집단 상호작용을 촉진하고, 2일 차에는 자살예방교육을 실시하며, 3일 차에는 미술치유·야외체험활동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통해, 자살예방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마음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또한, 하나원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생명지킴이 교육을 실시(9.17.)하고, 외부 정착지원 실무자를 대상으로 자살예방 전문강사 양성교육을 진행(12.4.)하는 등 북향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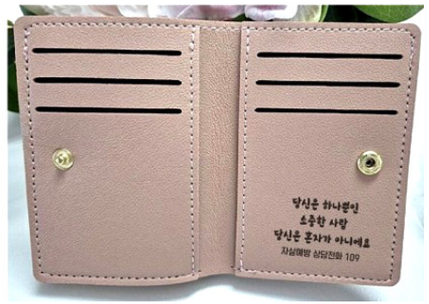

집중 심리 치유 프로그램(11.12.~14.)



하나원 모든 직원 생명지킴이 교육(9.17.)



자살예방교육 전문강사 양성과정(12.4.)



자살예방 카드지갑



자살예방 명함

자살예방 전문인력을 확충하고 역량을 강화하려고 노력하였다. 아울러, 최신 자살 관련 지원체계와 연구 결과를 반영하여 자살예방교육 교재를 개정하고, 명함, 카드지갑 같은 홍보·안내 물품을 제작함으로써 수료 후에도 생명존중 공감대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하나원 수료 후에도 지속적으로 마음건강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는 전국 25개 하나센터 전문상담사에게 연계하여 지역사회에서 정신과 진료와 심리 상담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특히, 자살 위험성이 높은 교육생의 경우 하나원 상담자와 안전행동계획서를 작성하고 유관기관에 추가 연계를 실시하는 등 자살 위기군 사례 관리 및 심리 지원 체계를 발전시켰다.

하나원 입소 교육생에 대한 마음건강 지원, 자살예방교육 강화 외에도 2025년 마음건강센터에서는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였다. 하나원·하나재단·용인정신병원 간

업무협약을 체결(4.3.)하여, 마음건강 회복을 위한 협력체계를 마련하고 공동 대응 기반을 구축하였다. 그 결과, 입소 교육생 대상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하나원 방문 진료를 정례화하였으며, 수료 이후에도 지역사회에서 심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망을 확대하였다. 아울러, 정부는 '2025 남북한주민 사회통합사례 발표대회'(9.25.)를 주관하여 실제 상담 사례 공유 및 자살 위기상담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상담 실무자의 전문성과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하였다.



하나원·하나재단·용인정신병원 업무협약 체결(4.3.)



2025 남북한주민 사회통합사례 발표대회(9.25.)

3. 화천 분소(제2하나원) 운영

(1) 남성 성인반 프로그램

정부는 하나원 화천 분소에서 성인 남성 북향민을 대상으로 기초 사회적응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교육과정과 시간 등 기본적인 틀은 안성 본원과 동일하나, 폭력예방 프로그램과 자동차 운전 및 전기·도배·타일·조적(벽돌·블록)·미장·중장비 실습교육 등 성인 남성을 위한 특화 프로그램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2025년에는 하나원 교육 기간에 우리 사회를 경험할 수 있도록 서울·춘천 등 주 1회를 원칙으로 현장 체험학습을 실시하였다. 대중교통·금융기관·공동주택 체험 등 수료 후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교육과 함께 현충원·전쟁기념관 방문, 지역축제 참가, 영화·계절 스포츠 관람 등 다양한 현장 체험학습을 진행하였다.

자동차 운전면허 취득 교육을 위해 2020년 원내 자동차운전시뮬레이터를 도입한 이후 1차 기능시험 합격률이 도입 전 64%에서 2021년 97%, 2022년 90%, 2023년 94%, 2024년 94%, 2025년 91% 등 90% 이상의 합격률을 보이고 있다. 2022년부터는 도로주행 시험까지 지원하여 2022년 79%, 2023년 86%, 2024년 89%, 2025년 80%의 교육생이 하나원을 수료하기 전에 운전면허증을 취득하였다. 아울러, 굴착기·지게차 등 중장비는 외부 전문학원에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2025년에는 참가자 전원이 소형건설기계조종면허과정을 이수하였다.

(2) 하나마음 프로그램 운영

정부는 2022년부터 북향민 맞춤형 힐링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였다. 힐링 프로그램은 취약계층 북향민의 심리·정서 안정을 강화하는 정착지원 서비스로서 참여자에 따라 맞춤형 일정으로 진행하였다.

하나원 화천 분소는 초기의 힐링이나 정서 안정 위주의 프로그램에서 한 단계 도약하여, 북향민의 마음건강 회복 및 심리 치유 등 프로그램의 전문성을 제고한 하나마음 프로그램으로 발전시켰다.

2024년 하나원 화천 분소에 하나마음쉼터를 개소(5.31.)함으로써 하나마음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그동안 하나마음 프로그램은 2023년 11월부터 시작된 시범사업을 포함하여 2024년까지 총 29회를 진행하였다.

2025년에는 전문가(정신건강 임상심리사 1급)가 하나마음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개인 및 집단상담을 운영하며 프로그램의 전문성을 높여 총 36회 운영하였다.

2025년에는 직장인·청소년·가족·지역소모임 등 참여 대상을 확대하고 대상별 2박 3일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고위험군 대상으로 2회의 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또한, 원거리 지역 북향민을 위한 '찾아가는 하나마음 프로그램' 등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하였다. 2025년 10월부터는 기초교육생 대상 자살예방교육도 포함하여 하나마음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아울러, 남북하나재단·하나센터·민간단체 등

유관기관 및 관련 민간단체와 협력하여 하나마음 프로그램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며 화천 분소를 북향민 마음건강 허브로 구축해 나가고 있다.



스트레스 관리 명상 프로그램(8.6.)



개인 상담 프로그램(8.27.)

(3) 정착지원 관계자 직무교육

정부는 북향민 정착지원 관계자의 직무 역량을 강화하고 유관기관 협력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북향민 신변·취업·거주지 보호담당관, 북향민 학생의 지도교사 등을 대상으로 2개의 직무교육 과정을 운영하였다. 2025년에는 교육과정을 3회 운영하였고 88명이 참여하였다.

2025년 제2하나원 직무교육 운영 현황

과정명	기간		교육 형태
북향민 보호담당관 과정	1기	3.26.~28.	집합교육(2박 3일)
	2기	9.29.~10.1.	
북향민 학생 지도교사 과정	1기	8.5.~7.	집합교육(2박 3일)

4. 북향민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 확산

(1) 하나원 방문 프로그램 운영 및 개방성 제고

정부는 국내외 유관기관과 국민을 대상으로 북향민에 대한 이해를 돕고 정책 공감대 형성을 위해 외부 인사 하나원 방문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하나원 개방성을 강화하였다. 외부 방문 프로그램 확대 운영을 통해 하나원 방문을 원하는 유관기관·민간단체 등이 하나원의 교육 내용, 시설 현황 등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를 통해 북향민에 대한 이해를 제고시키고자 하였다.

2025년 하나원 본원과 분소를 합하여 총 51개 기관에서 1,270명이 하나원을 방문하였다. 해외에서는 마렉 레포브스키 슬로바키아 대사 일행 등 10개 기관 인사가, 국내에서는 국방부, 교육청, 지방자치단체, 일선 학교 등 60여 개 기관·단체가 하나원 방문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2) 지역 정착 북향민을 위한 행사 개최

정부는 하나원 교육생과 북향민의 국내 정착을 위해 노력한 기부자·봉사자에게 감사를 전하고 나눔의 가치를 통해 통일의지를 기리는 '명예의 전당' 헌액 등 다양한 행사와 공연을 진행하였다. 2025년 개원 26주년을 계기로 초청행사(7.8.)를 열어, 기부



명예의 전당 제막식(7.8.)



'하나원 친정집 나들이' 행사장 전경(10.25.)

자·봉사자 등을 포함한 150여 명을 초청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또한, 정부는 수료한 교육생의 정착 노력을 격려하고 친정집 같은 하나원의 역할과 의미를 되새기는 차원에서 「하나원 친정집 나들이」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2025년 「하나원 친정집 나들이」 행사(10.25.)에는 하나원 수료 북향민과 직계가족 218명을 초청하여 하나원 시설 견학, 친교마당, 포토존 운영, 직업교육 체험, 어울림마당, 어린이 체험 및 놀이 교실, 축하공연 등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제2절

북향민 자립·자활 기반 조성

1. 교육 지원

정부는 북향민과 그 자녀가 안정적인 교육환경에서 학습 역량을 키우고 학교생활에 적응하여 자립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북향민과 그 자녀들이 통일미래를 선도할 수 있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였다. 특히, 정부는 2025년 2월부터 교육지원 대상의 나이, 거주지 보호 기간 제한 등을 폐지하여 연령과 입국 시기에 따른 차별을 없애고 배울 의지가 있는 북향민에 대한 교육지원을 강화하였다. 또한, 2025년 4월부터 초중등 및 고등교육 지원 대상을 북향민 본인에서 북향민의 자녀까지 확대하여 북향민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 등이 북향민 자녀의 교육 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법적 기반을 강화하였다.

(1) 연령 제한 폐지, 북향민 자녀까지 대상 확대 등 교육지원 강화

정부는 북향민의 안정적 국내 정착을 위해서는 안정적 자녀 양육 및 교육환경 마련이 필수적인 만큼 북향민의 자녀에 대한 교육지원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2025년 2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여, 북향민의 교육지원 제도를 보다 폭넓게 개선하였다. 개정 시행령은 고등학교 학력 인정 후 5년 이내 대학 등에 편입학해야 한다는 요건, 거주지 보호기간 내 대학 등에 진학해야 한다는 요건, 만 25세 이전에 고등학교에 편입해야 한다는 요건, 일반대학과

교육대학의 경우 만 35세 미만이어야 한다는 요건 등을 폐지하였다.

이에 따라, 연령이나 국내 입국 시기, 거주지 보호기간과 관계없이, 교육을 받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북향민이라면 누구나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특히, 기존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만 35세 이상 북향민이나 국내 입국 후 5년이 지난 북향민도 대학 등록금 등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정부는 2025년 4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여 교육지원 대상을 북향민 본인에서 북향민의 자녀까지 확대하였다. 북향민 자녀는 출생지에 따라 북한, 제3국, 국내 출생으로 구분할 수 있다. 기존에는 북한에서 출생한 자녀만 교육지원 대상에 포함되었으나, 출생지에 따른 차별을 없애고 출발선상에서 공평한 기회 제공이라는 측면에서 제3국 또는 국내에서 출생한 북향민 자녀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였다. 이에 따라, 북한 출생 북향민 자녀뿐 아니라 제3국 및 국내에서 출생한 북향민 자녀도 교육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다만, 북한 출생 자녀와 제3국·국내 출생 자녀의 교육 여건이 서로 다르다는 점을 고려하여, 지원 대상 학교의 범위에는 일부 차이를 두었다. 북향민과 그 자녀의 교육 지원 범위는 거의 비슷하지만, 북향민의 자녀에 대해서는 초중등교육 분야에서 특목고, 자사고 등은 입학금·수업료 및 학교 운영비 등의 면제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고등교육 분야에서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및 「평생교육법」에 따라 학점 인정 교육훈련기관은 입학금·수업료 등의 면제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2) 대안학교와 대안교육기관 지원

정부는 북향민과 그 자녀의 학습 결손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특화된 교육을 시행하는 특성화학교(1개교)를 포함하여 대안학교(4개교)와 대안교육기관(6개소)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지속해 오고 있다.

또한, 정부는 북향민 청소년이 재학 중인 대안학교와 대안교육기관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교육환경 개선 방안 및 북향민 청소년 교육지원 대책 등을 마련하였다. 아울러, 재학생을 대상으로 진로 특강 및 멘토링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북향민 청소년

과의 소통을 확대하고 진로 설계와 학교생활 적응을 지원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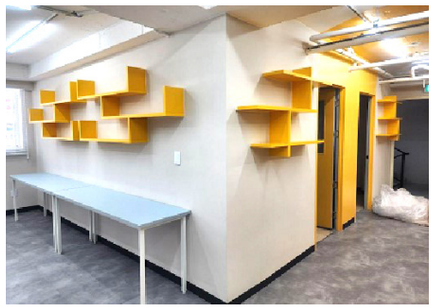
한편, 정부는 북향민 청소년 대안학교에 제3국 출생 학생이 꾸준히 증가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제3국 출생 학생의 한국어 교육 지원 예산을 확충하였다. 또한, 한꿈학교와 여명학교 등의 안정적인 교사(校舍) 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등 대안학교와 대안교육기관을 대상으로 교육환경 개선을 추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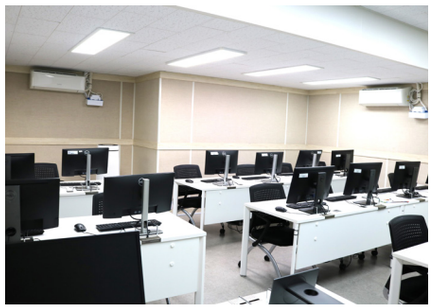
아울러, 정부는 2025년 10월 「북한이탈주민법」을 개정하여, 대안학교가 안정적으로 학교 부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을 북향민과 그 자녀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대안학교에 수의(隨意)계약 방식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하였다.



통일부차관, 여명학교 격려 방문(9.29.)


한꿈학교 신 교사(校舍) 개소식(7.9.)


한꿈학교 환경개선(7.9.)


반석학교 환경개선(12.15.)

대안학교와 대안교육기관 현황

구분	기관명	소재지
특성화학교	한겨레중고등학교	경기도 안성
대안학교 (인가)	여명학교	서울시 강서
	하늘꿈중고등학교	경기도 성남
	드림중고등학교	충청남도 천안
	장대현중고등학교	부산시 강서
대안교육기관 (등록)	남북사랑학교	서울시 구로
	다음학교	서울시 강남
	반석학교	서울시 동작
	우리들학교	서울시 관악
	한꿈학교	경기도 의정부
	해솔직업사관학교	강원도 춘천

(3) 통일전담교육사를 통한 기초학력 지원 및 학교 적응력 제고

정부는 북향민 아동·청소년의 정규학교 적응과 기초학력 제고 등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2025년 4월 기준 북향민 학생이 다수 재학 중인 전국 23개 초등 및 중등학교에 20명의 통일전담교육사를 배치(전속근무 18개교, 순환근무 5개교)하였다. 통일전담교육사는 가정-학교-지역사회와 연계하여 북향민 청소년이 학교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1 대 1 상담과 기초 학습 등을 지원한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북향민과 그 자녀의 탈북 과정에서 수반되는 학력 결손, 문화 및 언어 차이 등으로 발생한 학력 불균형을 극복하고 기초학력을 증진하기 위해 화상영어와 방문학습지를 지원하고 있다. 화상영어교육은 만 9세 이상 24세 이하인 북향민과 그 자녀를 대상으로 주 2~3회 진행하고 있으며, 2025년에는 월평균 160여 명을 지원하였다. 방문학습지는 만 3세 이상 초등학생인 북향민 자녀를 대상으로 1~2개 과목, 주 1회 방문교사가 학습지도를 하고 있으며, 2025년에는 월평균 1천여 명을 지원하였다. 또한, 정부는 정규 수업 이후 학업 보충을 위해 지역아동센터(7개소)에서 운영하는 방과 후 공부방을 지원하고 있다.

(4) 대학 진로·진학 지원

정부는 북향민과 그 자녀가 대학 등에 입학 또는 편입학하는 경우 국·공립대학 등은 입학금, 수업료 등을 면제하고 사립대학 등은 반액을 지원하고 있다. 2025년에는 총 203개 학교, 1,340명(북향민 자녀 46명 포함)을 지원하였다.

또한, 북향민 대학생의 학업 수행 능력과 학교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 북향민 대학생 역량 강화 프로그램 지원기관(대학과 민간단체 4개소)을 지정하고 어학, 컴퓨터 등 다양한 교육과 학교 적응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아울러, 국내 외국어 교육기관을 통해 화상영어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북향민 청소년·대학생과 북향민 자녀의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도 지속하였다.

정부는 대학입시제도 및 학과에 대한 정보와 이해가 부족하여 진로 탐색과 진학 등에 어려움을 겪는 북향민 청소년과 학부모를 위해 다양한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북향민과 그 자녀를 위한 대학입시 정보를 담은 『입시 핸드북』을 발간하여 북향민 학생이 재학하고 있는 고등학교뿐만 아니라 전국 시·도 교육청과 하나센터 등에도 제공하였다.

(5) 한미대학생연수(WEST)를 통한 글로벌 인재 육성

2025년에는 2014년부터 2020년까지 북향민과 그 자녀를 대상으로 해외 인턴십 기회를 지원했던 한미대학생연수(WEST: Work, English Study, Travel) 사업이 재개되었다. 본 사업은 교육부(국립국제교육원)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통일부에서 추천한 5명이 인턴십에 참여 중이다. 프로그램은 어학연수(3개월), 인턴십(6개월), 여행(1개월)으로 구성되어 있다. 2025년도에 통일부에서는 1.7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왕복 항공료, 생활비 등을 지원했으며, 2026년도에도 동일하게 지원할 예정이다.



한미대학생연수 신청자 취업역량 강화프로그램
(3.15.~4.12.)



통일부차관, 한미대학생연수 참가자 격려 간담회
(7.23.)

(6) 무연고청소년 지원

무연고청소년은 국내에 거주하는 북향민 중 보호자(연고)가 없는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을 말한다. 2025년 12월 기준 무연고청소년은 53명(남 27, 여 26)이다. 정부는 무연고청소년을 보호하고 이들에게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하고자 관련기관 및 민간단체와 협업하여 보호 지정을 하고 있다. 또한,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을 위해 2022년부터 「무연고청소년 보호 및 정착지원 예규」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정부는 무연고청소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생활지원금(월 10만 원) 및 가산금(월 20만 원) 지원, 만남의 주간 운영, 생일 축하 상품권 지급 등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이들의 거주환경, 건강 상태 등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특히, 2025년에는 만남주간 행사 운영을 통하여 무연고청소년에 대한 밀착 지원을 강화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그동안 지원을 받지 못했던 무연고 가산금 미신청자 8명을 새롭게 발굴하여 지원 대상으로 포함하였다.

(7) 스포츠 협업 프로그램을 통한 북향민 청소년의 건강증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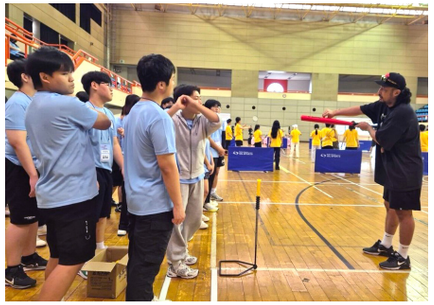
정부는 북향민 청소년이 재학하는 대안학교와 대안교육기관의 경우 운동장이 없거나 열악하여 스포츠 교육을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2025년 2

월부터 국민체육진흥공단과 협업으로 북향민 청소년 대상 체험형 스포츠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북향민 청소년의 심리 정서적 안정과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특히, 경제적 어려움, 가정 상황 등으로 스포츠를 접하기 어려운 북향민 청소년에게 다양한 체육활동 기회를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정부는 야구, 축구 등 프로스포츠 경기 관람 예매권을 지원하였으며, 스포츠 스타 체육교실(2회), 스포츠 스타와 함께 하는 스포츠 캠프(2회), 레저스포츠 캠프(1회) 등을 운영하였다.



레저스포츠 캠프(7.22.)



스포츠 스타와 함께 하는 스포츠 캠프(9.8.)

2. 일자리 지원

(1) 개인별 맞춤형 구직 지원체계 강화

정부는 2023년부터 개인별 관심과 특성에 맞는 구직 과정을 맞춤형·단계별로 지원하는 취업 준비 과정인 「일자리 성공 패키지」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2025년에는 총 536명의 북향민이 참여하였다. 1단계인 상담 및 진단 단계에서는 적성검사, 개인별 일자리 준비 정도 진단, 심층 상담 등을 진행하며, 2단계인 일자리 준비 단계에서는 발음 진단, 직장 내 소통 능력 향상을 위한 언어·스피치 교육, 입사지원서 및 면접 클리닉 등 서비스를 지원한다. 3단계인 일자리 탐색 단계에서는 일자리 탐방을 통해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알아가고, 마지막 4단계인 취업 성공 단계에서는 취업·창업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일자리 성공 패키지」 단계별 과정

1단계 상담 및 진단	2단계 일자리 준비	3단계 일자리 탐색	4단계 취업 성공
① 종합상담, 취업상담사 심층상담 ② 일자리정보 제공	③ 언어·스피치 교육 ④ 일자리 클리닉	⑤ 채용설명회, 코칭 ⑥ 일자리탐방	• 취업, 창업, 영농 등 각 사업과 연계

2024년부터는 북향민 밀집 지역에 위치한 고용복지+센터 20곳에 취업상담사가 주 1회 상주하면서 고용복지+센터를 방문하는 북향민에게 취업 상담과 취업 알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고용복지+센터와 협력하여 취업박람회 참여와 진로·취업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개인별 맞춤형 구직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북향민에게 취업정보를 제공하고 채용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남북하나재단과 ㈜인크루트가 협력하여 북향민 전용 온라인 채용관을 구축하였다. 이에 따라, 채용관을 통해 북향민 우대 채용, 공공기관 채용, 기업 채용 관련 정보를 검색하고,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과 취업 특강 등 다양한 취업 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2) 기초 및 심화 직업역량 개발 지원

정부는 북향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직업훈련을 실시하여 개인별 특성과 여건에 맞게 직업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기초 직업역량 강화를 위해 1인당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온·오프라인 직업훈련 교육과정을 선택하여 수강할 수 있는 취업바우처 제도를 운영하였으며, 2025년에는 432명을 지원하였다. 또한, 북향민의 선호도 및 취업률 등을 고려하여 회계실무자 양성, 버스기사 양성, 골프캐디 양성 등 취업연계 직업훈련을 실시하였고 총 28명의 북향민이 수료하였다.

정부는 재북·재남 경력을 활용한 북향민의 전문직 진출 확대를 위해 국가기술 및 전문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비(1인당 최대 300만 원) 지원과 함께 국내 대학(원광대학교 등)과 협업하여 의사·한의사 등 국가시험 대비 실기실습도 지원하였다.

이 밖에도, 정부는 기업의 북향민 채용 확대와 북향민의 직업탐색 및 직장경험을 위해 북향민 채용을 희망하는 기업과 연수생에게 최대 4개월 동안 연수비를 지원하는 단기연수 사업을 운영하였다. 이 사업을 통해 2025년에는 149개 기업 및 173명의 북향민이 연수지원금을 받았으며, 이 중에서 164명이 연수기업에 근속 중이다.

(3) 북향민 고용사업체 지원 강화

정부는 북향민 고용기업을 대상으로 심사를 통해 '북향민 고용 모범사업주'와 '통일형 예비사회적기업'을 매년 지정하고, 재정 지원과 생산품 우선구매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북향민 고용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25년에는 '북향민 고용 모범사업주' 2개 기업을 신규 지정하였으며, 2025년 12월 말 기준으로 '북향민 고용 모범사업주' 9개와 '통일형 예비사회적기업' 4개 기업이 지정되어 있다.

이에 더해, 정부는 2025년 직전 과세 연도에 비해 상시근로자의 수가 증가했을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통합고용세액공제' 우대 대상에 북향민을 추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공포(2.28.)하였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북향민 근로자의 수가 전년에 비해 증가한 기업은 증가 인원 1인당 최대 연 1,550만 원씩 3년 동안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게 되었다. 이처럼 정부는 북향민 고용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을 강화함으로써, 북향민 근로자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확충해 나가고 있다.

(4) 창업 지원 확대

정부는 북향민의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창업 희망자뿐만 아니라 이미 사업체를 운영하는 북향민을 대상으로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기존 창업자 대상으로는 연 200만 원, 3년간 최대 600만 원까지 지원하던 경영개선자금을 2023년부터 연 300만 원, 3년간 최대 900만 원까지 지원을 확대하였고, 2025년에는 총 365명의 북향민 창업인을 지원하였다. 또한, 외부 전문기관을 통한 분야별 전문가 경영컨설팅을 다변화하여 일반 창업 컨설팅 외에 마케팅, 특허, 공공조달, 회계 등 전문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또한, 북향민의 특성과 여건을 고려한 체계적인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창업디딤돌센터를 개소(8.7.)하였다. 본 센터에서는 입주기업 사무공간 제공, 회의실 및 네트워크 공간 제공, 맞춤형 창업교육, 전문가 컨설팅, 창업 상담 등을 포함한 다양한 창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입주대상은 예비창업기업 또는 창업 7년 이내 기업으로, 2025년에는 AI 플랫폼, 제조업 등 분야의 총 7개 기업이 선정되었다. 입주기업 중 한 곳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유망 창업 기업 집중 육성 프로그램인 TIPS(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에 선정되어 10억 원을 유치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아울러, 정부는 북향민 창업 유관기관과 협력을 확대하면서 창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민간단체인 아산나눔재단과 협업을 통해 청년 중심 스타트업 창업가 육성 프로그램인 아산상회를 운영하였고, 유망한 창업 아이템을 보유



창업 디딤돌센터 개관(8.7.)


입주기업 멘토링

한 예비 창업자 또는 초기 창업자의 창업을 재정적으로 지원(최대 1,000만 원)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창업 및 영농을 통해 성공적으로 정착한 북향민의 일터를 방문하여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듣는 등 현장 소통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5) 귀농 및 영농 지원

정부는 영농을 희망하는 북향민이 농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영농교육 및 현장실습, 영농창업비 지원, 판로 확보 등을 단계별로 지원하는 '영농정착 성공 패키지'를 운영하고 있으며, 2025년에는 61명을 지원하였다. 이 사업을 통해 기초이론 교육 및 실습 합숙 교육을 제공하였으며, 수료자를 대상으로 본인이 희망하는 작목별 선도 농가와 연계하여 최대 4개월간 영농실습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이후 영농을 시작한 북향민에게는 영농창업비 지원과 영농생산품 판로 확보 지원 등도 시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북향민의 성공적인 귀농 정착을 위해 유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 농촌진흥청과 협업하여 귀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향민 영농인을 대상으로 영농분야 전문가 컨설팅을 시행하였다. 또한, 충청남도·부여군·익산시·홍천군과 협력을 통해 농기계 실습, 농촌생활기술 실습, 기초작목 재배 등 귀농·귀촌 교육을 진행하였다. 또한, 정부는 2025년에는 2024년에 이어 한국어촌어항공단과 공동으로 북향민 귀어 희망자를 위한 교육을 진행하였으며 21명이 참여하였다.

(6) 미래행복통장 운영

정부는 북향민의 정착에 필요한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미래행복통장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북향민이 자신의 소득 중 일부를 주택 구입, 창업 자금 등의 목적으로 매월 저축할 경우 정부가 그 저축금액과 같은 금액을 지원하여 자산 형성을

도와주는 것이다. 북향민이 3개월 이상 취업·창업 등 경제활동을 통해 월 최대 50만 원(소득의 30% 이내) 한도로 최대 4년까지 저축하면, 정부는 이와 동일한 금액을 매월 적립하여 만기 시 본인 저축액과 정부 지원금을 이자를 포함하여 지급하고 있다.

정부는 북향민 자산 형성 수혜자 확대를 위해 신청자격 확대 및 각종 제한 요건 완화 등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 2022년부터 기존 근로소득자 외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사업소득자(자영업자 등)도 미래행복통장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고, 장애 및 학업 수행 등의 사유 발생 시 거주지 보호 기간 만료일로부터 최대 2년까지 가입신청 기간을 연장하였다. 또한, 일시 중지 횟수(총 3회→6회) 및 기간(1년→1년 6개월)을 확대하여 보다 많은 북향민이 자산 형성을 통해 자립·자활 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아울러, 기존에는 5년의 거주지 보호 기간 내에만 가입이 가능하여 육아와 질병, 학업 등으로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미래행복통장 가입이 어려웠다. 이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2025년 2월 11일부터 거주지 보호 기간을 폐지하여 2014년 11월 29일 이후 입국자는 통장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 조건을 완화하였다.

미래행복통장 가입 현황

(단위: 명)

구분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합계
가입 인원	10	182	380	458	510	559	406	351	162	112	264	**3,394**
만기 지급	-	-	-	17	49	169	398	433	453	488	203	**2,210**

(7) 일·가정 양립 지원

북향민 중 여성 비율이 72%에 이르는 만큼 북향민 여성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자녀 양육 및 돌봄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정부는 이를 위해 『2024년 북한이탈주민 정착실태조사』부터 북향민 자녀의 양육과 돌봄 분야를 추가하여 북향민 자녀의 출생지 현황, 재학 상태, 생활 및 돌봄 형태, 양육과 돌봄의 애로사항 및 필요한 지원 사항 등을 파악하여, 여성 맞춤형 지원에 필요한 통계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북한이탈주민법」을 개정하여 북향민 정착지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사항에 북향민의 자녀 양육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으며, 북향민 실태조사 시 가족 유형과 자녀 양육 현황도 파악하여 북향민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하였다.

제3절

북향민 위기가구 지원 및 지역적응센터 역량 강화

1. 북향민에 특화된 위기관리시스템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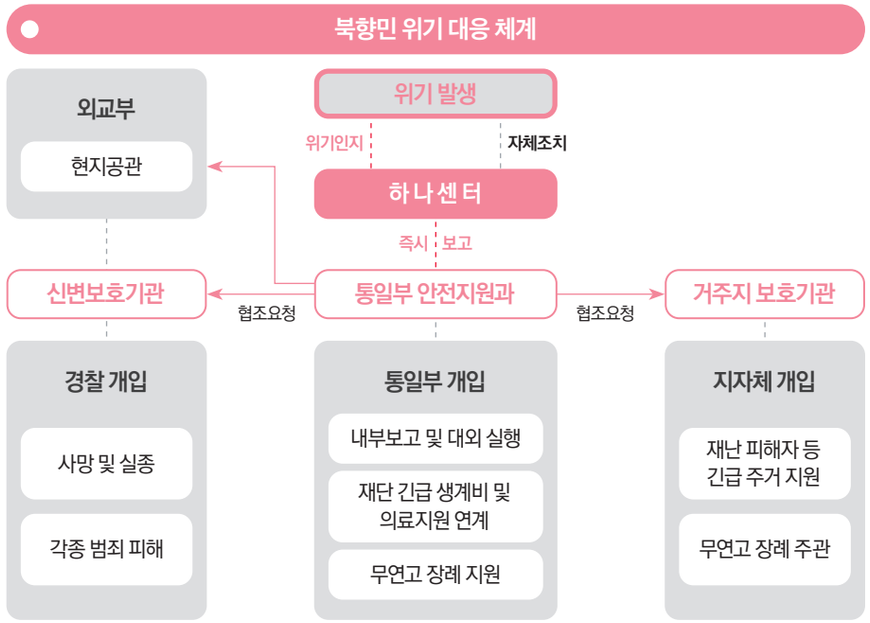
(1) 신속한 파악 및 대응 체계 구축

그동안 정부의 북향민 취약계층 지원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부 북향민이 정착하는 과정에서 경제적, 심리적 어려움 등을 겪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통일부는 생계·심신건강 등 북향민의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북향민 안전업무를 총괄하는 안전지원팀을 2022년에 신설하였고, 2023년부터는 안전지원과로 확대하여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위기관리 대응 체계로 운영하고 있다.

정부는 정착지원 유관기관(남북하나재단·하나센터·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업을 통해 북향민의 위기징후를 사전에 체계적으로 공유·관리하고 있다. 이를 통해 위기상황을 조기에 파악하여 필요한 지원을 신속하게 연계함으로써 북향민이 우리 사회에 더욱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또한, 통일부는 보건복지부로부터 단전·단수·통신비 체납 등의 위기 지표(47종)를 격월로 제공받아 관리하고 있다. 여러 위기 지표가 다수 중첩되어 장기간 지속되는 위기 징후 가구에 대해 안부 확인 등 상시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였다. 안부가 확인되지 않는 고위험 징후 대상자에 대해서는 전화조사, 현장 방문 및 출입국 기록 사실조회(법무부) 등을 통해 안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하나센터,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해 필요한 지원을 하였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경찰청, 공공기관(한국토지주택공사·서울주택도시공사) 등의 각종 정보도 종합·분석하여 위기 가능성이 높은 북향민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였다.

특히, 긴급한 위기 상황에 놓인 북향민이 보다 쉽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상시 직통 업무 전화를 운영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안전 지원 관리 체계를 운영하였다.



(2) 취약계층 북향민 발굴 및 지원 확대

정부는 하나센터, 지방자치단체,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위기 상황에 처한 북향민을 발굴하고 지역 자원과 연계하여 전문상담 제공, 사례 관리 등 다양한 지원을 하였다.

전국 25개 하나센터를 통해 거주지로 전입하는 북향민을 대상으로 초기집중교육(8일, 50시간)과 지역적응지원 및 통합안전지원을 실시하여 신속한 지역사회 적응과 자립·자활기반 조성을 지원하였다. 하나센터는 2025년 총 7만 9,930건의 상담을 진

행하였다.

북향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 긴급생계비, 의료비, 긴급주거지원, 사망위로금, 무연고자 장례 등을 남북하나재단을 통해 지원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2025년 긴급생계비 401건, 의료비 1,262건, 긴급주거지원 251건, 사망위로금 53건, 무연고자 장례 38건을 지원하였다.

'위기상황 북향민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생계 곤란이나 건강 악화 등으로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북향민에 대해 전국의 하나센터 및 신변보호기관과 협의하여 생필품을 지원하고 정서적 안정을 돕고 있다. 2025년에는 50명의 위기가구 북향민에게 총 3,500만 원 상당의 생필품을 지원하였다.

북향민 고독사 예방을 위해 2024년 서울·경기·인천 지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독거 북향민 500가구를 대상으로 유제품과 김·계란 등 식품을 배송하는 안부확인 사업('똑똑! 안녕하세요?')을 ㈜HY(구 한국야쿠르트)와 함께 시범 실시하였다. 2025년에는 안부확인 사업을 55세 이상 독거 가구와 한부모가정 등을 포함하여 전국으로 확대(2024년 500가구 → 2025년 1,250 가구) 실시하여 국가의 긴급지원이 필요한 고위험 북향민 발굴과 위기가구 대상 생계·의료 지원을 연계하였다.

또한, 전국 하나센터에서는 만 70세 이상 고령 독거 가구에 대해 매월 1회 유선 또는 방문을 통해 주기적 안부 확인 사업을 추진하였다. 이와 같이, 안부확인 사업을 계기로 국가의 긴급 지원이 필요한 고위험 북향민 발굴 등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였다.

'똑똑! 안녕하세요?' 안부확인 사업에 대한 반응

"평소에 건강을 잘 챙기지 못했는데 발효유를 챙겨주니 국가에서 나를 생각해주는 마음이 들어 감사함을 느꼈습니다."(서울 강동구 거주 북향민)

"지역에 북향민이 있는지 몰랐는데 우리와 다르지 않은 이웃으로 있더라구요. 이젠 가족 같고 부모님 같으세요."(㈜HY 매니저)



무연고 북향민 장례 지원(9.25.)


통일부차관, 한부모 가정 북향민 위로 간담회(9.29.)

(3) 북향민 통합지원시스템 안정적 운영

정부는 북향민 위기가구를 신속하게 발굴하고, 사례별 지원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2024년부터 북향민 통합지원시스템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 위기 북향민을 신속히 발굴하여 대응·지원하고 이력도 함께 관리하는 효율적이고 통합적인 원스톱 지원체계이다. 위기지표 47종에 해당하는 북향민의 상세 지표를 관리하고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위기 징후에 대한 신속 보고 및 사후 대응 체계 구축을 통해 위기 대상자를 세밀히 관리하고 있다.

2025년에는 위기를 선제적으로 포착·관리하고, 북향민 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주요 기능을 개선하였다. 기존에는 북향민의 위기지표 해당 여부만 파악할 수 있었으나 추가 정보 연계를 통해 세부적인 위기 수준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이 시스템을 통한 자료관리, 담당자별 권한 관리, 개인정보 모니터링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대폭 강화하였다.

특히, 시스템 사용 대상자를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거주지보호담당관 34명에서 208개 기초지방자치단체 거주지보호담당관 211명까지 확대하여 위기 북향민에 대한 위기 지표 검색 및 모니터링을 지원하였다.

북향민 통합지원시스템 개요

추진 목표	신속하고 안전한 북향민(위기가구) 통합지원 시스템 구축
추진 방향	신속성 / 편리성 / 안정성 / 통합성 / 소통성 / 종합분석성

업무 추진 체계

AS-IS

대상자 정보 관리 → 사례 관리 → 사업관리 → 통계

TO-BE

- 대상자 통합 관리
  - 하나센터 지역별 대상자 관리
  - 대상자 상담 및 서비스이력 통합
  - 대상자별 SMS 통지 서비스 지원
- 위기발굴관리
  - 위기징후 모니터링 및 통계 관리
  - 시계열, 누적 등 데이터 분석 기능
  - 위기 발굴 요청 및 보고서 관리
- 사례관리 강화
  - 사례관리 대상자 판별 관리
  - 대상자별 맞춤형 서비스 지원
  - 고난도사례/통합사례/서비스연계
- 자원관리
  - 등록자원 분류 체계화
  - 자원 활용 실적 등록 및 리뷰 관리
  - 보조금24 등을 활용 자원 통합검색
- 사업관리 강화
  - 반복 및 수작업 업무 자동화
  - 통일부/재단/센터 일정통합관리
  - 개인정보보호 실시간 모니터링
- 업무 협업
  - 국회요구자료 취합/배부
  - 긴급/일반 공지 사항 전파
  - 커뮤니티 기능 및 메일 알람

2. 북향민 지역적응센터 역량 강화

정부는 북향민 지역적응센터(이하 '하나센터')를 통해 하나원을 수료하고 거주지로 전입한 북향민에게 지역사회의 빠른 적응과 정착을 위한 초기 집중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하나센터의 초기 집중교육은 8일(50시간)에 걸쳐 이루어지는데 진로 및 취업교육, 실생활 및 지역사회 이해, 심리·정서 안정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하나원에서의 교육과 달리 지역 현장체험 중심이다.

지역 적응지원 사업으로서 교육 및 진학, 진로 및 취업, 생계, 의료, 심리·정서, 주민통합 등 다양한 분야에서 북향민에게 필요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북향민 개개인의 상황과 필요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또한, 2023년부터 취약계층 조사와 지원 등을 통해 위기 의심자를 발굴하고 선제적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제공하고 있다.

하나센터는 거주지 현장 최일선에서 북향민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서 그 역할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특히, 북향민이 점차 고령화됨에 따라 위기 대상자 발굴 및 지원하는 통합안전지원 업무가 더 중요해지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하나센터 업무 매뉴얼을 개편하고 종사자 역량을 높이고자 관련 프로그램을 강화하였다.

정부는 지역사회로의 북향민 사회통합 차원에서 하나센터 관리자와 북향민 단체 간 의견 수렴 간담회를 개최하여 긴밀한 소통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상호 업무에 대한 이해와 공감의 장을 마련하였다. 이 간담회에서 북향민 사회의 인식 변화를 감안하여 시혜성 위주의 정착지원을 벗어나 북향민 수용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 발굴을 위해 정기적인 소통 네트워크를 구축하기로 하였다.

정부는 전국 16개 시·도(세종시 제외)에 25개 하나센터(서울 4개소, 경기 6개소, 강원 2개소 외 광역시·도별 1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관할지역 범위가 넓어 북향민의 접근성이 떨어지거나, 북향민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의 하나센터에서는 지역사무소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한편, 하나센터에서는 북향민의 민감한 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다루고 있으므

로 보안 및 외부의 사이버 위협 등으로부터의 사고 예방 중요성이 높아졌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하나센터에 대한 유관기관 합동 보안점검을 실시하여 북향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하나센터에 대한 정보보안 강화를 위해 전국 25개 하나센터 및 5개 지역사무소 등 총 30곳을 대상으로 관계기관과 합동점검을 실시하였다.

2025년에는 하나센터가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시설로 지정됨에 따라 제도적 기반이 강화되었다. 이에 따라 운영의 안전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게 되었으며, 종사자의 처우 개선과 전문성 강화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 이에 따라 북향민에 대한 안정적·전문적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졌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하나센터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관련 예산 증액을 추진하였으며 그 결과 2025년에는 종사자의 인건비가 일부 인상되었다.

정부는 하나센터 현장 점검(6회)을 통해 센터의 업무 추진 상황을 확인하고 적실성 있는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하나센터 종사자의 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한 직무교육과 워크숍을 개최(4회)하였고, 전국 하나센터 관리자 정례회의를 개최(2회)하여 정부의 정책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개선 필요 사항 등에 대한 의견 수렴을 진행하였다.



전국 하나센터 실무직원 워크숍(7.3.~9.)


하나센터 관리자-북향민 단체 정책 간담회(9.17.)

제4절

북향민 인식 개선 및 남북통합문화 조성

1. 제2회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행사 개최

2024년에 북향민의 권익 향상과 남북 주민 간 통합문화 형성을 위해 「북한이탈주민의 날」(7.14.)이 국가기념일로 제정되었으며, 2025년에는 제2회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행사가 7월 12일부터 18일까지 전국에서 개최되었다.

먼저, 7월 12일부터 13일까지 북향민과 시민이 참여하는 문화행사가 코엑스의 대형 전시장에서 진행되었다. 90여 개 단체와 남북 주민 6천여 명이 참여하여 북향민의 삶을 공연, 전시, 토크콘서트, 체험부스를 통해 표현함으로써 남북 주민이 함께 어우러지는 연대와 화합의 장이 마련되었다.

7월 14일에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개최된 제2회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식은 북향민과 정착지원 종사자 1천여 명이 초청되어 진행되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영상 축사를 통해 "북한이탈주민의 자립과 통합을 함께 이뤄내기 위해 기본적인 정착지원과 보호를 넘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함께 어울리고, 성장하고, 발전해 나가실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다름이 하나되어 함께 만드는 미래'를 주제로 진행된 이번 기념식은 북향민의 성공적 정착에 기여한 유공자에 대한 포상을 비롯해, 북향민의 다양한 삶을 담은 영상 상영, 남북 청년의 합동공연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북향민과 관련 지원정책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는 의미 있는 행사로 마무리되었다.

한편, 정부는 7월 16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북한이탈주민과 함께하는 동행의 길'

을 주제로 통일부, 북한이탈주민학회, 한양대가 공동으로 학술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학술회의에서는 학계 전문가 20여 명이 참석하여 북향민 인식 개선 및 사회통합 방안을 논의하고, 북향민 고령자 증가와 가족구성 다변화에 따른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였다.

아울러, 7월 12일부터 18일까지 전국 17개 시·도와 유관기관에서 토론회, 문화공연, 북한문화 체험 등 30여 개의 다양한 행사가 개최되었다. 4천여 명이 참여한 이번 행사들은 북향민과 지역 주민이 서로를 자연스럽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북한이탈주민의 날」 문화행사(7.12.~13.)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식(7.14.)

2. 북향민에 대한 인식 개선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행사 외에도 북향민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다. 우선, '북향민 인식 개선 및 남북 주민통합을 위한 정책사업 발굴' 연구용역을 실시(4~7월)하여 북향민에 대한 부정적 인식 해소를 통한 사회통합 방안을 모색하였다.

남북하나재단에서는 10월 1일 '남북한 주민 사회통합사례 발표대회'를 개최하였다. 동 대회에서 우리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북향민과 그들의 정착을 돕고 있는 남한 주민도 함께 소개함으로써, 남북 주민 간 상호 이해와 소통을 촉진하고 포용적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아울러, 남북하나재단은 북향민 소식지인 『월간하나』에 정착 성공 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소개하였으며, 북향민의 직장생활 적응기를 다룬 웹드라마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여 사회통합에 대한 공감대를 넓히고자 하였다.

정부는 지역사회 주민의 북향민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남북 주민으로 구성된 '착한(着韓) 봉사단'의 활동도 지원하였다. 11월 15일에는 전남 여수시에서 해양 환경 정화와 해안 쓰레기 수거 활동을 진행하였다. 여수시청과 협조하여 환경 정화가 시급한 여수시 대율항 인근 해변을 봉사장소로 선정하여 12개의 '착한 봉사단' 및 남북하나재단 임직원 70여 명이 봉사활동을 통해 약 1.5톤의 해양쓰레기를 수거하였다.

또한, 남북 주민이 함께 어울리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12월 6일 남북통합문화센터에서 남북 주민이 함께하는 합창경연대회 '통 큰 울림'을 개최하였으며, 예선을 거쳐 총 10개 팀 150여 명이 참가하였다.



2025 사회통합사례 발표대회(10.1.)



착한 봉사단 연합봉사활동(11.15.)

3. 남북통합문화센터 운영

남북통합문화센터(이하 '센터')는 2020년 5월 개관 이후 북향민과 지역 주민 간의 직접적인 소통과 문화를 매개로 교류하며 공감대를 형성하고 통합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특히 2025년도에는 통합문화, 주민교류, 자원봉사, 심리·언어 지원 등 4대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운영하였고, 북향민과 지역 주민 2만 5천여 명이 참여하였다. 이들 프로그램을 통해, 상호 소통과 이해를 증진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통합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통합문화 플랫폼으로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였다.

(1) 북향민과의 소통 및 교류 활성화

센터는 북향민과 지역 주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만나 삶의 이야기를 나누며 상호 이해를 증진하는 과정으로 '남북생애나눔대화'와 심화 프로그램 '1박 2일 생애나눔대화'를 진행하였다. 또한, 남북더보기, 인문학강좌, 노래교실, 아코디언교실 등 다양한 사회통합 교양강좌를 운영하여 지역 주민과 북향민이 자연스럽게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센터는 문화교류를 확대하기 위해 '남북통합문화축제'(5월), '미리보는 통일공연'(3월, 9월), 남북예술인이 함께하는 '가을 음악회'(10월) 등을 개최하여 참여자가 남북의 문화를 함께 체험하며 교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였다. 특히, 센터 개관 5주년을 기념하여 열린 '2025 남북통합문화축제'(5.17.)에서는 북한 음식 체험, 토크콘서트, 남북예술인 합동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아울러, 센터는 접근성이 제한된 지역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찾아가는 문화행사'를 기획하여 김포에서 '남북예술교류 2025 가을음악회'를 개최(10.25.)함으로써



2025 남북통합문화축제(5.17.)


남북예술교류 2025 가을음악회(10.25.)

계층과 지역을 넘어 남북통합문화를 확산시키고 참여기회를 확대하는데 노력하였다.

센터는 기획전시관과 통합문화체험관을 상시 운영하여 지역 주민이 북한과 북향민에 대한 정보를 쉽게 접하고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기획전시관에서는 남북 분단의 아픔, 고통 치유의 노력, 북향민, 통일미래 등을 주제로 전시가 진행되고 있다.

통합문화체험관에서는 가상현실(VR)을 활용하여 이산가족의 고향을 체험하고 북한 음식 만들어보기, 평양인민대학습당 앞 광장에서 활쏘기, 서울 경복궁 앞에서 투호 놀이 등 남북의 다양한 문화를 흥미롭게 체험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2025년도에는 센터 1층에 북향민 예술인 특별전시관을 개설·운영(3회)하여 방문객의 접근성을 높이고 북향민 예술인과 남북통합문화에 대한 관심 제고와 공감대 형성에 노력하였다.



북향민 예술인 특별전시(10.22.)


통합문화체험 자동차여행 VR(상시)

(2) 북향민 인식 개선을 위한 콘텐츠 제작·확산

센터는 남북 통합을 주제로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제작·보급하며, 지역 주민과 북향민이 남북문화를 이해하고 소통하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2025년도에는 남북통합문화 콘텐츠 창작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북향민 작가와 함께하는 대담형식 '북콘서트'(3회)를 개최하고 남북 간 문화적 거리감을 좁히기 위한 사회통합 '인문학 강좌'(3회)를 운영하였다. 또한, 남북 동일 직업군 인물을 초대하여 남북의 문화, 예술, 일상생활을 공유하고 비교·토론하는 '남북 더보기'(5회)를 진행함

으로써 참여자의 이해와 공감대 확산에 노력하였다.

한편, 센터의 인지도를 높이고 북향민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기 위해 센터 자원봉사활동 다큐멘터리와 통합문화행사 및 강좌 프로그램별 활동 영상을 제작·홍보하였다. 또한, 지역 주민이 북향민과 보다 친근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북한이탈주민 소통어학당 토크콘서트'(8.30.), '북한이탈주민 노래자랑'(9.6.) 등을 개최하여 참여자가 직접 만나 교류하고 이해를 넓힐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이 외에도, 센터는 북향민 예술인을 발굴하여 창작 역량을 강화하며 콘텐츠 개발을 지원하고자 통합문화 콘텐츠 창작지원 사업을 진행하였다. 2025년에는 도서 분야(3명), 시각예술 분야(3명), 공연예술 분야(5개 단체) 등을 대상으로 북향민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통합문화콘텐츠 확산을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제2회 「북한이탈주민의 날」을 기념하여 센터 대강당에서 창작 연극 '백학'을 공연(7.19.)하였고 북향민 작가와 남한 작가의 작품을 하나로 융합한 '경계를 뛰어넘다' 전시회 개최(7.14.~7.19.)를 통해 참가자들이 서로의 경험과 문화를 자연스럽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남북더보기(3.29.)


창작지원 작품 전시회(6.20.~7.6.)



소통어학당 토크콘서트(8.30.)



북향민 노래자랑(9.6.)

(3) 북향민과 함께하는 봉사활동

정부는 남북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연합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나눔과 연대의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김장 담그기 등 '음식 나눔 자원봉사'(7회), 지역문화행사의 체험부스 운영 등 '풍선아트 자원봉사'(4회) 등을 추진하였다.

또한, 정부는 센터를 중심으로 '남북통합문화센터 봉사단'을 창단·운영하였다. 봉


국립현충원 환경정화 봉사활동(5.17.)


북향민 농부 일손돕기 봉사 활동(6.21.)


자원봉사 페스티벌(9.27.)


김장 담그기&나눔 봉사활동(11.8.)

사단은 2025년 동안 북향민 농가 일손돕기 등 다양한 자원봉사활동(8회)을 실시하였으며, 남북 주민이 함께 하는 나눔문화를 확산하고 상호이해와 유대감을 높이고자 하였다. 아울러, 전국의 남북 주민 자원봉사 단체가 한자리에 모이는 '자원봉사 페스티벌'을 개최(9.27.)하였다. 이 행사는 지역별 자원봉사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정보와 자원을 공유하며 협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4) 북향민의 사회 적응 능력 배양

센터에서는 북향민의 심리·정서적 어려움과 지역사회 적응 과정에서 나타나는 의사소통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심리·언어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특히, 상담 프로그램인 '상담센터 마음의 숲' 운영을 통해 탈북 과정에서 겪은 트라우마와 정서적 불안을 완화하고 심리적 회복과 사회 적응을 지원하였다. 이를 위해 센터는 2025년에 종합 심리 검사(80회), 심리 상담(748회), 심리 치유(2,288회), 심리 코칭(25회)을 실시하였으며, 이러한 프로그램 운영 결과 참여자의 심리적 안정감과 자아존중감이 향상되고 사회적 관계 개선 등 긍정적 변화가 나타났다.

또한, '소통어학당'을 운영하여 남북한 언어와 문화 차이로 인한 의사소통의 어려움과 갈등을 해소하려고 노력하였다. 의사소통교육(32회), 비즈니스 스피치교육(3회), 우리말나눔 소통캠프(1회) 등 단계별 커뮤니케이션 교육과정을 통해 북향민의 사회적·직업적 의사소통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07

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

제1절 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 기반 확충

제2절 미래세대 통일교육 활성화

제3절 사회 통일교육 내실화

제4절 한반도통일미래센터 운영

2025 한반도 평화공존의 기록들





UNIFICATION WHITE PAPER

제7장

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

2025년 정부는 한반도 정세 변화 속에서 새로운 국정 기조에 따라 통일교육의 패러다임을 '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으로 전환하였다. 통일부 소속기관인 국립통일교육원의 명칭을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으로 개칭하는 한편, 전문가 및 유관기관 관계자와 간담회,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폭넓게 수렴하였다. 교사, 시·도 교육청 장학사, 청년, 시민사회 인사를 대상으로 두 차례의 사회적 대화를 실시하는 등 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의 가능성도 모색하였다.

또한, 정부는 기본 교재 2종 『통일문제 이해』, 『북한 이해』를 비롯하여 다양한 교육 콘텐츠를 제작하였으며, TV 채널과의 협업 영상, 실감형 기술을 활용한 콘텐츠 등을 개발·보급하였다. 이와 함께 유아·어린이, 재외동포를 위한 통일교육 콘텐츠도 제작·배포하여 통일교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정부는 한반도 평화와 통일 문제에 대한 미래세대의 관심을 높이고 학교 통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과 다양한 통일교육 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였다. '찾아가는 학교 통일교육', '학교 통일 체험교육' 등 초·중·고등학생 대상 참여·체험형 통일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기존 8개 대학 외에 4개 대학을 '통일교육 선도대학'으로 신규 지정하였다. 또한, 2030세대를 대상으로 '글로벌 통일체험', '2030 통일미래 해커톤' 등의 신규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제13회 통일교육주간(5.20.~26.)에는 광복 80주년과 연계하여 슬로건 공모전, 어린이 통일 골든벨, 2030 팝업 부스 행사 등을 진행하였다.

지역사회의 통일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하여 지역통일교육센터와 지역 통일관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통일교육 활동을 전개하였다. 2025년 전국 10개 지역통일교육센터는 약 23만 명의 시민을 대상으로 통일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전국 13개 통일관에서는 약 8만 명의 방문객이 통일 관련 전시·체험 프로그램을 경험하였다.

경기도 연천에 위치한 한반도통일미래센터는 청소년, 대학생, 유관기관 종사자 등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통일체험연수를 진행하였다. 2025년에는 처음으로 4월 셋째 주를 온라인 연수 기간으로 설정하여 원거리 학교, 취약계층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한 연수를 집중적으로 실시하였다. 또한, 통일미래체험관에 AI 통일교육 로봇을 도입하고, 일부 공간에 대한 개보수를 완료하였다.

제1절

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 기반 확충

1. 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 방향 정립

정부는 한반도 정세 변화 속에서 통일교육의 역할을 재정립하는 데 주력하였다. 이러한 기조 아래, 정부의 123대 국정과제 중 117번 과제인 '국민과 함께하는 한반도 평화·통일정책 추진'의 하위 실천 과제로 '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 추진'을 선정하였다. 이는 통일교육의 목표를 단순히 통일·북한 문제에 대한 지식 전달 차원을 넘어, 한반도 평화공존 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국민인식 제고에 두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이러한 정책 방향에 발맞추어, 11월 4일 통일부 조직개편과 함께 국립통일교육원의 기관 명칭을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으로 개칭하였다. 조직과 인력 또한 개편하여 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을 종합적으로 기획·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한편, 교육 패러다임의 전환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폭넓게 반영하기 위해 전문가 및 유관기관 관계자를 대상으로 간담회, 토론회, 세미나 등을 지속적으로 개최하였다. 8월 14일에는 통일부장관 주재로 서울특별시교육감과 통일교육 선도대학 총장, 지역통일교육센터장, 통일교육 연구학교 교장 등이 참여한 의견 수렴 간담회를 개최하여 학교 현장, 대학, 지역사회 차원에서 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을 실천하고 확산하기 위한 과제를 논의하였다.

아울러, 내용적·제도적 기반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기 위해 '평화통일교육 개혁 TF'와 '평화통일교육 법제 TF'를 구성·운영하였다. 평화통일교육 개혁 TF는 학교 교사, 교육 전문가, 시민사회 활동가, 유관기관 관계자 등이 참여하였으며, 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의 개념과 방향을 정립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TF 논의 내용은 2026년 발간을 목표로 준비 중인 『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 기본 방향』에 반영하여 향후 교육 현장의 이해를 제고하고자 하였다. 평화통일교육 법제 TF는 변호사, 법제·교육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통일교육 지원법」 개정 방향을 검토하였다.

또한, 교육 패러다임 전환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11월 4일과 12월 11일, 총 2회에 걸쳐 사회적 대화를 개최하였다. 이 자리에는 교사, 지역별 교육청 장학사, 시민사회 인사, 청년 등 80여 명이 참석하여 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의 필요성과 방향에 대해 숙의토론을 진행하고 사회적 합의 가능성을 모색하였다.

한편, 교육 현장의 실행 역량 강화를 위해 11월 18일부터 20일까지 파주에서 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 스타강사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활동 중인 통일교육 강사를 대상으로 학습자 중심의 참여형·토론 중심 강의 교수법을 공유하고 확산함으로써, 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이 실제 교육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 스타강사 워크숍(11.18.~20.)



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 관련 사회적 대화(12.11.)

2. 통일교육 콘텐츠의 개발과 보급

정부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콘텐츠를 개발·보급함으로써 통일교육의 효과성과 수용성 제고를 도모하였다. 먼저, 1972년부터 통일 문제와 북한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전달하기 위해 통일교육 기본 교재를 발간해 오고 있다. 2025년에는 『통일문제 이해』, 『북한 이해』 2종을 각 3만여 부 발간하여, 통일교육 교재로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전국 초·중·고등학교와 대학교, 공공도서관, 통일교육 단체 등 1만 6천여 개 기관에 배부하였다.

정부는 교육 대상자의 눈높이에 맞춘 다양한 참고도서도 제작하였다. 청소년의 시각에 맞춰 북한에 대한 지식을 전달하는 『청소년 북한 인사이드』를 발간하였고,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교 저학년을 위한 통일 그림동화 『퐁! 퐁! 퐁! 다시 만나』를 발간하였다. 또한, 재외동포 아동용 통일교육 도서인 『통일아 안녕(Hello! Unified Korea)』을 초등학교 저학년 대상으로, 통일교육 교재 『한반도의 오늘과 통일』을 초등학교 고학년 대상으로 전면 개편하여 발간하였다. 5월 통일교육주간에는 학교·사회 통일교육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통일문제 이해』, 『북한 이해』를 바탕으로 대상별 표준 강의안 9종을 제작하여 배포하였다.



통일교육 기본교재



통일교육 그림동화



재외동포 아동용
통일교육 도서



초등 통일교육 교재

또한, 정부는 학교·사회 통일교육 현장에서 직접 활용할 수 있는 통일교육 영상 자료를 제작하였다. 학생들의 흥미 제고를 위해 초등 및 중등 교과와 연계한 10분 내외 분량의 클립 영상을 제작하고,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누리집에 게시하여 교사들이 수업 시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초등 교과 연계 영상으로는 「동무톡톡」, 「남북 짝꿍 도시 탐험대」, 「북한에서 온 맛있는 초대장」, 「Let's make peace」, 「방 탈출 게임! 친구를 만나러 가는 길」 5편을, 중등 사회 교과 연계 영상으로는 「DMZ 경계에 핀 희망」, 「북쪽에서 가장 달콤한 동네」, 「어느날 평화는 전학생처럼」을 제작하였다. 또한, 공공기관 및 성인 대상 통일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북한 현황과 국제 정세를 주제로 영상 교육자료 「격변의 국제 정세, 한반도의 길을 묻다」와 「2025, 북한은 지금」을 제작하였고, 2024년 제작한 통일교육 그림동화 『참매 나나의 선택』과 2025년 그림동화 『퐁! 퐁! 퐁! 다시 만나!』를 애니메이션으로 제작·게시하였다.



초등 교과연계 영상



중등 교과연계 영상



공공 통일교육용 영상

이와 함께, 더 많은 국민이 통일 문제를 접할 수 있도록 방송사 등과 협업하여 통일교육 콘텐츠를 제작·방영하였다. 광복 80주년을 기념하여 JTBC 「최태성의 대동여행지도」(10.12. 방영)를 제작하여 80년 전 독립의 열망이 현재의 통일에 대한 희망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전달하였고, 평화와 화합의 메시지를 담은 협업 애니메이션 「브레드



JTBC, 「최태성의 대동여행지도」(10.12.)



「브레드이발소: 초콜릿 마을의 축제」



증강현실(AR) 교보재 시연



통일동화숲 시연 수업



통일동화숲 신규 개발 콘텐츠

2025년 제작 통일교육 콘텐츠 현황

구분	자료명	주요내용	대상
도서	『통일문제 이해』	△통일 문제에 대한 관점 △국제 정세와 통일 환경 △남북관계 △통일정책 및 통일 방안 △통일 비전과 과제	대학생 성인
	『북한 이해』	△북한 이해의 관점 △정치체제 △대외관계 △군사 △경제 △사회와 주민생활 △문화, 언론, 교육	대학생 성인
	『퐁! 퐁! 퐁! 다시 만나!』	두만강에서 태어난 일곱개의 물방울들이 한반도를 따라 여행하며, 하나가 되는 미래를 소망하는 이야기	아동
	『통일아 안녕』	재외동포 아동용 통일교육 교재(2023년 발간)를 초등학교 저학년용으로 전면 개편 발간	아동
	『청소년 북한 인사이드』	북한 사회 전반 및 생활 실상을 핵심 키워드 중심으로 알기 쉽게 해설	중학생
영상	초등 교과연계 클립영상(5종)	△동무톡톡 △남북 짝꿍 도시 탐험대 △북한에서 온 맛있는 초대장 △Let's make peace △방 탈출 게임! 친구를 만나러 가는 길	초등
	공공 통일교육 영상(2종)	△통일 환경(「격변의 국제 정세, 한반도의 길을 묻다」) △북한 현황(「북한은 지금」)	성인
	통일교육 애니메이션 「참매 나나의 선택」	참매 나나가 왕실 사냥매 학교의 통제와 억압에서 벗어나 자유를 찾아 날아가는 이야기	아동
	통일교육 애니메이션 「퐁! 퐁! 퐁! 다시 만나!」	통일교육 그림동화 『퐁! 퐁! 퐁! 다시 만나!』를 기반으로 한 애니메이션	아동
	JTBC 「최태성의 대동여행지도」	광복 80주년 기념, 통일의 의미와 희망을 전달	전국민
	협업 애니메이션 「브레드이발소: 초콜릿 마을의 축제」	초콜릿 마을의 축제 중 벌어지는 갈등과 해소 과정을 통해 평화와 화합의 중요성을 전달	아동
실감형 콘텐츠	중등 교과연계 영상(3종) 및 증강현실(AR) 교보재	△북쪽에서 가장 달콤한 동네 △DMZ, 경계에 핀 희망 △어느 날 평화는 전학생처럼 등	중등
	'북한에서의 하루' 가상현실(VR) 콘텐츠	남한의 청소년이 타임루프 오작동으로 북한에서 하루를 보내면서 북한 청소년의 학교생활, 노력동원, 사회통제 등을 체험	초중등
	'통일동화숲' 앱 콘텐츠	통일교육 그림동화 『퐁! 퐁! 퐁! 다시 만나!』를 기반으로 한 놀이형 독서 콘텐츠 추가	아동

이발소: 초콜릿 마을의 축제」를 제작하여 케이블TV·OTT 등을 통해 방영하였다.

정부는 교육의 몰입도와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실감형 기술을 활용한 통일교육 콘텐츠도 제작하였다. 먼저, 증강현실(AR) 마커와 QR 코드를 활용하여 모바일 환경에서 접근할 수 있는 교보재 「통일e지」도 개발하여 전국 중학교에 보급하였다. 또한, 북한의 학교생활과 일상생활을 체험할 수 있는 가상현실(VR) 콘텐츠 「북한에서의 하루」(2024년 제작)를 재정비하여 인천광역시 7개 초·중학교, 오두산통일전망대 및 지역 통일관에서 현장 체험형 교육을 실시하였다. 아울러, 통일교육 그림동화를 바탕으로 다양한 참여형 수업콘텐츠를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 「통일동화숲」을 출시하고, 「퐁! 퐁! 퐁! 다시 만나!」를 비롯한 신규 콘텐츠를 개발·탑재하는 등 현장 활용성을 높였다. 나아가 사전 공모를 통해 선정된 서울시 30개 초등학교의 학생 약 700명을 대상으로 통일교육 강사가 학교에 방문하여 체험형 수업을 진행하는 「통일동화숲」 현장 시연을 실시하여 교육 현장의 호응을 얻었다.

또한, 정부는 뉴미디어를 통해서도 통일·북한 문제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확산하고자 하였다.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은 유튜브·페이스북·인스타그램·엑스·카카오톡채널 등 5개 뉴미디어 채널을 통해 통일교육 콘텐츠를 제공하거나 각종 행사 및 활동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며 정책 고객과 소통하였다. 미래세대의 공감과 호응을 유도하기 위해 일상 친화적 소재를 발굴하고 이를 짧고 유익한 지식 콘텐츠로 제작하



통일교육 뉴미디어 영상
(핵심 쏙쏙, 북한 이야기)



통일교육 뉴미디어 영상
(남북 소통 대담: 남한Z 북한Z 토크)

여 뉴미디어 채널을 통해 주기적으로 제공하였다. '북한 정보 전달'(핵심 쏙쏙, 북한 이야기), '남북 소통 대담'(남한Z 북한Z 토크), '남북 문화 공감'(짤막영상), '각 분야 전문가가 본 통일'(미래를 여는 대화, 로그온 통일), '남북관계 주요 역사'(통일 인사이드) 등의 주제를 선정하고 이에 맞는 다양한 형식의 짧은 교육 콘텐츠를 총 77편 제작하였다. 2025년 5개 뉴미디어 채널을 운영한 결과 총 구독자 수는 9만 8,058명이었으며, 유튜브 콘텐츠의 총 조회 수는 8만 4,979회를 기록하였다.

3. 통일교육과정 운영

정부는 우리 사회 내 평화·통일 공감대를 확산하고 나아가 통일미래에 대비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양한 통일교육과정을 운영하였다. 통일미래의 주역이 될 2030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차세대통일전문가과정부터 사회 주도층을 대상으로 하는 통일정책최고위과정에 이르기까지 대상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였다. 2025년 한 해 동안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이 실시한 6개의 전문과정, 4개의 단기과정 등에 총 4,361명이 참여하였다. 이러닝(E-learning) 통일교육은 공공과정, 교원과정, 마이크로러닝과정 등을 운영하였으며 총 45만 4,714명이 참여하였다.

2025년 통일교육과정 운영 현황

(단위: 명)

구분 \ 과정	전문과정 (6개)	단기 과정(4개)				특별과정	이러닝 통일교육 과정	합계
		공직자 통일교육과정	학교통일 교육과정	사회통일 교육과정	글로벌 통일교육과정			
인 원	231	868	322	455	346	2,139	454,714	**459,075**

전문과정으로는 통일정책최고위과정, 통일정책지도자과정, 통일미래기획과정, 차세대통일전문가과정, 통일교육전문강사과정, 북향민전문강사과정 등 6개 과정이 있으며 총 231명을 대상으로 교육하였다.

통일정책최고위과정은 우리 사회의 평화·통일 공감대 확산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각계 사회지도층 인사 32명을 교육 대상으로 하였다. 또한, 범정부적 통일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국·과장급 공무원과 공기업 간부 등 61명을 대상으로 1년 장기 교육인 통일정책지도자과정을 운영하였다. 정부의 한반도 정책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면서, 재난 안전, 기후변화 및 저출산 고령화 등 다부처 협업 과제를 발굴하여 교육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구성하였다. 4~5급 상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통일미래기획과정을 통해 급변하는 통일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실무급 통일 전문 인력 23명을 배출하였다. 차세대통일전문가과정에서는 청년세대의 통일에 대한 관심이 낮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통일의 의미와 필요성을 살펴보고 통일미래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2030세대 전문가 50명을 양성하였다.



통일정책지도자과정(1.20.~11.28.)



차세대통일전문가과정(2.20.~11.28.)



통일정책최고위과정(8.14.~10.30.)

통일교육전문강사과정은 일선 공공기관, 학교, 지역사회 현장에서 통일·북한 문제를 주제로 교육할 수 있는 전문강사를 양성하는 과정이다. 2025년에는 북향민 전문강사 15명을 양성하고, 기존 통일교육 전문강사 50명에 대한 재교육을 실시하였다. 이와 함께, 북향민 전문강사의 상호 소통과 정보 교류, 강의역량 제고 등을 위해 워크숍을 개최(7월)하였으며, 전문강사의 국제적 전문성 함양을 위한 해외 정책연수를 실시(11월)하였다.

단기과정으로는 공직자통일교육과정, 학교통일교육과정, 사회통일교육과정 등을 운영하였다. 공직자통일교육과정에서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통일정책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해 통일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교육하였다. 특히,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및 광역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등과 협력을 강화하여 온·오프라인 연계수업을 통해 통일교육이 다면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학교통일교육과정은 각급 학교 교사의 통일교육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과정이다. 이 과정에서는 초·중등학교 교장(감) 및 교사, 교직을 희망하는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교육 현장에서 직접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통일교육 교수 방법을 전달하는 데 초점을 두고 차별화된 통일교육을 실시하였다. 사회통일교육과정은 사회 각 분야에서 평화·통일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통일교육위원, 통일단체 및 종교단체 회원 등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정이다. 이 과정은 남북관계 현안 관련 이해의 폭을 넓히고,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필요한 가치관을 정립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였다.

2025년에는 강의실에서 진행되는 기존의 통일교육 방식을 벗어나서 분단, 평화, 통일 관련 현장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통일교육 현장견학을 실시하였다. 전용 누리집을 통해 신청한 국민을 대상으로 2박 3일 일정의 현장견학을 10회 진행하였으며, 총 499명이 참가하였다. 특히, 현장견학 9회차는 걷기를 결합한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대학생, 직장인 등 성인 38명이 4박 5일간 강원도 고성에서 철원까지 4개 군을 횡단하며 분단의 현장을 직접 둘러보고, 평화와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다.



제4차 통일교육 현장견학(7.2.)


제9차 통일교육 현장견학(9.23.)

글로벌 통일교육과정은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통일교육의 외연을 확장하고, 한반도 평화와 통일 문제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와 지지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2013년 개설되었다. 본 과정의 일환으로 매년 저명한 해외 전문가를 초청하여 국민

이 한반도 문제를 국제적인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있다. 2025년에는 해외 전문가 2명을 초빙해 국내 전문가와 학생,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총 15회의 특강과 세미나를 진행하였으며, 총 508명이 프로그램에 참가하였다.

또한, 정부는 해외 신진 학자 통일 아카데미를 통해 해외 주요 국가의 차세대 전문가를 초청하여 한반도 문제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평화와 통일에 대한 우리 정부의 노력과 의지를 전달하였다. 2025년에는 10개국에서 11명의 학자 및 공무원이 참가하여 서울, 파주, 연천 등 통일 관련 현장을 방문하고, 역대 해외 신진 학자 통일 아카데미 수료자와 함께 한반도 문제를 보다 폭넓은 관점에서 토론하는 국제 학술회의를 개최하였다. 이와 함께 주한 외국인, 해외 대학생, 재외동포 등 346명을 대상으로 총 12회의 단기 글로벌 과정을 운영하는 등 대상별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였다.



해외 신진 학자 통일 아카데미 입교식(7.8.)



단기 글로벌 과정 - 주한 외국인반(8.5.~8.)


단기 글로벌 과정 - 해외 대학생반(8.18.~21.)


단기 글로벌 과정 - 재외동포반(11.18.~21.)

정부는 광복 80주년 기념 특별 프로그램으로 「글로벌 통일체험」을 실시하였다. 「글로벌 통일체험」은 청년이 독일과 폴란드의 평화, 통일, 민주주의, 사회통합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한반도 평화공존의 필요성을 직접 체감하고 이를 온라인에서 확산할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 4월 9일부터 26일까지 온라인 접수를 통해 총 4,235명이 지원하였으며, 심사위원회의 공정한 심사를 거쳐 5개 분야 20명의 참가자를 선발하였다. 제13회 통일교육주간 계기 5월 23일부터 24일까지 1박 2일간 「글로벌 통일체험」 발대식과 사전 교육을 실시하였다.

해외 일정은 7월 13일부터 22일까지 8박 10일간 이루어졌다. 독일에서는 베를린장벽 기념관, 뫼들라로이트 접경 박물관 등 분단과 교류, 평화·통일 관련 현장을 방문하였으며, 베르너 페니히 베를린자유대 명예교수 등 현지 전문가의 특강이 이루어졌다. 폴란드에서는 그단스크의 유럽 연대센터 등 유럽 통합 관련 현장을 견학하고, 국립추모연구소 등 정부 기관을 공식 방문하였다. 또한, 바르샤바대학교 학생과 평화, 통일, 민주주의, 사회통합에 대한 서로의 경험과 시선을 공유하며 공감과 연대의 시간을 가졌다. 참가자는 일정 중 '통일 크리에이터'로 활동하며 체험 내용과 함께 평화와 통일의 의미를 다양한 SNS 콘텐츠를 제작하여 또래 청년의 관심과 호응을 이끌어 내었다.



글로벌 통일체험 - 베르너 페니히 명예교수 특강(7.14.)



글로벌 통일체험 - 바르샤바대 학생과의 만남(7.20.)

이러닝을 활용한 통일교육은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을 위한 공공과정, 교사를 위한 교원과정, 일반시민을 위한 마이크로러닝으로 운영되었다. 공공과정에서는 'AI로 그려보는 통일미래', '키워드로 보는 우크라이나 전쟁', '북한, 어떻게 볼 것인가?' 등 40여 개 과목을 운영하였다. 교원과정에서는 '남북선생님과 함께 하는 통일 Talk', '콘텐츠와 사례로 보는 통일교육 길라잡이', '음악 선생님과 함께하는 통일 이야기' 등 학교 통일교육 현장에서 필요한 내용을 담아 전달하였다. 마이크로러닝은 사용자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하나의 주제를 담은 짧은 영상 형태로 북한, 통일, 국제 정세, 인문교양의 내용을 쉽고 편하게 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정부는 2025년에도 시의성 있고 전문성을 갖춘 신규 콘텐츠를 개발·제공하고, 기존 콘텐츠에 대한 전문가 자문 및 사용자 모니터링 등을 실시함으로써 이러닝 통일교육 콘텐츠의 품질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러닝 콘텐츠(AI로 그려보는 통일미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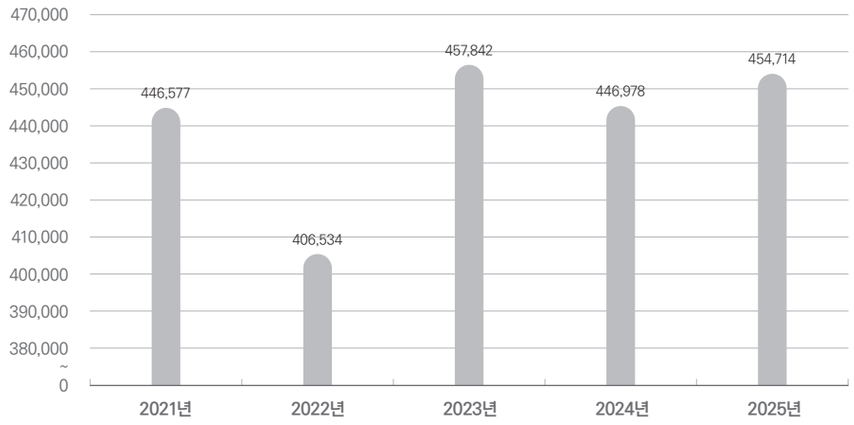


이러닝 콘텐츠(남북 선생님과 함께하는 통일 Talk)

이러닝 통일교육은 2021년 44만 6,577명, 2022년 40만 6,534명, 2023년 45만 7,842명, 2024년 44만 6,978명, 2025년 45만 4,714명이 이수하여 5년 연속 40만 명 이상의 이수 인원을 기록하였으며 국민 통일교육의 중요한 통로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은 이러닝의 수요자 수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고려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편리한 검색과 정보제공을 통해 이러닝 통일교육 부문의 대민 서비스 품질을 제고하고자 노력하였다. 또한, 이러닝 통일교육 이벤트 실시, 우수 교육생을 위한 상·하반기 통일 현장 체험 운영 등 이러닝의 확산을 위해 다양한 홍보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특히, 2025년에는 실국별로 분산 운영되던 통일부 메타버스(Metaverse)를 통합·개편한 3D 실감형 누리집(universe.go.kr)을 새롭게 오픈하여 접근성을 개선하고, 교육 현장의 활용도를 제고하였다.

연도별 이러닝 통일교육 이수 현황

(단위: 명)



4. 제13회 통일교육주간 운영

정부는 2013년부터 5월 넷째 주를 통일교육주간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2025년 제13회 통일교육주간(5.19.~25.)의 슬로건은 "광복의 빛, 통일의 길을 밝히다"이며, 광복 80주년과 연계한 슬로건 공모전을 통해 선정되었다.

제13회 통일교육주간 개막행사는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에서 개최되었으며, 이를 계기로 정부는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을 최초로 전면 개방하였다. 개막식과 함께 「어린이 통일 골든벨」을 진행하였으며, 모든 세대가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놀이·체험 중심의 부스 행사도 운영하였다. 특히, AI 로봇 '바라미'와의 대화 프로그램, 광복 80주년을 기념한 '통일 마카롱' 및 '통일빵' 제공, 북한 음식 체험 등 미래세대의 눈높이에 맞춘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정부는 청년층과의 접점을 확대하기 위해 청년 유동인구가 많은 신촌 스타광장과 홍대 레드로드에서 2030세대를 대상으로 한 팝업 부스 행사(5.20.~23.)를 운영하였다. 통일 포켓 향수 만들기, 나전칠기 통일 그립톡 만들기 등 체험 결과물을 '나만의 굿즈'로 가져갈 수 있는 참여형 프로그램을 다수 마련하였다. 이와 함께, 평화·통일·

민주시민교육 연구센터 학술행사(5.21.), 통일부 어린이·중학생 기자단 발대식(5.22.), 50초 통일 숏츠 영화제 시상식(5.23.) 등 연계 행사도 개최하였다.



어린이 통일 골든벨(5.19.)



2030 팝업 부스 행사(5.20.~23.)



50초 통일 숏츠 영화제 시상식(5.23.)

또한, 통일교육주간 전용 누리집을 통해 통일교육 콘텐츠로서 대상별 표준강의안과 클립 영상을 제공하고, 「도전! 데일리 통일 미션」, 「내 일상 속 통일 이야기」, 「온라인 통일 골든벨」 등 다양한 온라인 이벤트를 집중적으로 운영한 결과, 약 17만 명이 누리집을 방문하였다. 아울러, 인스타그램, 유튜브, 블로그, 카카오톡, 엑스, 페이스북 등 누리소통망(SNS)을 활용해 국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였으며,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캐릭터인 '유니프렌즈' 이모티콘을 카카오톡 채널 신규 추가자에게 제공하는 이벤트도 실시하였다.

통일교육 선도대학 12개교는 통일교육주간을 계기로 대학생의 평화·통일 인식 제고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통일 모의 국무회의 경연대회, 통일담론 콜로키움, 토크콘서트, 통일 골든벨, 미술 전시전 등 참여·체험형 행사를 통해 청년층의 관심과 참여를 확대하려고 노력하였다.

지역통일교육센터는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생활 속 평화·통일 체험행사를 추진하였다. 통일 음악회, 토크콘서트를 개최하고 지역 내 학교를 대상으로 통일 순회 강좌를 운영하였다. 또한, 지역축제와 연계하여 통일 마당극, 통일 퀴즈대회, 북한 음식 체험 부스, 통일 상상화 그리기 부스 등을 운영하였다. 오두산 통일전망대를 포함한 지역 통일관에서는 통일 향수병 만들기, 소원 팔찌 만들기, 통일 가훈 쓰기와 같은 체험 프로그램과 함께 음악 소풍 공연, 토크콘서트 등 전 연령층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였다.



제13회 통일교육주간
누리집 메인화면



도전! 데일리 통일 미션
(5.19.~25.)



유니프렌즈 이모티콘
증정 이벤트(5.19.)

5. 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 연구센터 활동 강화

정부는 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원내 교수 9명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는 통일교육연구센터(2020년 12월 설립)를 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 연구센터(이하 '센터')로 개칭하고, 교육 방향 정립 및 교수 기법 개발과 관련한 활동을 강화하였다.

센터는 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 관련 정책 방향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용역과 대내외 협업 연구를 비롯해, 국내외 연구기관과 연계한 학술행사 개최, 학술저널 『통일과 담론』 발간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였다. 또한, 센터는 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 평화경제와 남북 공동성장 등 새로운 개념과 담론에 대한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고 이를 교육 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구체적 방법을 모색하였다.

아울러, 학술 교류와 연구 성과 확산을 위해 학계·교육계 등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상·하반기 학술행사를 개최하였다. 5월에는 제13회 통일교육주간을 계기로 '국제질서 변화와 글로벌 통일교육'을 주제로 학술 행사를 열어, 급변하는 국제질서의 변화 및 전망을 진단하고, 글로벌 통일교육의 방향과 과제를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 12월에는 '평화경제의 미래를 여는 교육'을 주제로 새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평화경제와 남북 공동성장을 위한 국제협력 방안과 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의 과제 및 향후 방향을 논의하였다.

한편, 평화와 통일, 남북관계를 둘러싼 사회의 다양한 시각과 담론을 폭넓게 소개

하기 위해 학술저널 『통일과 담론』을 상·하반기(5월, 12월)에 걸쳐 2회 발간하였다. 저널에는 글로벌 통일교육의 방향과 실천 과제(상반기), 평화경제와 남북 공동성장 추진 전략(하반기)을 주제로 한 '특집 기획'을 비롯해, 해외 전문가의 국제 정세 관련 이해와 분석을 담은 '글로벌 인사이트', 그리고 '일반 논문', '이슈', '리뷰' 등 학계와 현장에서 논의되고 있는 다양한 담론과 연구 성과가 수록되었다.

이 밖에도, 센터는 원내 교수진을 대상으로 세미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생성형 인공지능 등 신기술의 교육적 활용 방안을 탐구하였으며, 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과 관련한 참여·토론 중심의 교수 기법을 개발하는 등 강의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였다.



제13회 통일교육주간 계기
상반기 학술 행사(5.21.)



'평화경제의 미래를 여는 교육' 주제
하반기 학술 행사(12.2.)

제2절

미래세대 통일교육 활성화

1. 참여·체험형 청소년 통일교육 강화

정부는 2025년 '찾아가는 학교 통일교육' 사업을 통해 전국 초·중·고등학생 6만 6,480명을 대상으로 2,477회의 강의를 진행하였다. '찾아가는 학교 통일교육'은 통일교육 전문 강사가 개별학교를 방문하여 놀이와 문화를 접목한 교구재 등을 활용한 참여형·맞춤형 통일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2006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학교별 수요와 자율성을 반영한 체험형 통일교육을 위해 '학교 통일 체험교육' 사업을 진행하였다. 2025년에는 전국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총 194회의 체험교육을 지원하였다. 일반 초·중·고 168개교 외에도 대안학교 4개교, 도서벽지학교 4개교, 재외한국학교 10개교, 특수학교 1개교를 별도 선정하여 교육 대상 다양화를 통한 통일교육의 저변을 확대하고 사회적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였다.



학교 통일 체험교육(6.12.)



찾아가는 학교 통일교육(10.15.)

통일미래를 이끌어 갈 주역인 어린이의 통일인식을 높여 통일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할 인재로 양성하기 위해 초등학교 5~6학년 및 중학생을 대상으로 '제14기 통일부 어린이 기자단'(120명)을 모집하여 운영하였다. 어린이 기자단은 발대식(5.22.)을 시작으로 월별 기사 작성, 통일 관련 행사 참여, 여름캠프(2회), 권역별 현장견학(4회) 및 크리에이터반 운영 등 통일인식을 함양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또한, 청소년이 통일을 매개로 자신의 꿈과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제12회 청소년 통일 문화 경연대회'도 개최하였다. 2025년에는 '50초 통일 쇼츠 영화제'(5.23.), '어린이 창작 통일동요제'(9.26.) 등 2개 부문으로 운영하였다. '50초 통일 쇼츠 영화제'에는 176편이 응모되어 18편이, '어린이 창작 통일동요제'에는 127곡이 응모되어 9곡이 수상작으로 선정되었다.



어린이 기자단 여름캠프(8.26.)



어린이 창작 통일동요제(9.26.)

2. 학교 통일교육 모범사례 확산 및 교원 전문성 향상

정부는 학교 통일교육의 지역 거점학교를 육성하고 지역사회 내 통일교육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2025년 전국 초·중·고교 중 11개를 '통일교육 연구(중심)학교'로 지정하였다. 학교별로 다양한 통일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도록 예산 지원, 운영점검 모니터링 실시, 통일교육 학습콘텐츠 및 자료 지원 등 연구학교 운영 지원을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학교 현장의 통일교육 우수 지도사례를 발굴하고 확산하기 위해 교육부와 공동으로 제13회 학교 통일교육 연구대회를 개최(11.14.)하였다. 전국 초·중·고교 교원을 대상으로 공모한 결과 총 40편이 출품되었으며, '공감(共感)으로 잇는 통일 고리(GORI) 프로젝트로 미래통일역량 기르기', '질문을 던져 통일을 짓다: AI와 QUEST 전략을 활용한 시민성 함양 통일교육 수업 설계' 등 8편이 입상작으로 선정되었다.

한편, 정부는 시·도교육청 장학사 및 통일교육 담당교사와 함께하는 학교 통일교육 발전 워크숍을 3회 개최(7.10., 9.16.~17., 9.18.~19.)하였다. 학교 통일교육 지원사업 등을 안내하고 각급 학교의 건의 사항을 청취하였으며, 통일교육 담당교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학교 통일교육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통일교육 연구(중심)학교 모니터링(8.25.)



제13회 학교 통일교육 연구대회 발표심사(11.14.)

3. 대학 통일교육 활성화

정부는 대학생의 통일에 관한 관심 제고 및 대학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해 '통일교육 선도대학 지정·육성', '대학생을 위한 통일 특강 및 강좌 지원', '대학(원)생 통일논문 공모'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다. '통일교육 선도대학(이하 '선도대학')'은 주요 권역별·기능별로 통일교육의 우수모델을 개발·확산해 나갈 대학을 지정하여 육성하는 사업으로 2016년 6개 대학으로 시작하였다. 2025년에는 수도권 5개 대학(국민대, 이화여대, 한양대, 숙명여대, 대진대), 비수도권 4개 대학[강릉원주대, 동아대, 고려대(세종), 원광대], 3개 교육대학(공주교대, 한국교원대, 춘천교대) 등 총 12개 선도대학을 운영하였다.

각 선도대학은 전공 개설, 교양필수 도입, 교양·전공 교과목 운영, 교재 개발 등을 통해 대학 통일교육의 기반을 강화하였으며, 교과 이외에도 각종 공모전과 토론대회 등 다양한 참여·체험형 통일교육을 실시하여 대학생들의 통일에 대한 관심과 긍정적 인식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였다.

'대학생을 위한 통일 특강 및 강좌' 사업은 대학생의 통일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전국 4년제 대학을 대상으로 통일·북한 관련 특강 및 강좌 개설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5년에는 29개 대학에 42개 사업(통일특강 16개, 통일강좌 26개)을 실시하여 7,315명의 대학생에게 통일교육 기회를 제공하였다. 또한, 대학 간 통일교육 관련 정보 공유를 촉진하고자 '대학생을 위한 통일 특강 및 강좌' 참여 대학 간 연합학술회의를 개최(11.13.)하였다.

통일·북한 문제 관심 제고와 대학(원)생의 창의적 정책 아이디어 발굴을 위한 논문 공모 사업도 지속 실시하였다. 2025년 제44회 대학(원)생 통일 논문 공모에는 29편의 응모작이 접수되었으며, 이 중 10편(대학생·대학원생 부문 각 5편)을 수상작으로 선정(12.10.)하였다. 또한, 통일·북한 문제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수상작을 활용할 수 있도록 책자로 발간하여 전국 대학, 공공도서관 등에 배포하고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누리집에 게시하였다.


'대학생을 위한 통일 특강 및 강좌'
참여 대학 간 연합학술회의(11.13.)



제44회 대학(원)생 통일 논문 공모
입상자 상장 수여식(12.22.)

4. 2030세대 통일교육 활성화

정부는 2030세대 청년이 통일 문제에 관심을 갖고 평화·통일에 대한 의지를 함양할 수 있도록 2019년부터 2030세대 통일교육 활성화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2025년에는 다양한 청년이 한자리에 모여 통일의 미래를 상상하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함께 발표하는 '2030 통일미래 해커톤'을 개최하였다.

'2030 통일미래 해커톤'은 11월 7일부터 9일까지 2박 3일간 한반도통일미래센터에서 개최되었다. 행사에 앞서, 통일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문제 해결에 대한 정책 아이디어 및 디지털 서비스 등을 온라인으로 공모하여 본선 참가자 50명을 선발하였다. 참가자는 본선 현장에서 10개 팀을 구성하였고, 각 팀은 남북 간 사회문제 해결과 사회통합 방안, 남북 공동의 문화·예술 콘텐츠 활성화 및 언어 경계 해소 방안 등에 대한 참신한 아이디어를 구상·발표하였다. 그 과정에서 북한학, 남북 협력, 북한 예술 등 분야 전문가들이 각 팀의 아이디어 구체화를 도왔다.

대상은 남북이 한글을 함께 사용하지만 점자 구조가 다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AI 기술을 활용하여 북향민이 점자를 입력하면 남한 용어로 변환하여 해석해 주는 서비스 '바른 점'을 기획한 '이로울E'팀이 수상하였다. 그밖에 이산가족 생애기록 통합 플랫폼 '고향'을 기획한 '이음'팀과 밈 콘텐츠와 생성형 AI로 통일을 이야기하는 청년 문화 플랫폼 '빨간 맛'을 선보인 '몬스터즈'팀이 각각 최우수상과 우수상을 수상하였다.



2030 통일미래 해커톤(11.7.~9.)



팀 '이로울E' 대상 수상(11.9.)

제3절

사회 통일교육 내실화

1. 지역통일교육센터를 통한 통일교육 실시

정부는 지역사회 통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통일교육지원법」 제6조의3에 따라 2004년부터 통일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통일교육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 기관을 지역통일교육센터로 지정하고 있으며, 전국의 지역통일교육센터는 지역사회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통일교육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고 있다. 2025년에는 전국 10개 권역(서울·경인·경남·경북·전남·전북·충남·충북·강원·제주)에서 지역통일교육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2025년 지역통일교육센터 현황

권 역	센터명	지정 기관
서울	서울통일교육센터	총신대학교
경인(경기, 인천)	경인통일교육센터	아주대학교
경남(부산, 울산, 경남)	경남통일교육센터	국립창원대학교
경북(대구, 경북)	경북통일교육센터	대구대학교
전남(광주, 전남)	전남통일교육센터	세한대학교
전북	전북통일교육센터	우석대학교
충남(대전, 세종, 충남)	충남통일교육센터	단국대학교
충북	충북통일교육센터	청주대학교
강원	강원통일교육센터	한라대학교
제주	제주통일교육센터	제주대학교

전국 10개 권역별로 지정된 지역통일교육센터는 기본·특화·연합사업을 통해 지역 주민에게 다양한 형태의 통일교육을 실시하였다. '기본사업'으로 열린통일강좌, 평화·통일 체험학습, 통일교육위원 워크숍 등을 추진하였으며, '통일 순회강좌' 프로그램을 통해 통일교육 전문강사의 활용도를 제고하고, 수요자 맞춤형 통일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충남센터, 시민 대상 통일 순회강좌(5.26.)



서울센터, 학생 대상 통일 순회강좌(6.4.)



서울센터, 통일체험학습(9.25.)



경남센터, 평화통일한마당대회(11.10.)

또한, 특화사업으로 권역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통일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였고, 연합사업으로 권역 단위 경연·행사·축제 등 권역 내 지역 간 연계 사업을 추진하였다.







서울-강원센터, 광복80주년 통일국제콘서트 및 심포지움(8.29.)



강원센터, 통일강원도 미래 포스터 공모전(10.11.)



경남센터, 평화통일한마당대회(11.10.)

아울러, 정부는 지역통일교육센터가 중심이 되어 지방자치단체·교육청·학교·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통일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였다. 또한, 지역통일교육센터 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통일강좌 등 통일교육 프로그램 운영의 일관성 있는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지역통일교육센터 운영 매뉴얼』을 발간·배포하였다.



제주지역 통일교육 유관기관 워크숍(4.25.)



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 관계자 토론회(9.24.)

2. 통일교육위원 활동 지원

정부는 지역사회 통일교육을 활성화하고 글로벌 통일교육을 확대하기 위해, 1987년부터 통일 문제와 남북관계 관련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통일에 대한 관심과 열정이 있는 국내외 인사를 통일교육위원으로 위촉해 왔다. 제24기 통일교육위원으로 국내 809명, 해외 191명 등 총 1천 명이 활동 중이며, 무보수 명예직으로 임기는 2년(2024.5.1.~2026.4.30.)이다.

제24기 지역별 통일교육위원 위촉 현황

(단위: 명)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인원	169	33	53	31	31	39	24	113	34

구분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해외	합계
인원	52	42	49	36	28	41	34	191	**1,000**

* 해외 위원은 미국 144명(LA 50명, 오렌지·샌디에이고 15명, 뉴욕 24명, 필라델피아 28명, 워싱턴 27명), 중국 15명, 일본 20명, 독일 12명 등 총 191명

정부는 제24기 통일교육위원이 한반도 평화와 통일 문제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내실 있게 활동할 수 있도록 원내 통일교육반 운영(4회, 94명), 통일교육 기본교재(『북한 이해』, 『통일문제 이해』) 배포, 통일교육 공공과정(40과목) 이러닝 수강 등을 지원하고, 통일교육위원의 자체 발굴 통일교육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사례비를 지급(39건)하였다. 재외 동포사회의 통일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해외 통일교육위원의 통일 강연과 통일부스 활동도 지원하였다. 국내외 평화·통일 공감대 확산에 기여한 우수 통일교육위원 50명에게 통일부장관 및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장 표창을 수여하는 한편, 통일교육위원 신규 로고를 활용한 배지, 티셔츠, 현수막 등을 제작하여 배포하였다.





워싱턴협의회, '코러스(KORUS) 페스티벌' 계기 통일부스 운영(10.4.~5.)





LA협의회, '트럼프 2기 시대와 한반도 통일 문제' 강연(11.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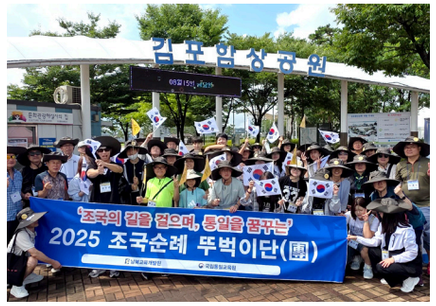


- 올리브잎을 두르고 있는 촛불 형상 프레임은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대한 간절한 염원을 상징
- 중앙에 위치한 팔 벌린 사람의 모습 및 비둘기 날개의 형상은 평화와 통일의 가치를 확산하는 통일교육위원의 정체성을 표현

통일교육위원 신규 로고 개발(2025년 5월 상표등록출원)

한편, 정부는 시민사회 차원의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해 통일교육 민간단체 활동 지원사업을 공모로 선발·지원함으로써 통일교육의 다양성과 경쟁력을 확보하려고 노력하였다. 정부는 2025년에 공모를 거쳐 통일교육 민간단체 10곳을 선발하여 총 3억 2,000만 원을 보조하였다. 10개 민간단체는 2만 1천여 명의 국민을 대상으로 통일전시회, 백일장·사생대회, 통일콘서트, 연극, 북향민 학생·MZ세대·가족·외국인 통일현

장 체험 등 총 185회의 통일교육 활동을 실시하였다. 또한, 통일교육 민간단체 실무자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하여 참여단체 간 활동성과 공유 및 지원사업 개선을 모색하였다.



북향민 학생 조국순례 뚜벅이단(8.15.)



통일기원 청소년 백일장·사생대회(8.23.)



통일미래 참여 연극 #싸싸(11.6.)



통일교육 민간단체 실무자 역량 강화 워크숍(12.4.)

3. 지역 통일관 운영 활성화

통일관은 지역 주민과 청소년에게 통일정책과 북한에 대한 인식을 확립할 수 있도록 마련된 통일교육·전시 공간으로 전국에 13곳이 운영 중이다. 오두산 통일전망대는 통일부에서 설치하여 위탁관리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그 외 지역 통일관은 민간·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설치·운영하고 있다.

오두산 통일전망대는 임진강 건너 북한 지역인 관산반도와 마주하고 있는 통일문화 체험공간으로서, 방문객이 평화와 통일 문제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전문 해설 프로그램 '통일문화해설'을 운영하였다. 또한,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이 제작한 가상현실 콘텐츠 '북한에서의 하루'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하였다.

통일전망대는 상반기 기획전시 '잊혀지지 않은 이름들', 하반기 광복 80주년 특별기획전시 '우리들의 호국, 기억의 조각', 한국·일본·대만의 작가들이 '평화'를 주제로 참여한 국제전 '2025 트로이 아시아 한국 DMZ 전시회' 등 다양한 전시를 개최하였다. 상반기 통일교육주간과 하반기 체험행사 기간에는 파주시 소년소녀합창단 공연, 문인 작가와 함께하는 통일 가훈·인생 명언 나눔, 평화배지 만들기 등 국내외 방문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통일교육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찾아가는 음악회(5.19.)



실감형 통일교육 콘텐츠 운영(5.19.)



음악소풍 공연(5.24.)



기획전시 '우리들의 호국, 기억의 조각'(8.12.~2026.3.31.)

정부는 오두산 통일전망대 등 전국 13개 통일관에 통일정책·남북관계 관련 다양한 전시자료와 체험 물품을 지원하고 있으며, 2025년에는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이 개발한 체험형 가상현실 콘텐츠도 포함하여 지원을 확대하였다. 더불어, 2025년 강원 통일+센터를 강원 통일관으로 신규 지정하여 지역 통일교육의 확산을 도모하였다.

또한, 전국 각지의 통일관은 상·하반기 체험 프로그램으로 광복 80주년 기념 메시지를 주제로 한 '음악소풍 공연', '찾아가는 음악회', '토크콘서트'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였으며, 많은 지역 주민이 가족·학교 단위로 참여하였다. 2025년 통일관 체험 프로그램 관람객은 약 8만 명으로 집계되었으며, 이는 2024년 5만 9천 명에 비해 약 2만 1천 명이 증가한 것이다.

4. 공공부문 통일교육 지원

「통일교육 지원법」 개정안이 2018년 9월 14일 시행되면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공무원과 직원 대상 통일교육이 의무화되었다. 법률에 따라 교육 대상 기관은 소속 공무원과 직원에게 매년 1회(1시간) 이상 통일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교육 대상 기관의 준비를 위하여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공공부문 통일교육이 실시되고 있다.

정부는 교육 대상 기관이 통일교육을 원활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공공부문 통일교육 지원, 사이버 교육과정 제공, 전문 강사 명단 제공, 교육용 도서·영상 자료 등 콘텐츠 제공, 공공부문 통일교육 누리집 구축 및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공공부문 통일교육이 본격적으로 실시된 지 7년이 지나면서 교육 대상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로 공공부문에 대한 통일교육이 빠르게 자리 잡고 있다. 통일교육 이수자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2025년에 집계된 2024년 교육이수자 수가 2023년에 이어 2년 연속 100만 명을 넘어섰다.

2025년에는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따라 '지자체 합동평가위원회'가 주관하는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에 '통일 공감대 확산 및 통일 역량 강화'가 포함되었다. 이에 따라,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는 통일 공감대 확산을 위한 시책 수립, 통일 공감대 확산 행사 개최, 통일 공감대 확산 단체에 대한 지원·협력 사업을 추진하였다. 2026년에도 '통일 공감대 확산 및 통일 역량 강화'가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로 재선정되어 지역의 통일 공감대 확산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찾아가는 공공부문 통일교육(6~12월)

제4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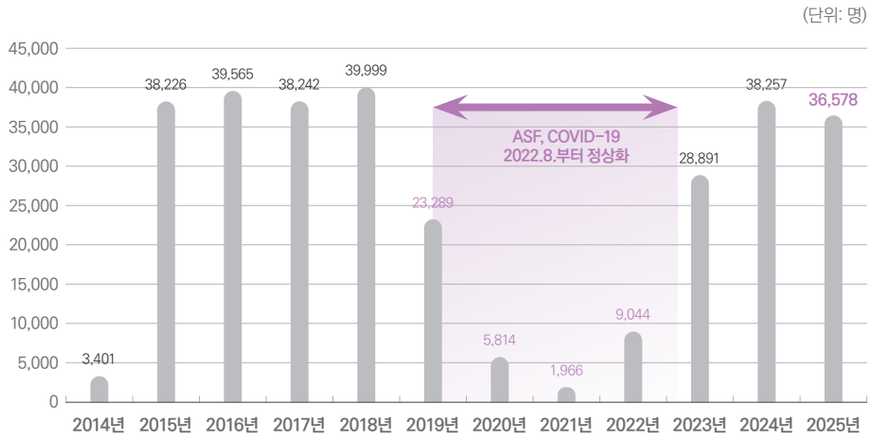
한반도통일미래센터 운영

정부는 국내 유일의 정부 직영 청소년 평화통일체험 수련 시설인 한반도통일미래센터(이하 '미래센터')를 통해 청소년을 중심으로 각계각층의 국민에게 맞춤형 평화통일체험연수를 진행하고 있다. 평화통일체험연수는 미래센터 내에서 실시하는 신청연수, 초청 연수와 미래센터 밖에서 실시하는 온라인 연수, 찾아가는 연수로 구성되어 있다.

신청 연수는 학교·단체 등에서 평화통일체험연수 신청을 받아 진행하는 것을 말하며, 초청 연수는 미래센터에서 시기별·계기별로 학생뿐만 아니라 각계각층의 다양한 국민을 초청하여 실시하는 연수를 의미한다. 온라인 연수는 주로 도서벽지와 원거리 학교, 취약계층 학생 등을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실시하는 연수이며, 찾아가는 연수는 학교를 방문하여 미래센터의 평화통일체험연수 프로그램을 진행하거나 각종 통일 관련 행사 현장에 체험부스를 설치하여 통일 관련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다.

정부는 2025년 청소년을 중심으로 총 223회 평화통일체험연수를 실시하였으며, 이 연수에는 연인원 3만 6,578명이 참여하였다. 이로써 개관 이후 11년 동안 미래센터는 누적 연인원 30만 3,292명에게 평화통일체험연수를 제공하였다.

평화통일체험연수 연인원 현황



1. 초·중·고 학생 대상 청소년 평화통일체험연수 확대 노력

정부는 전국 초·중·고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은 학교(38회, 5,312명) 외 수능 이후 고3 학생(7회, 1,362명), 수도권 교육청(서울특별시교육청 16회, 경기도교육청 10회) 등에 대해 연수를 진행하였다. 또한, 지역 교육청·지방자치단체·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등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보다 많은 초·중·고 학생이 평화통일체험연수(51회, 8,823명)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학교(상일중) 대상
평화통일체험연수(8월)



유관기관(경남교육청) 대상
평화통일체험연수(9월)



수능 이후 고3(고산고) 대상
평화통일체험연수(11월)

아울러, 각종 행사를 계기로 평화통일체험부스를 설치·운영(7회, 1만 1,540명)하고 일본 동경한국학교, 연천 늘봄학교 등을 방문하여 평화통일체험 프로그램을 운영(10회, 646명)하는 '찾아가는 연수'를 실시하였다. 2025년 처음으로 4월 셋째 주를 온라인 연수 기간으로 설정하고 원거리 학교, 취약계층 청소년 등 1,063명을 대상으로 총 13회의 온라인 연수를 실시하였다.



일본 동경한국학교(4월)



연천 늘봄학교(전곡초, 6월)

2. 평화통일체험연수 대상 다양화

정부는 평화·통일 공감대 확산을 위해 대학생·북향민·군장병·지역 주민·외국인 등 다양한 대상에게 평화통일체험연수를 진행하였다.

대학생의 평화통일에 관한 관심 제고를 위해 대구가톨릭대, 한국뉴욕주립대, 경동대 등 대학생(7회, 1,214명)을 초청하여 평화통일체험연수를 실시하였다. 북향민 청소년에게는 통일인식 제고와 성공적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영어교실, 소통·화합 캠프, 체육행사 등 다채로운 사업(8회, 3,634명)을 추진하였다.

미래센터 인근 군부대 장병들도 초청(15회, 1,138명)하였으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북한인권기록보존소, 평화외교공공협력단, 지방자치단체 등 다양한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평화통일체험연수를 진행하였다. 또한, 주한 유학생과 외국인을 대상(6회, 224명)으로 국제적 평화·통일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한 사업도 추진하였다.



연천군 공무원 대상
평화통일체험연수(4월)



주한 유학생 대상
평화통일체험연수(6월)



민주평통 협업 국내외 청소년 대상
평화통일체험연수(7월)



북향민 청소년 대상
평화통일체험연수(8월)



대학생 대상
평화통일체험연수(경동대, 9월)



대북 민간단체 대상
평화통일체험연수(9월)

3. 계기별 특별행사 기획·추진

정부는 시기별, 계기별로 평화통일체험 연수 사업을 기획·추진하였다. 5월에는 '대한민국 청소년 박람회', '어린이 박람회' 등에 참여하여 청소년에게 평화통일미래 비전을 공유하고, 평화·통일 공감대를 확산하는 기회로 활용하였다. 8월에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등을 초청하여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고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가치에 대한 중요성을 공유하는 장을 마련하였다. 9월에는 서울특



대한민국 청소년 박람회(5월)



어린이 박람회(5월)



광복 80주년 개방 행사(8월)

별시교육청이 주최한 서울꿈이룸통일한마당 행사에, 10월에는 연천군평생교육박람회에 참여하여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평화통일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4. 첨단기술 활용 평화통일미래 체험공간 구현

미래센터는 2014년 개관 이후 10여 년이 지난 통일미래체험관 시설 및 콘텐츠에 대한 개보수를 공간 영역별로 3년에 걸쳐 추진할 계획이다. 최신 기술을 활용한 몰입형 콘텐츠로의 개선을 통해 한반도 평화통일미래에 대한 청소년의 긍정적 인식 제고와 평화·통일 공감대 확산을 위해 청소년의 흥미와 관심을 제고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2025년은 1차 연도로서 통일미래체험관 로비, K-타임머신(가상현실 포함), 통일광장 등 도입 공간에 대한 개편을 완료하였다. 2026년에는 분야별 통일미래 체험 영역을, 2027년에는 비전관과 통일 기원 공간에 대해 연차별 콘텐츠와 시설을 개편할 계획이다.

통일미래체험관 연도별 개보수 계획(3개년, 2025~2027년)



한편, 통일미래체험관의 분위기를 미래지향적으로 조성하고 청소년의 관심과 흥미를 제고하기 위해 AI 통일교육 로봇을 도입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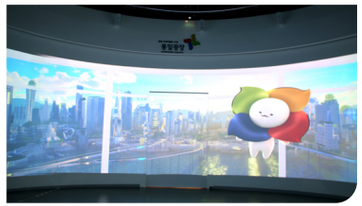


AI로봇 통일미래체험 안내



AI로봇 연수생 인솔

통일미래체험관 도입 공간 개보수 전후 비교

구분	개보수 전	개보수 후
로비공간		
타임머신 외부		
타임머신 내부		
통일광장		

부록

APPENDIX

Ⅰ. 남북관계 주요 일지

Ⅱ. 남북관계 관련 주요 통계

Ⅲ. 남북협력기금 관련 통계

Ⅳ. 통일부 국정과제 현황

2025
한반도
평화공존의
기록들

UNIFICATION
WHITE PAPER

Ⅰ. 남북관계 주요 일지

1월

- 1.6. 北, 동해상으로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평양 일대)
- 1.8. 유엔안보리,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관련 회의 개최(미국 뉴욕, 현지 시각)
- 1.10. 제4차 한미핵협의그룹(NCG: Nuclear Consultative Group) 회의(미국 뉴욕, 현지 시각)
- 1.14. 北,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자강 강계)
- 1.15. 한미일 공중훈련 실시
- 1.17. 北 외무성 대외정책실장, 한미핵협의그룹 및 한미일 공중훈련 관련 담화(노동·중통)
- 1.20. 美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현지 시각)
- 1.21. ~ 24. 한미 연합공중훈련 실시
- 1.22. ~ 23. 北,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2차 회의 진행(노동·중통)
- 1.26. 北 외무성 대외보도실장, 한미 연합공중훈련 관련 담화(노동·중통)

2월

- 2.5. 北 올림픽위원회 대표단, 2025 하얼빈 동계아시안게임(2.7. ~ 14.) 참가차 중국으로 출발 (2.6. 노동·중통)
- 2.11. 北 국방성 대변인, 美 원자력추진잠수함 '알렉산드리아함' 부산 입항(2.10.) 관련 담화(노동·중통)
- 2.13. 통일부, 북한의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 철거 관련 대변인 성명 발표
  - "정부는 남북이 합의하여 설치한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를 북한이 일방적으로 철거하고 있는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이러한 철거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촉구하는 바임."
- 2.19. 다국적제재모니터링팀(MSMT) 제1차 운영위원회 개최(미국 워싱턴 D.C., 현지 시각)

- 2.22. 北 국방성 공보실장, 한미연합연습 및 전략자산 전개 관련 담화(노동·중통)
- 2.24. 北 외무성 대외정책실장, 다국적제재모니터링팀 운영위원회 개최 관련 담화(노동·중통)
- 2.25. 北 조선노동당 – 露 통합러시아당 간 회담 진행 및 협력 확대 의정서 체결(2.27. 노동·중통)

3월

- 3.4. 北 김여정 당 중앙위 부부장, 美 항공모함 칼빈슨함 부산 입항(3.2.) 관련 담화(노동·중통)
- 3.10. ~ 20. 한미연합연습 '자유의 방패(FS: Freedom Shield)' 실시
- 3.10. 北 외무성 보도국, 한미연합연습 실시(3.10. ~ 20.) 관련 공보문(노동·중통)
- 3.10. 北, 서해 방향으로 탄도미사일 발사(황해도 내륙)
- 3.14. 통일부, 김정욱·김국기·최춘길 선교사 즉각 석방 촉구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 (WGAD: Working Group on Arbitrary Detention)」 의견서 채택 관련 성명 발표(대변인 브리핑)
  - "정부는 북한의 불법적인 행위를 다시 한번 강력히 규탄하며, 우리 국민들을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으로 석방할 것을 촉구함. 북한은 이번 유엔 실무그룹 의견서 채택을 통해 확인된 엄중한 경고를 심각하게 인식하여, 국제사회의 요구들을 즉각 수용하고 신속하게 이행해야 할 것임."
- 3.21. 北 국방성 대변인, 한미연합연습 진행 관련 담화(노동·중통)
- 3.21. 北 김정은 국무위원장,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서기 접견(3.22. 노동·중통)
- 3.25. 유엔인권이사회, 북한 제4주기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 결과 최종 채택 (스위스 제네바, 현지 시각)
- 3.28. 대통령 권한대행, 제10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 기념사(국립대전현충원)
  - "서해수호 용사들의 투혼을 이어받은 후배 장병들은 강력한 전투역량과 확고한 대비태세를 바탕으로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즉각적이고 압도적으로 대응할 것임."

4월

- 4.3. 유엔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스위스 제네바)
- 4.4. 대통령 권한대행, 대국민 담화문
  - "저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가 안보와 외교에 공백이 없도록, 굳건한 안보태세를 유지하겠음."

• 4.6. 北, 제31차 평양국제마라톤대회 개최(4.7. 노동·중통)

• 4.9. 北 김여정 당 중앙위 부부장, 한미일 외교장관회의 공동성명(4.3.) 관련 담화(노동·중통)

• 4.10. 정부, 대북 독자제재 대상 지정(개인 2명, 기관 2개, 선박 1척)

• 4.10. 정부, 한-시리아 수교 발표(시리아 다마스커스, 현지 시각)

• 4.21.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北 GPS 교란행위 관련 결정문 채택(캐나다 몬트리올, 현지 시각)

• 4.21. 정부, 군 정찰위성 4호기 발사(미국 플로리다, 현지 시각)

• 4.26. 러시아, 北의 러시아 파병 공식 확인(현지 시각)

• 4.28. 北, 러시아 파병 공식 확인(노동·중통)

• 4.28. 통일부, 북한의 러시아 파병 공식 확인에 대한 입장 발표
- "정부는 러시아의 불법적인 우크라이나 침략전쟁에 대한 북한의 파병이 우리나라는 물론, 유럽을 넘어 전 세계의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이자 유엔안보리 결의를 노골적으로 위반하는 행위임을 지적하고 강력하게 규탄함."

• 4.28. 푸틴 러시아 대통령, 北의 러시아 파병 관련 성명 발표(크렘린궁, 현지 시각)

5월

• 5.1. 대통령 권한대행, 안보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
- "북한은 러시아 파병을 처음으로 공식 인정하면서 러시아와의 밀착 관계를 가속화하고, 우리를 겨냥한 무기체계를 개량하면서 새로운 양상의 도발을 획책하고 있음. 또한 우리 정부와 기업, 그리고 국민들은 사이버 공격의 위협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있음."

• 5.2. 대통령 권한대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모두발언
- "북한이 어떤 도발도 감히 획책할 수 없도록 빈틈없는 대비 태세를 유지해 달라.",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내는 것이 정부의 기본적인 사명임."

• 5.7. 유엔안전보장이사회, '북한 문제' 관련 회의 개최(미국 뉴욕, 현지 시각)

• 5.8. 北,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강원도 원산)

• 5.8. 중러 정상회담(러시아 모스크바, 현지 시각)
- (공동성명) "북한에 대한 제재와 강압적 압력을 포기할 것을 각국에 촉구하며 외교적 수단만을 통한 한반도 문제 해결을 지지한다."

• 5.9. 北 김정은 국무위원장, 러 전승절 80주년 기념 주북 러시아대사관 방문 및 연설(중통, 5.10. 노동)

• 5.20. 유엔총회, 북한인권 고위급회의 개최(미국 뉴욕, 현지 시각)

• 5.21. 北 청진조선소 5,000톤급 구축함 진수식 사고 발생(5.22. 노동·중통)

• 5.28. 대통령 권한대행, 이산가족 초청·위로 행사 축사
- "올해는 광복 80년이 되는 해로, 이는 곧 분단의 역사이자 이산가족의 아픔의 역사임.", "이산가족 고령화에 따라 이산가족 후계세대들이 분단과 이산의 아픔을 이해하고 극복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통일 미래를 꿈꾸고 이산가족들의 염원을 지켜나갈 것임."

• 5.29. 다국적제재모니터링팀(MSMT), 북러 군사협력 관련 보고서 발간 및 공동성명 발표 (미국 워싱턴 D.C., 현지 시각)
- "첫 번째 MSMT 보고서 발간과 함께, 우리는 북한과 관련된 유엔안보리 결의들을 완전히 이행하기 위한 공동의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한다. 우리는 북한이 유의미한 외교적 관여에 나설 것과, 모든 국가들이 북한의 지속적인 위협과 안보리 결의 위반을 용이하게 하는 자들에게 맞서 국제평화와 안보를 유지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6월

• 6.4. 이재명 대통령, 대통령 수락 연설(여의도 국회 인근)
- "평화롭고 공존하는 안정된 한반도를 만들겠음. 확고한 국방력으로 대북 억제력을 확실하게 행사하되,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상책이고,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보다는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를 만드는 것이 진정한 안보라는 확신을 가지고 남북한이 대화하고 소통하고 공존하면서 서로 협력해서 공존·공동번영하는 길을 찾아가겠음."
- "한반도 정세를 최대한 신속하게 안정화해서 '코리아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한반도의 안보 때문에 우리 국민들의 민생이 더 나빠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 6.4. 이재명 대통령, 제21대 대통령 취임사(여의도 국회의사당)
-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를 만들겠음. 안전과 평화는 국민 행복의 대전제임. 안전이 밥이고, 평화가 경제임. … 분단과 전쟁의 상처를 치유하고 평화 번영의 미래를 설계하겠음. 아무리 비싼 평화도 전쟁보다 나음.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낫고, 싸울 필요 없는 평화가 가장 확실한 안보임. 북한 GDP의 2배에 달하는 국방비와 세계 5위 군사력에, 한미군사동맹에 기반한 강력한 억지력으로 북핵과 군사도발에 대비하되, 북한과의 소통 창구를 열고 대화 협력을 통해 한반도 평화를 구축하겠음."

• 6.5. 北, 제21대 대통령 이재명 당선 보도(노동·중통)

• 6.6. 이재명 대통령, 제70회 현충일 추념사(국립서울현충원)
- "전쟁 걱정 없는 평화로운 나라, 일상이 흔들리지 않는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것이야말로 거룩한 희생과 헌신에 대한 가장 책임 있는 응답임."

• 6.9. 통일부, 민간단체에 대북 전단 살포 중단 요청(대변인 브리핑)

- "지난 6.2., 납북자피해가족연합회가 통일부의 자제요청에도 불구하고 4.27., 5.8.에 이어 세 번째로 전단을 살포한 것에 대하여 유감을 표함. 이는 한반도 상황의 긴장을 조성하고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으므로 전단 살포 중지를 강력히 요청함."
- "통일부는 향후 유관기관, 관련 단체 등과 긴밀히 소통하여 재난안전법, 항공안전법 등 실정법상 전단 살포 규제가 준수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며, 국회의 남북관계발전법 등 개정안 논의에도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갈 예정임."

• 6.11. 이재명 대통령, 우리 군의 대북 확성기 방송 중지 지시(대통령실 브리핑)

• 6.12. 이재명 대통령, 「6.15 정상회담」 25주년 기념식 축사(서면)

-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드는 것은 새 정부의 중요한 과제임. 평화가 흔들리면 경제도 안보도 일상도 흔들린다는 것은 역사적 교훈임. 그래서 평화가 곧 경제임. 이제 굳건한 평화를 바탕으로 남북이 공존, 번영하는 한반도를 만들어야 함."
- "이재명 정부는 평화, 공존, 번영하는 한반도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음. 남북이 싸울 필요가 없는 확고한 평화를 만들어 가겠음. 소모적인 적대행위를 중단하고, 대화와 협력을 재개하겠음. 적대와 대결을 화해와 협력으로 전환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완화와 평화 분위기 조성에 힘쓰겠음. 우발적인 충돌을 방지하고 긴장을 고조시키지 않는 위기관리체계를 하루빨리 복원하겠음. 이를 위해 중단된 남북 대화채널부터 빠르게 복구하도록 노력하겠음."

• 6.15. 이재명 대통령, 「6.15 선언」 25주년 관련 말씀(페이스북)

- "25년 전 오늘의 약속을 다시 기억해야 함. 잃어버린 시간과 사라진 평화를 되찾아야 함. '한반도 리스크'를 '한반도 프리미엄'으로 바꾸고, 남북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미래를 함께 열어가야 함."

• 6.17. 北 김정은 국무위원장,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서기 접견(노동·중통)

• 6.17.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서기, 北 공병 병력과 군사 건설 인력 등 총 6천명 파견 결정 사실 공개(리아노보스티 통신, 현지 시각)

• 6.21. ~ 23. 北, 당 중앙위 제8기 제12차 전원회의 확대회의 개최(6.24. 노동·중통)

• 6.24. 이재명 대통령, 제27회 국무회의 모두발언

- "우리 공동체 자체를 지키는 안보 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음. 우리가 보통 안보 하면 싸워서 이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게 더 중요하고, 가장 확실한 안보는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 평화를 만드는 일임."
- "안보라고 하는 게 경제 문제와 직결되어 있음. 평화가 곧 경제고, 평화가 밥이다, 이런 얘기가 구호가 아니라 현실이 됐음. 한반도의 평화체계를 구축하는 일, 안보를 튼튼하게 하는 일, 우리가 신경써야 될 중요한 일이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특별한 희생을 치른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표하는 그런 의미 있는 날이 되기를 바람."

• 6.25. 이재명 대통령, 6.25 전쟁 75주년 계기 말씀(페이스북)

- "가장 확실한 안보는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 즉 평화를 만드는 것임. 군사력에만 의존해 국가를 지키는 시대는 지났음.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더 중요함."
- "평화가 곧 경제이자, 국민의 생존과 직결되는 시대임. 경제가 안정되고, 국민이 안심하며 안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한반도 평화 체계를 굳건히 구축해 나갈 것을 다짐함."

• 6.27. 통일부, 장마철 임진강 수해방지 관련 정부 입장 발표(대변인 브리핑)

- "이재명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가장 중요한 의무라고 인식하고 있음. 북한의 댐 방류 사전 통보는 접경지역에 계신 우리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문제임. 자연재해에 대한 공동 대응은 인도주의적 사안이며, 남과 북은 임진강 수해방지를 위한 협력에 수차례 합의한 바 있음. 이에 장마철 남북 접경지역의 홍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북한이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댐 방류 시 우리 측에 미리 통보해 줄 것을 요청함. 아울러 정부는 관계기관 간 협조하며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만반의 대비를 해 나가겠음."

• 6.30. 「2025 국제 한반도 포럼」 개최(일본 도쿄)

7월

• 7.2. 北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 운영 개시(노동·중통)

• 7.2. 통일부, 남북교류협력 위반신고센터 2년 만에 폐지

• 7.4. 이재명 대통령 취임 30일 기자회견

- (모두발언)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확보하며 국민의 일상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의 첫발을 뗐음. 접경지역 주민들의 밤잠을 설치게 했던 대남-대북 방송의 불안한 고리를 잘라내는 것을 시작으로, 평화가 경제성장을 이끌고, 경제가 다시 평화를 강화하는 선순환의 길을 복원해 나가겠음. … 강력한 국방력을 바탕으로 도발에 철저히 대비하는 동시에, 단절된 남북 간 소통을 재개하고, 대화와 협력을 통해 한반도 평화와 공존의 길을 열어가겠음."
- (질의응답) "북한과 대화를 전면 단절하는 것은 바보짓. 한미공조를 바탕으로 대북관계 개선", "대북방송 중단에 대해 北 호응 기대 이상으로 빨라", "北 인권문제는 복잡 … 인도적 지원이 北 인권 개선에 도움", "지금 통일 언급은 상대가 흡수로 오해 가능 … 이런 이유로 통일부 명칭 변경도 제기되는 듯"

• 7.9. 표류 北주민 6명 송환

• 7.14. 이재명 대통령, 제2회 북한이탈주민의 날 축사(서면)

-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의 자립과 통합을 함께 이뤄내기 위해 기본적인 정착 지원과 보호를 넘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함께 어울리고, 성장하고, 발전해 나가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7.16. 北 금강산 세계문화자연유산 등록(노동·중통)

• 7.18. 정부, 北 평산 우라늄공장 폐수 분석 결과 "이상 없음" 확인

• 7.18. 北 조선관광, "원산갈마지구 외국인 관광객 잠정적 받지 않아"(누리집)

• 7.22. 국정원, 52년 만에 대북 TV-라디오 전면 중단

• 7.24. 美 재무부, 北 정보기술(IT) 인력 해외 파견에 관여한 기업 1곳·개인 3명 제재 (미국 워싱턴 D.C., 현지 시각)

• 7.25. 제44대 정동영 통일부장관 취임

• 7.25. 北, 대남 방해 전파 10개 중단

• 7.28. 北 김여정 당 중앙위 부부장, 우리 정부의 남북관계 긴장 완화 조치 관련 담화(중통)

• 7.29. 北 김여정 당 중앙위 부부장, 美 당국자의 북미대화 발언 관련 담화(중통)

• 7.29. 통일부, 북한 주민 추정 사체 인도 관련 대북 통보(대변인 브리핑)

• 7.30. 통일부, 「북한 주민 접촉신고 처리 지침」 폐지

8월

• 8.4. 군, 대북 확성기 철거

• 8.9. 北, 대남 확성기 일부 철거

• 8.11. 北 노광철 국방상, 한미연합연습 비난 담화(노동·중통)

• 8.12. 北 김정은 국무위원장,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전화통화(8.13. 노동·중통)

• 8.14. 北 김여정 당 중앙위 부부장, 대미·대남 대화 거부 입장 표명 담화(중통)

• 8.15. 이재명 대통령,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사

- "낡은 냉전적 사고와 대결에서 벗어나 평화로운 한반도의 새 시대를 열어가야 할 때", "국민주권정부는 취임 직후부터 전단 살포 중단,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해왔음. 앞으로도 우리 정부는 실질적 긴장 완화와 신뢰 회복을 위한 조치를 일관되게 취해 나갈 것임."
- "우선, 현재 북측의 체제를 존중하고, 어떠한 형태의 흡수통일도 추구하지 않을 것이며 일체의 적대행위를 할 뜻도 없음을 분명히 밝힘. 특히, 남북 간 우발적 충돌 방지와 군사적 신뢰 구축을 위해 '9.19 군사합의'를 선제적으로, 그리고 단계적으로 복원해 나가겠음. 나아가 공리공영·유무상통 원칙에 따라 남북 주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교류협력 기반 회복, 그리고 공동성장 여건 마련에 나서겠음."

• 8.18. ~ 28. 한미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 Ulchi Freedom Shield)' 실시

• 8.18. 北 김정은 국무위원장, '최현호' 현지지도 시 한미연합연습 비난(8.19. 노동·중통)

- "또다시 감행되는 미국과 한국의 합동 군사 연습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가장 적대적이며 대결적이려는 자기들의 의사를 숨김없이 보여주는 뚜렷한 입장 표명", "미한의 심화되는 군사적 결탁과 군사력 시위행위는 가장 명백한 전쟁 도발 의지 표현이며 지역 평화와 안전 환경을 파괴하는 근원"

• 8.23. 한일정상회담(도쿄)

- "양 정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구축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대북정책에 있어 양국 간 협력을 지속해 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함."
- "양 정상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여 한미일 공조를 바탕으로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가 충실히 이행되도록 국제

사회와 협력을 지속해 나가야 함을 확인함. 또한,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이나 러북 간 군사협력의 심화에 대해 함께 대처해 나가야 할 필요성을 강조함. 이와 더불어, 대화와 외교를 통한 북한 핵·미사일 문제의 평화적 해결의 중요성을 강조함."

• 8.23. 北,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담화 및 부총참모장 담화(노동·중통·중방)

• 8.24. 대통령 기내 기자간담회

- "이재명 정부의 기본적인 입장도 당연히 한반도 비핵화", "일거에 실현가능한 목표냐, 비현실적이라는 것은 누구나 인정", "일단 멈추고, 축소하고, 종국에 가서는 비핵화"
- "강력한 국방력과 억제력을 기반으로 대화하고 소통해서 군사적 충돌 위협을 최소화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최대한 확보해서 경제 안정도 누리고 국민 불안도 줄이고 충돌의 위험성을 줄이는 것이 대한민국 국익에 부합"

• 8.25. 한미정상회담(미국 워싱턴 D.C., 현지 시각)

- 이재명 대통령, "남북관계를 풀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 트럼프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의) 평화를 지키는 역할을 넘어 새롭게 평화를 만드는 피스메이커(peacemaker)의 역할이 눈에 띔", "피스메이커를 하시면 페이스메이커(pacemaker)로 열심히 지원하겠음."
- 트럼프 대통령, "(김 위원장과) 올해 만날 수 있기를 바람", "김위원장과 저는 두터운 관계를 가져왔고 지금도 마찬가지임. 취임 후 두 번 김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했음", "김정은과 잘 어울렸고 북한은 막대한 잠재력을 갖고 있음."

• 8.25. 이재명 대통령, 방미(CSIS) 연설(미국 워싱턴 D.C., 현지 시각)

• 8.27. 北, 이재명 대통령 방미(CSIS) 연설 실명 비난(중통)

9월

• 9.3. 北 김정은 국무위원장, 중국 전승절 80주년 기념행사 참석(노동·중통)

• 9.3. 북러정상회담

• 9.4. 북중정상회담

• 9.11.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

-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라고 하는 것이 군사적 측면에서도 심각한 문제이기도 하지만 경제적 측면에서도 엄청난 피해를 입히기 때문에 휴전선의 군사적 긴장을 조금이라도 완화하는 것임. 그게 우리한테 이익임.",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서, 경제를 위해서, 민생을 위해서 필요함. 끊임없이 한반도의 긴장 완화를 위해서,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노력하겠음."
- "북미 관계가 개선되고 북미 대화가 열리는 게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도움이 됨.", "우리가 주도를 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우리의 바운더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고집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함."

• 9.13. 北 김여정 당 중앙위 부부장, 한미·한미일 연습 비난 담화 발표(9.14. 중통)

• 9.18. ~ 19. 「2025 국제 한반도 포럼」 개최(서울)

• 9.19. 이재명 대통령, 「9.19 공동선언」 7주년 계기 말씀(페이스북)

- "평화는 민주주의와 경제 발전의 기본 토대. 평화가 깨지면 민주주의를 유지, 발전시키는 것도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 것도 위협받게 됨. 제가 취임 직후부터 대북 방송 중단, 대북 전단 살포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한 까닭임."
- "8.15 경축사를 통해 3가지 원칙을 제시함. 북측의 체제를 존중하고, 흡수통일을 추구하지 않으며, 일체의 적대행위를 할 뜻이 없다는 제 약속은 여전히 유효. 한 번 깨진 신뢰가 금세 회복되지는 않을 것. 신뢰는 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행동과 실천에서 나오는 법이기 때문. 엉킨 실타래를 풀듯 인내심을 갖고 임하겠음."
- "9.19 군사합의 정신 복원을 위해, 대화와 협력을 통한 한반도에서의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해, 대통령으로서 정부가 해야 할 일을 국민과 함께 차근차근 해 나가겠음."

• 9.20. ~ 21. 北,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3차 회의 진행(9.22. 노동·중통)

- 김정은 위원장, "미국이 비핵화 집념을 털어버리고 진정한 평화공존을 바란다면 우리도 미국과 마주서지 못할 이유가 없음."
- 김정은 위원장, "한국과 마주앉을 일 없음.", "적대적 두 국가, 엄연한 역사·현실", "이재명정부, 본질상 달라진 것 없음.", "두 개 국가, 국법으로 고착시킬 것"

• 9.23. 이재명 대통령, 제80차 유엔총회 기조연설

- "가장 확실한 평화는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임. '교류(Exchange), 관계 정상화(Normalization), 비핵화(Denuclearization)', 즉 'END'를 중심으로 한 포괄적인 대화로 한반도에서의 적대와 대결의 시대를 종식(END)하고, '평화공존과 공동성장'의 새 시대를 열어가야 함."

• 9.29. 北 김선경 외무성 부상, 제80차 유엔총회 일반토의 연설(미국 뉴욕, 현지 시각)

• 9.30. 「2025 국제 한반도 포럼」 개최(독일 베를린)

10월

• 10.4. ~ 5. 北, 무장장비전시회 '국방발전-2025' 개최(10.5. ~ 6. 노동·중통)

• 10.9. 北 김정은 국무위원장, 창당 80년 경축대회 연설(10.10. 중통)

• 10.10. 北, 노동당 창당 80년 계기 열병식 개최(10.11. 노동·중통)

• 10.15. 백마고지 유해 발굴 재개

• 10.22. 北,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황북 중화)

• 10.27. 北 최선희 외무상, 푸틴 러시아 대통령 접견(노동·중통)

• 10.28. 北, 북러 외무장관회담(10.27.) 공보문 발표(노동·중통)

• 10.29. 한미정상회담(경주)

- (국가안보실장 브리핑) "두 정상은 8월 워싱턴에서의 '피스메이커, 페이스메이커' 역할 분담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기로 했음."

-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김 위원장이 원한다면 언제든 다시 한반도 평화 안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였음."
-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의 노력을 평가하면서 2018년 싱가포르 합의를 토대로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해 필요한 역할을 해나갈 것이며 그 과정에서 이 대통령과 긴밀히 상의해 나갈 것이라고 확인하였음."

• 10.31. ~ 11.1.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경주)

11월

• 11.1. 北 박명호 외무성 부상(中 담당), 한중정상회담 '비핵화 의제협의' 반발 담화(중통)

• 11.1. 한중정상회담(경주)

- (국가안보실장 브리핑) "이 대통령께서 우리 정부의 비핵화 및 평화 실현 구상을 소개하고,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위한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을 당부한 데 대해서 시 주석도 한반도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안정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화답함."

• 11.3. ~ 7. 한미연합공중훈련 '프리덤 플래그' 실시

• 11.3. 美 국무부, 北 석탄·철광석 불법 수출 연루 제3국 7개 선박 유엔 제재 추진 (미국 워싱턴 D.C., 현지 시각)

• 11.4. 美 재무부, 北 개인 8명·기관 2곳 신규제재 추진(미국 워싱턴 D.C., 현지 시각)

• 11.4. 北, 김영남 부고(11.3. 12시, 향년 97세) 및 김정은 조의 방문(노동·중통)

• 11.4. 통일부, 김영남 부고 관련 장관 명의 조의문 발표(대변인 브리핑)

- "김영남 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의 부고를 접하고 애도의 뜻을 표합니다. 김영남 전 위원장은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북측 대표단을 이끌고 방남하여 남북대화의 물꼬를 트는 데 기여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05년 6월과 2018년 9월 두 차례에 걸쳐 평양에서 김영남 전 위원장을 만나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었던 기억이 납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과 북측 관계자 여러분께도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 11.4. 北, 평양종합병원 개원(노동·중통)

• 11.4.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개최(서울)

• 11.4. 통일부 조직개편

- △화해·협력의 남북관계 재정립 역량 회복을 위한 남북회담본부 복원 △한반도 평화경제·공동성장 추진기능 강화를 위한 평화교류실·평화협력지구추진단 설치 △국민주권정부의 핵심가치를 구현하는 한반도평화경청단 신설 및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개칭

• 11.5. 北, 고 김영남 장의식 진행(11.6. 노동·중통)

• 11.6. 北 김은철 외무성 부상(美 담당), 美 독자제재 발표 관련 대미 비난 담화(중통)

• 11.7. 北,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평북 대관)

• 11.14. 한미정상회담 공동 설명자료(Joint Fact sheet) 발표
- "양 정상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2018년 싱가포르 북미 정상 공동성명을 이행하기 위해 협력할 것을 약속하였다."

• 11.17. 국방부, 남북군사당국회담 공식 제안
- "우리 군은 남북의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고,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남북 군사당국 회담을 개최하여 군사분계선의 기준선 설정에 대해 논의할 것을 공식 제안함."

• 11.17. ~ 26. 이재명 대통령, G20 정상회의(11.22. ~ 23. 남아공) 참석 및 3개국(UAE, 이집트, 튀르키예) 연계 방문

• 11.18. 北,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설명자료(Joint Fact Sheet, 11.14. 발표) 관련 비난 논평(중통)

• 11.19. 제80차 유엔총회 3위원회, 북한인권결의안 채택(미국 뉴욕, 현지 시각)

12월

• 12.2. 이재명 대통령, 민주평통자문회의 출범회의 의장 연설
- "위대한 대한국민이 함께 만든 국민주권 정부는 서로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대결과 적대에서 벗어나 남과 북이 평화롭게 공존하며 공동성장하는 미래를 향해 나아갈 것"
- "우선, 전쟁 걱정 없는 한반도를 만들어 나갈 것임.", "다음으로, '평화공존'의 새 시대를 향해 나아가겠음.", "아울러, 남과 북의 '공동성장'을 위한 협력도 추진해 가겠음."

• 12.3. 이재명 대통령, 12·3 비상계엄 1년 계기, 특별성명 발표 및 외신 기자회견
- "현재 대한민국과 북한의 상태는 바늘구멍조차도 없음.", "북미간 관계가 개선되는 게 한반도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는 게 제 판단", "한미연합훈련도 (북한과의) 대화 여건 조성에 필요하다면, 또 미국이 전략적 레버리지가 필요하다면 그런 문제들도 충분히 논의하고 고민할 수 있음. 그래야 미국도 북한과의 협상 또는 대화의 문을 여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음."

• 12.5. 美 백악관, 「국가안보전략(NSS: National Security Strategy)」 보고서 공개 (미국 워싱턴 D.C., 현지 시각)

• 12.7. 이재명 정부 6개월 성과 보고 기자간담회

• 12.8. 北 김정은 국무위원장, 마체고라 주북 러시아 대사 사망(12.6.) 관련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조전 발송(12.9. 노동·중통)

• 12.9. ~ 11. 北 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13차 전원회의 확대회의 개최(12.10. ~ 12. 노동·중통)

• 12.10. 北 김정은 국무위원장, 주북 러시아 대사관 조의 방문(12.11. 노동·중통)

• 12.11. 한미 제5차 핵협의그룹(NCG) 회의(미국 워싱턴 D.C., 현지 시각)

• 12.12. 北 김정은 국무위원장, 러시아 파병 공병부대 귀국 환영식 개최(12.13. 노동·중통)

• 12.16.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설명자료(Joint Fact Sheet) 후속협의(서울)

• 12.19. 통일부·외교부 대통령 업무보고

• 12.19. 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안 채택(미국 뉴욕, 현지 시각)

• 12.23. 美 핵추진잠수함 '그린빌함' 부산 입항

• 12.24. 北 국방성 대변인, '미국의 핵위협' 등 비난 담화 발표(12.25. 중통)

• 12.25. 北 김정은 국무위원장, 8,700톤급 전략핵잠수함 건조사업 현지지도 보도(노동·중통)

Ⅱ. 남북관계 관련 주요 통계

1 남북 왕래 인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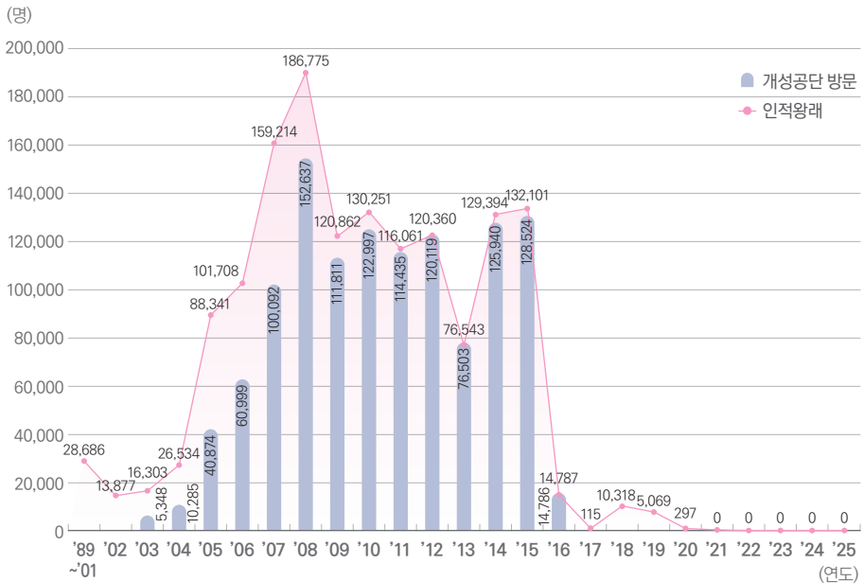
(단위: 명)

구분 \ 연도	'89~'01	'02	'03	'04	'05	'06	'07	'08
남→북(방북)	27,152	12,825	15,280	26,213	87,028	100,838	158,170	186,443
북→남(방남)	1,534	1,052	1,023	321	1,313	870	1,044	332
합계	**28,686**	**13,877**	**16,303**	**26,534**	**88,341**	**101,708**	**159,214**	**186,775**

구분 \ 연도	'09	'10	'11	'12	'13	'14	'15	'16
남→북(방북)	120,616	130,119	116,047	120,360	76,503	129,028	132,097	14,787
북→남(방남)	246	132	14	–	40	366	4	–
합계	**120,862**	**130,251**	**116,061**	**120,360**	**76,543**	**129,394**	**132,101**	**14,787**

구분 \ 연도	'17	'18	'19	'20	'21	'22	'23	'24	'25	합계
남→북(방북)	52	9,509	5,069	297	–	–	–	–	–	1,468,433
북→남(방남)	63	809	–	–	–	–	–	–	–	9,163
합계	**115**	**10,318**	**5,069**	**297**	**–**	**–**	**–**	**–**	**–**	**1,477,596**

※ 금강산 등 관광 인원 제외



2 남북교역액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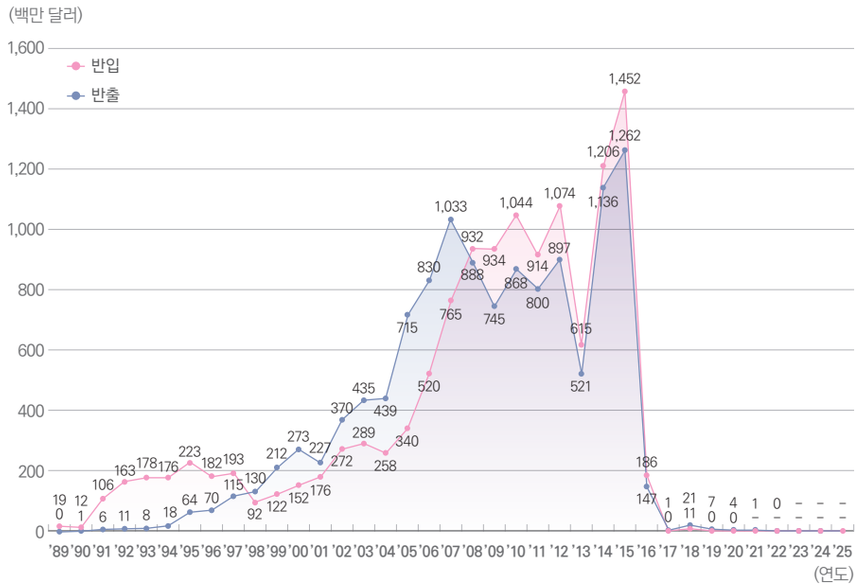
(단위: 백만 달러)

구분 \ 연도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반입	19	12	106	163	178	176	223	182	193	92	122	152	176
반출	0	1	6	11	8	18	64	70	115	130	212	273	227
합계	**19**	**13**	**111**	**173**	**187**	**195**	**287**	**252**	**308**	**222**	**333**	**425**	**403**

구분 \ 연도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반입	272	289	258	340	520	765	932	934	1044	914	1074	615	1206
반출	370	435	439	715	830	1,033	888	745	868	800	897	521	1136
합계	**642**	**724**	**697**	**1,056**	**1,350**	**1,798**	**1,820**	**1,679**	**1,912**	**1,714**	**1,971**	**1,136**	**2,343**

구분 \ 연도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합계
반입	1452	186	0	11	0	0	–	–	–	–	–	12,607
반출	1262	147	1	21	7	4	1	0	–	–	–	12,255
합계	**2,714**	**333**	**1**	**31**	**7**	**4**	**1**	**0**	**–**	**–**	**–**	**24,862**

※ 반올림한 수치로, 연도별 반입/반출을 합산한 수치와 실제 합계가 다를 수 있음.
교역액 1백만 달러 미만은 "0"으로, 없을 경우 "–"으로 표시



3 인도적 협력 현황

(단위: 억 원)

연도	정부 차원						민간 차원 (무상) C	총 지원액 (A+B+C)
	무상 지원				식량 차관 B	지원액 A+B		
	당국차원 (a)	민간단체 기금지원 (b)	국제기구 등을 통한 지원(c)	지원액 A (a+b+c)				
'95	1,854	-	-	1,854	-	1,854	2	**1,856**
'96	-	-	24	24	-	24	12	**37**
'97	-	-	240	240	-	240	182	**422**
'98	-	-	154	154	-	154	275	**429**
'99	339	-	-	339	-	339	223	**562**
'00	944	34	-	977	1,057	2,034	386	**2,421**
'01	684	63	229	976	-	976	782	**1,757**
'02	832	65	243	1,140	1,510	2,650	578	**3,228**
'03	811	81	205	1,097	1,510	2,607	766	**3,373**
'04	949	102	262	1,314	1,359	2,673	1,558	**4,231**
'05	1,221	120	19	1,360	1,787	3,147	780	**3,926**
'06	2,000	133	139	2,273	-	2,273	709	**2,982**
'07	1,428	220	335	1,983	1,505	3,488	909	**4,397**
'08	-	241	197	438	-	438	726	**1,164**
'09	-	77	217	294	-	294	377	**671**
'10	183	21	-	204	-	204	201	**405**
'11	-	-	65	65	-	65	131	**196**
'12	-	-	23	23	-	23	118	**141**
'13	-	-	133	133	-	133	51	**183**
'14	-	-	141	141	-	141	54	**195**
'15	-	23	117	140	-	140	114	**254**
'16	-	1	1	2	-	2	28	**30**
'17	-	-	-	-	-	-	11	**11**
'18	12	-	-	12	-	12	65	**77**
'19	-	-	106	106	-	106	170	**277**
'20	-	7	118	125	-	125	23	**149**
'21	-	5	-	5	-	5	26	**31**
'22	-	9	-	9	-	9	21	**30**
'23	-	2	-	2	-	2	8	**10**
'24	-	-	-	-	-	-	-	**-**
'25	-	-	-	-	-	-	-	**-**
합계	**11,258**	**1,203**	**2,969**	**15,430**	**8,728**	**24,158**	**9,287**	**33,444**

※ 세부 항목 금액의 단수 반올림 처리로 합계에서 차이 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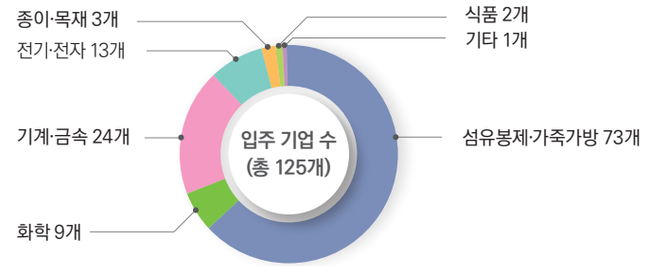
4 개성공단사업 현황

※ 개성공단 통계는 개성공단 전면 가동 중단('16.2.10.)으로 '15년 말 기준으로 작성

① 개성공단 입주기업 수 현황

(단위: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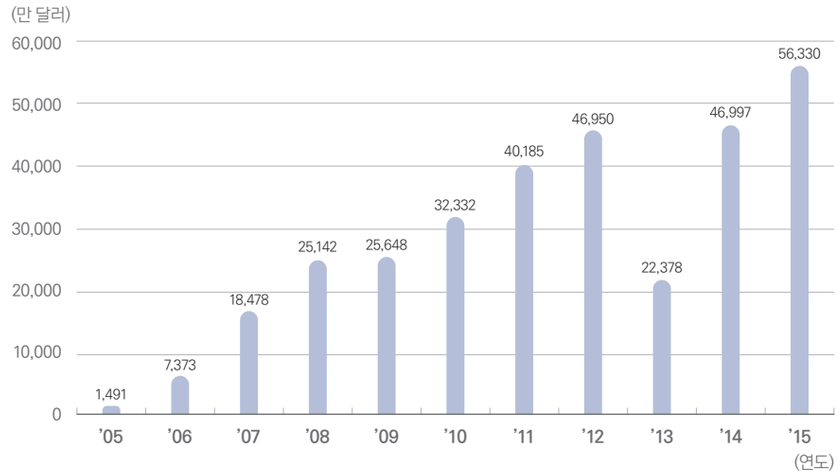
구분 \ 연도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입주 기업수	18	30	65	93	117	121	123	123	123	125	125



② 개성공단 생산액 현황

(단위: 만 달러)

구분 \ 연도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합계
생산액	1,491	7,373	18,478	25,142	25,648	32,332	40,185	46,950	22,378	46,997	56,330	**323,304**



※ '13년 수치 정정

5 이산가족 현황

① 이산가족 찾기 신청자 중 생존자 현황

('25.12월 말 기준)

연령별

(단위: 명, %)

구분	90세 이상	89~80세	79~70세	69~60세	59세 이하	합계
인원	10,885	11,655	6,277	3,554	1,997	**34,368**
비율	31.7	33.9	18.3	10.3	5.8	**100**

출신지역별

(단위: 명, %)

구분	황해	평남	평북	함남	함북	경기	강원	기타	합계
인원	6,612	3,436	1,987	3,040	1,046	1,047	503	16,697	**34,368**
비율	19.2	10.0	5.8	8.9	3.0	3.0	1.5	48.6	**100**

성별

(단위: 명, %)

구분	남자	여자	합계
인원	20,955	13,413	**34,368**
비율	61.0	39.0	**100**

거주지별

(단위: 명, %)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인원	8,614	1,425	824	2,751	330	715	289	10,396	2,073	1,170
비율	25.1	4.2	2.4	8.0	1.0	2.1	0.8	30.2	6.0	3.4

구분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세종	해외	합계
인원	1,097	581	505	1,066	883	370	140	1,139	**34,368**
비율	3.2	1.7	1.4	3.1	2.6	1.1	0.4	3.3	**100**

② 이산가족 상봉 현황

(단위: 건, 명)

구분 / 연도	민간 차원				당국 차원				
	생사확인	서신교환	기타	상봉	생사확인	서신교환	방남상봉	방북상봉	화상상봉
'85	–	–	–	–	65 (157)	–	30 (81)	35 (76)	–
'90	35	44	–	6	–	–	–	–	–
'91	127	193	–	11	–	–	–	–	–
'92	132	462	–	19	–	–	–	–	–
'93	221	948	–	12	–	–	–	–	–
'94	135	584	–	11	–	–	–	–	–
'95	104	571	–	17	–	–	–	–	–
'96	96	473	–	18	–	–	–	–	–
'97	164	772	–	61	–	–	–	–	–
'98	377	469	–	109 (2)	–	–	–	–	–
'99	481	637	–	200 (18)	–	–	–	–	–
'00	447	984	–	152 (392)	792 (5,276)	39 (39)	201 (1,720)	202 (674)	–
'01	208	579	–	170 (493)	744 (4,937)	623 (623)	100 (899)	100 (343)	–
'02	198	935	–	208 (616)	261 (1,635)	9 (9)	–	398 (1,724)	–
'03	388	961	–	283 (677)	963 (7,091)	8 (8)	–	598 (2,691)	–
'04	209	776	–	188 (470)	681 (5,007)	–	–	400 (1,926)	–
'05	276	843	–	95 (261)	962 (6,957)	–	–	397 (1,811)	199 (1,323)
'06	69	449	–	54 (105)	1,069 (8,314)	–	–	594 (2,683)	80 (553)
'07	74	413	–	55 (167)	1,196 (9,121)	–	–	388 (1,741)	278 (1,872)

구분 / 연도	민간 차원				당국 차원				
	생사확인	서신교환	기타	상봉	생사확인	서신교환	방남상봉	방북상봉	화상상봉
'08	50	228	-	36 (97)	-	-	-	-	-
'09	35	61	-	23 (51)	302 (2,399)	-	-	195 (888)	-
'10	16	15	-	7 (18)	302 (2,176)	-	-	191 (886)	-
'11	3	21	-	4 (14)	-	-	-	-	-
'12	6	16	-	3 (6)	-	-	-	-	-
'13	9	22	-	3 (5)	316 (2,342)	-	-	-	-
'14	6	11	-	5 (10)	-	-	-	170 (813)	-
'15	4	26	-	1 (4)	317 (2,155)	-	-	186 (972)	-
'16	6	43	-	3 (8)	-	-	-	-	-
'17	10	46	1	1 (2)	-	-	-	-	-
'18	7	36	1	1 (2)	292 (1,996)	-	-	170 (833)	-
'19	2	16	-	1 (4)	-	-	-	-	-
'20	-	4	-	-	-	-	-	-	-
'21	-	3	-	-	-	-	-	-	-
'22	1	3	-	-	-	-	-	-	-
'23	-	2	-	-	-	-	-	-	-
'24	-	-	-	1 (3)	-	-	-	-	-
'25	1	-	-	-	-	-	-	-	-
합계	**3,896**	**11,646**	**2**	**1,758 (3,425)**	**8,262 (59,563)**	**679 (679)**	**331 (2,700)**	**4,024 (18,061)**	**557 (3,748)**

※ 기타: 성묘 방북

6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현황

① 납북자 현황

전시납북자

('25.12월 말 기준) (단위: 명)

납북자 결정	납북자 비결정	판단불능 결정	합계
4,777	138	460	**5,375**

※ '10.12.13.부터 '17.6.12.까지 활동한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 회복 위원회」의 진상조사 보고에 따르면, 전시 납북자 규모는 10만 명 내외로 추산

※ 납북피해 신고 접수건수 5,505건 중 중복 신청 등 130건을 제외한 5,375건을 심사한 결과, 최종 4,777명을 납북자로 결정

전후납북자

('25.12월 말 기준) (단위: 명)

구분		어선원	KAL기	군·경	기타	합계
피랍		3,729	50	30	26	**3,835**
귀환	송환	3,263	39	-	8	**3,310**
	탈북	9	-	-	-	**9**
미귀환		457	11	30	18	**516**

② 억류자 현황(7명)

('25.12월 말 기준)

성명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	○○○	○○○	○○○
억류 시기	'13.10.	'14.10.	'14.12.	'16.3. (추정)	'16.3. (추정)	'16.5. (추정)	'17.5. (추정)
비고				북향민	북향민	북향민	북향민

③ 귀환국군포로 현황

('25.12월 말 기준) (단위: 명)

구분	'94	'97	'98	'99	'00	'01	'02	'03
인원	1	1	4	2	9	6	6	5

구분	'04	'05	'06	'07	'08	'09	'10	합계
인원	14	11	7	4	6	3	1	**80**

7 남북회담 추진 현황

① 분야별 남북회담 개최 현황

(단위: 회)

구분 \ 연도	'7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정치	156	4	10	–	–	–	2	5	18	2	4	5	2	10
군사	–	–	–	–	–	–	–	–	4	2	9	6	5	3
경제	5	–	–	–	–	–	–	–	3	3	14	17	13	11
인도	111	–	–	3	–	4	1	–	2	1	3	7	2	4
사회·문화	34	–	–	–	–	–	–	–	–	–	2	1	1	6
합계	**306**	**4**	**10**	**3**	**–**	**4**	**3**	**5**	**27**	**8**	**32**	**36**	**23**	**34**

구분 \ 연도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5	합계
정치	5	13	–	–	–	–	–	1	2	3	–	19	–	261
군사	4	11	2	–	1	1	–	–	1	–	–	4	–	53
경제	8	22	3	4	3	–	–	22	3	1	–	4	–	136
인도	3	3	–	2	4	–	–	1	1	1	–	2	–	155
사회·문화	3	6	1	–	–	–	–	–	1	–	–	7	–	62
합계	**23**	**55**	**6**	**6**	**8**	**1**	**–**	**24**	**8**	**5**	**–**	**36**	**–**	**667**

※ 정치(장·차관급 회담 등) / 군사(장성급·군사실무회담 등) / 경제(경제협력추진위 등) / 인도·사회(적십자·체육 회담 등)
※ 4자 회담 12회('97년 7회, '98년 2회, '99년 3회)를 별도로 분류함에 따라 해당 연도 통계에서 제외

② 남북회담 합의서 채택 현황

(단위: 건)

구분 \ 연도	'7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합의서 건수	40	–	2	1	–	2	1	1	18	4	23	31	20	23

구분 \ 연도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5	합계
합의서 건수	10	39	5	1	1	–	8	2	3	–	23	–	**258**

8 북향민 정착지원 현황

① 북향민 입국 현황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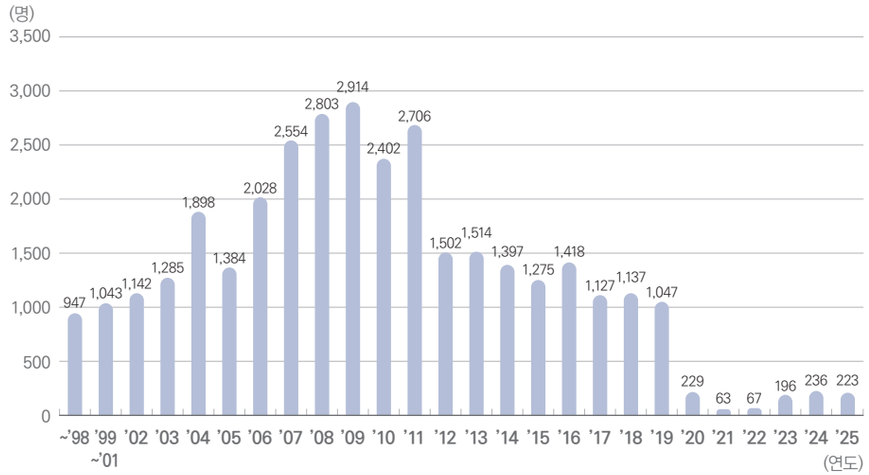
구분 \ 연도	~'98	'99 ~'01	'02	'03	'04	'05	'06	'07	'08
남성	831	565	510	474	626	424	515	573	608
여성	116	478	632	811	1,272	960	1,513	1,981	2,195
합계	**947**	**1,043**	**1,142**	**1,285**	**1,898**	**1,384**	**2,028**	**2,554**	**2,803**
여성 비율	12.2	45.8	55.3	63.1	67.0	69.4	74.6	77.6	78.3

구분 \ 연도	'09	'10	'11	'12	'13	'14	'15	'16	'17
남성	662	591	795	404	369	305	251	302	188
여성	2,252	1,811	1,911	1,098	1,145	1,092	1,024	1,116	939
합계	**2,914**	**2,402**	**2,706**	**1,502**	**1,514**	**1,397**	**1,275**	**1,418**	**1,127**
여성 비율	77.3	75.4	70.6	73.1	75.6	78.2	80.3	78.7	8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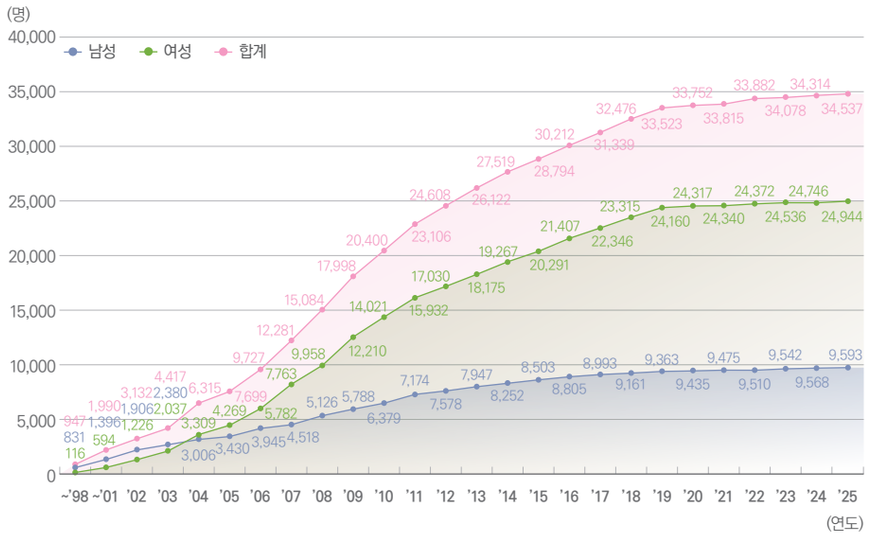
구분 \ 연도	'18	'19	'20	'21	'22	'23	'24	'25	합계
남성	168	202	72	40	35	32	26	25	9,593
여성	969	845	157	23	32	164	210	198	24,944
합계	**1,137**	**1,047**	**229**	**63**	**67**	**196**	**236**	**223**	**34,537**
여성 비율	85.2	80.7	68.6	36.5	47.8	83.7	89.0	88.8	72.2

※ 북향민 입국 인원은 보호센터 입소 기준으로 집계

연도별 입국 추세



입국 인원 누계



입국 당시 연령

('25.12월 말 기준) (단위: 명, %)

구분	0~9세	10~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합계
남	653	1,712	2,648	2,179	1,413	613	360	9,578
여	646	2,117	7,049	7,728	4,755	1,544	1,013	24,852
합계	**1,299**	**3,829**	**9,697**	**9,907**	**6,168**	**2,157**	**1,373**	**34,430**
비율	3.8	11.1	28.2	28.8	17.9	6.3	4.0	100

※ 입국 당시 연령 기준이며, 최근 입국하여 보호시설 등에 있는 일부 인원은 제외된 수치로 입국 인원과 차이가 있음.

직업별 입국자 현황

('25.12월 말 기준) (단위: 명, %)

구분	관리직	군인	노동자	무직 부양	봉사 분야	예술 체육	전문직	아동·학생 등	합계
남	420	723	4,217	3,221	95	83	247	572	9,578
여	144	173	9,492	12,076	1,495	226	541	705	24,852
합계	**564**	**896**	**13,709**	**15,297**	**1,590**	**309**	**788**	**1,277**	**34,430**
비율	1.6	2.6	39.8	44.4	4.6	0.9	2.3	3.7	100

※ 최근 입국하여 보호시설 등에 있는 일부 인원은 제외된 수치로 입국 인원과 차이가 있음.

학력별 입국자 현황

('25.12월 말 기준) (단위: 명, %)

구분	취학 전 아동	유치원	소학교 (인민 학교)	중학교 (초급, 고급)	전문대	대학 이상	무학 (북)	기타 (불상 등)	합계
남	419	135	808	5,778	870	1,158	362	48	9,578
여	406	223	1,540	18,057	2,765	1,239	521	101	24,852
합계	**825**	**358**	**2,348**	**23,835**	**3,635**	**2,397**	**883**	**149**	**34,430**
비율	2.4	1.0	6.8	69.2	10.6	7.0	2.6	0.4	100

※ 최근 입국하여 보호시설 등에 있는 일부 인원은 제외된 수치로 입국 인원과 차이가 있음. 해당 학력별 중퇴자 포함

출신 지역별 입국자 현황

('25.12월 말 기준) (단위: 명, %)

구분	강원	남포	양강	자강	평남	평북	평양
남	228	78	1,563	80	466	380	521
여	387	95	4,638	171	666	516	368
합계	**615**	**173**	**6,201**	**251**	**1,132**	**896**	**889**
비율	1.8	0.5	18.0	0.7	3.3	2.6	2.6

구분	함남	함북	황남	황북	개성	기타 (불상 등)	합계
남	783	4,870	276	190	48	95	9,578
여	2,153	15,189	214	290	34	131	24,852
합계	**2,936**	**20,059**	**490**	**480**	**82**	**226**	**34,430**
비율	8.5	58.3	1.4	1.4	0.2	0.7	100

※ 최근 입국하여 보호시설에 있는 일부 인원은 제외된 수치로 입국 인원과 차이가 있음.

② 북향민 사회적응교육 현황

직업교육 실적

(단위: 명)

구분	수료 인원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여성	1,002	843	1,018	785	904	807	726	788	260	38	15	76	187	160
남성	361	254	262	168	198	150	116	165	97	31	21	37	16	20
합계	**1,363**	**1,097**	**1,280**	**953**	**1,102**	**957**	**842**	**953**	**357**	**69**	**36**	**113**	**203**	**180**

북향민 아동·청소년 교육생 교육 현황

(단위: 명)

구분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유치반	19	53	54	63	70	69	42	38	28	28	25
초등반	97	104	107	142	118	179	124	97	87	49	46
청소년반	169	232	276	220	192	198	114	106	90	68	86

구분	'17	'18	'19	'20	'21	'22	'23	'24	'25	합계
유치반	36	20	23	7	-	1	5	-	8	**589**
초등반	43	49	57	19	1	-	-	5	7	**1,331**
청소년반	116	108	105	52	3	5	8	15	18	**2,181**

심화 및 직무교육 현황

(단위: 명)

연도 \ 구분	심화교육			직무교육	
	과정 횟수	수료	자격증 취득	과정수	수료
'14	5	103	85	11	440
'15	6	117	72	10	521
'16	8	247	206	8	315
'17	7	291	251	7	290
'18	7	335	292	8	305
'19	7	385	314	8	247
'20	3	18	18	4	28
'21	6	42	40	4	128
'22	8	49	40	10	189
'23	23	195	177	5	130
'24	33	273	157	11	108
'25	28	223	180	3	88

※ 화천 분소 심화교육 운영 종료('20.5.8., 남북하나재단으로 업무 이관)

③ 주택 알선 현황

(단위: 세대)

구분	'12	'13	'14	'15	'16	'17	'18	'19
세대수	1,320	1,027	1,232	969	1,096	1,044	868	1,062

구분	'20	'21	'22	'23	'24	'25	합계
세대수	438	97	59	134	226	206	**9,778**

④ 정착금 지급 현황

2025년 정착금 지급 세부 기준

(단위: 만 원)

구분		기준		금액
기본금	초기 지급금, 분할 지급금 * 분할 지급금은 분기별로 3회 지급	1인(초기 1,000, 분할 500)		1,500
		2인(초기 1,600, 분할 800)		2,400
		3인(초기 2,100, 분할 1,050)		3,150
		4인(초기 2,600, 분할 1,300)		3,900
		5인(초기 3,100, 분할 1,550)		4,650
		6인(초기 3,600, 분할 1,800)		5,400
		7인 이상(초기 4,100, 분할 2,050)		6,150
주거 지원금		1인		1,600
		2~4인		2,000
		5인 이상		2,300
지방거주 장려금	㉮지역 : 서울, 인천, 경기 ㉯지역 : 인천 외 광역시 ㉰지역 : ㉮㉯ 외 지역	1인	㉯ 지역	160
			㉰ 지역	320
		2~4인	㉯ 지역	200
			㉰ 지역	400
		5인 이상	㉯ 지역	230
			㉰ 지역	460
정착 장려금	취업장려금	6개월	(수도권) 200	(지방) 250
		1년 차	(수도권) 500	(지방) 600
		2년 차	(수도권) 600	(지방) 700
		3년 차	(수도권) 700	(지방) 800
		총액(최고액) 수도권 1,800, 지방 2,100		
	새출발장려금	6개월	200	
		총액(최고액) 600(200씩, 3회)		
가산금	고령 가산금	만 60세 이상		800
	장애 가산금	장애정도	중증	1,540
			경증	360
	장기치료 가산금	중증질환(보건복지부 고시)으로 3개월 이상 연속 입원		개월 수 × 80 (최대 9개월)
	한부모 가정 아동보호 가산금	보호결정 당시 만 13세 미만 아동이 있는 한부모 가정		〈264기 이전〉 360(세대별) 〈264기부터〉 400(세대별)

구분		기준	금액
가산금	제3국 출생 자녀 양육 가산금	제3국 출생한 만 16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적 자녀를 양육	〈226기~263기〉 자녀 1인당 × 400 〈264기부터〉 자녀 1인당 × 450 (2명 이내)
	무연고청소년 가산금	만 18세부터 만 24세 무연고청소년	월 20

※ 가산금은 사회진출 1년 이후 남은 거주지 보호 기간 동안 분기별 분할(최대 16회) 지급(단, 장기치료 가산금은 예외)
※ 고령 가산금, 한부모 가정 아동보호 가산금만 하나원에서 지급(그외 가산금은 남북하나재단 관할)

기본금

(단위: 명, 백만 원)

구분	'12	'13	'14	'15	'16	'17	'18
인원	1,524	1,307	1,601	1,171	1,311	1,221	1,015
기본금	12,167	9,173	9,429	7,609	8,277	8,612	6,574

구분	'19	'20	'21	'22	'23	'24	'25
인원	1,125	446	74	219	302	692	870
기본금	8,267	4,723	921	316	895	2,058	2,863

주거지원금

(단위: 명, 백만 원)

구분	'12	'13	'14	'15	'16	'17	'18
인원	1,524	1,307	1,601	1,171	1,311	1,221	1,015
주거지원금	25,516	21,454	23,288	19,530	19,983	18,201	16,880

구분	'19	'20	'21	'22	'23	'24	'25
인원	1,125	446	74	673	777	642	516
주거지원금	18,824	9,934	4,809	2,846	3,866	4,681	3,969

지방거주 장려금

(단위: 명, 백만 원)

구분	'12	'13	'14	'15	'16	'17	'18
인원	744	752	555	420	443	353	414
지급액	2,323	1,806	1,172	857	952	721	828

구분	'19	'20	'21	'22	'23	'24	'25
인원	352	201	212	122	16	10	12
지급액	678	511	541	325	50	25	30

장려금

(단위: 명, 백만 원)

연도	직업훈련 장려금		자격취득 장려금		우선선정 직종		취업 장려금		새출발 장려금		총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12	1,118	1,916	1,472	2,944	496	992	3,455	17,204	-	-	**6,541**	**23,056**
'13	774	1,221	952	1,904	266	532	3,304	16,608	-	-	**5,296**	**20,265**
'14	706	1,082	879	1,757	181	362	3,631	18,238	-	-	**5,397**	**21,439**
'15	516	753	733	1,466	135	270	2,844	14,272	-	-	**4,228**	**16,761**
'16	252	360	455	910	64	128	2,483	12,078	-	-	**3,254**	**13,476**
'17	98	137	202	404	12	24	2,092	10,024	-	-	**2,404**	**10,589**
'18	61	82	131	262	14	28	1,720	8,021	-	-	**1,926**	**8,393**
'19	33	46	46	92	11	22	1,620	7,542	-	-	**1,710**	**7,702**
'20	3	4	5	10	-	-	1,482	7,048	-	-	**1,490**	**7,062**
'21	2	3	2	4	1	2	1,424	7,497	-	-	**1,429**	**7,506**
'22	0	0	0	0	0	0	1,120	6,051	-	-	**1,120**	**6,051**
'23	0	0	0	0	0	0	891	4,733	-	-	**891**	**4,733**
'24	0	0	0	0	0	0	545	2,964	154	308	**699**	**3,272**
'25	0	0	0	0	0	0	298	1,582	825	1,650	**1,123**	**3,232**

※ '14.11.29. 이후 입국자부터 미래행복통장 제도 적용으로 직업훈련·자격취득·우선선정직종 장려금 지원제도 폐지

가산금

(단위: 백만 원)

구분		'13	'14	'15	'16	'17	'18	'19
가산금	장애	243	212	140	110	80	46	135
	고령	795	658	602	457	327	279	205
	한부모 가정 아동보호	717	631	570	475	385	318	218
	장기치료	40	43	29	10	10	5	19
	제3국 출생 자녀 양육	-	-	-	-	-	79	223
	무연고청소년	-	-	-	-	-	-	-
합계		**1,795**	**1,544**	**1,341**	**1,052**	**802**	**727**	**800**

구분		'20	'21	'22	'23	'24	'25
가산금	장애	130	88	91	86	45	13
	고령	206	194	161	131	90	54
	한부모 가정 아동보호	147	85	36	27	14	2
	장기치료	10	20	7	9	0	0
	제3국 출생 자녀 양육	394	496	450	322	147	47
	무연고청소년	-	-	-	-	154	155
합계		**887**	**883**	**745**	**575**	**450**	**271**

교육지원금

(단위: 개, 명, 백만 원)

구분	'13	'14	'15	'16	'17	'18	'19
대학수	200	253	218	239	232	231	235
인원	1,704	1,894	2,006	1,934	1,844	1,885	1,889
지급액	3,747	4,212	4,555	4,216	4,120	4,154	4,329

구분	'20	'21	'22	'23	'24	'25
대학수	227	230	213	203	202	217
인원	1,938	1,944	1,857	1,680	1,540	1,589
지급액	4,410	4,855	5,050	4,663	4,288	4,364

※ '24년 수치 정정

9 통일교육 및 연수 현황

①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교육 실시 현황

(단위: 명)

구분	'08년 이전	'09	'10	'11	'12	'13	'14
인원	550,870	71,944	68,946	119,736	133,284	185,194	97,830

구분	'15	'16	'17	'18	'19	'20
인원	145,363	161,677	169,096	557,096	718,233	838,778

구분	'21	'22	'23	'24	'25	합계
인원	1,009,203	861,887	855,336	860,795	892,747	**8,298,015**

② 공공부문 통일교육 실시 현황

(단위: 명)

구분	'19	'20	'21	'22	'23	'24	'25	합계
인원	665,483	887,608	972,852	997,537	1,082,349	1,078,847	1,079,003	**6,763,679**

※ 통일교육지원법에 따라 '19년부터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교육청 등 공공부문에서 연 1회 1시간 이상 통일교육 의무화

③ 한반도통일미래센터 연수 현황

(단위: 명)

구분	'14	'15	'16	'17	'18	'19	'20
인원	3,401	38,226	39,565	38,242	39,999	23,289	5,814

구분	'21	'22	'23	'24	'25	합계
인원	1,986	9,044	28,891	38,257	36,578	**303,292**

Ⅲ. 남북협력기금 관련 통계

1 기금 조성 실적

(단위: 백만 원)

연도	정부 출연금	기타출연금	공공자금관리 기금예수금	운용수익 등	총 조성액
'91	25,000	-	-	237	**25,237**
'92	40,000	-	-	5,118	**45,118**
'93	40,000	3	-	4,778	**44,781**
'94	40,000	1	-	9,387	**49,388**
'95	240,000	119	-	14,589	**254,708**
'96	100,000	132	-	18,409	**118,541**
'97	50,000	288	-	27,874	**78,162**
'98	-	-	-	40,280	**40,280**
'99	-	3	149,831	23,013	**172,847**
'00	100,000	542	254,852	30,393	**385,787**
'01	500,000	1,079	310,000	29,406	**840,485**
'02	490,000	77	505,000	42,036	**1,037,113**
'03	300,000	1	823,000	46,515	**1,169,516**
'04	171,400	1	310,000	38,371	**519,772**
'05	500,000	33	460,000	31,178	**991,211**
'06	650,000	15	940,000	36,619	**1,626,634**
'07	500,000	75	584,591	38,859	**1,123,525**
'08	650,000	52	147,500	49,274	**846,826**
'09	-	56	81,000	74,354	**155,410**
'10	-	-	875,000	51,238	**926,238**
'11	-	2	104,400	38,276	**142,678**
'12	112,800	2	400,000	51,236	**564,038**
'13	105,500	3	530,000	162,300	**797,803**
'14	93,400	-	228,600	47,304	**369,304**
'15	93,203	238	90,500	19,863	**203,804**
'16	92,500	1	207,000	27,399	**326,900**
'17	183,000	1	765,000	9,631	**957,632**
'18	63,711	11	278,400	12,153	**354,275**
'19	100,000	-	203,000	6,574	**309,574**
'20	150,000	11	548,600	22,524	**721,135**
'21	100,000	100	237,000	4,589	**341,689**
'22	100,000	12	105,500	3,313	**208,825**
'23	57,200	-	430,000	7,899	**495,099**
'24	100,000	900	520,000	6,099	**626,999**
'25	78,800	-	455,400	12,989	**547,189**
합계	**5,826,514**	**3,758**	**10,544,174**	**1,044,077**	**17,418,523**

※ 연도별 합계액과 현황표상 개별 합계액은 반올림으로 차이가 날 수 있음.

2 기금 사용 실적

(단위: 억 원)

구분	'91	'92	'93	'94	'95	'96	'97	'98	'99
주민왕래지원	–	–	–	–	–	–	–	–	–
문화·학술·체육협력	9	–	–	–	–	–	–	0.3	–
이산가족	–	6	–	–	–	–	–	0.1	4
인도적 지원(무상)	–	–	–	–	1,824	55	191	199	339
인도적 지원(유상)	–	–	–	–	–	–	–	–	–
남북경제협력(무상)	13	–	–	–	–	49	–	–	–
남북경제협력(유상)	–	–	–	–	–	–	–	675	–
경수로 대출	–	–	–	–	–	–	–	–	–
공자기금예수 원리금상환	–	–	–	–	–	–	–	–	–
원금상환	–	–	–	–	–	–	–	–	–
이자상환	–	–	–	–	–	–	–	–	–
기금관리비	3	3	3	3	2	2	2	2	2
합계	**25**	**9**	**3**	**3**	**1,826**	**106**	**193**	**876**	**345**

구분	'00	'01	'02	'03	'04	'05	'06	'07	'08
주민왕래지원	3	3	237	11	11	38	53	17	27
문화·학술·체육협력	21	1	–	7	32	75	74	69	38
이산가족	28	13	20	30	32	133	99	269	182
인도적 지원(무상)	977	976	1,226	1,501	1,225	1,866	2,125	2,272	597
인도적 지원(유상)	867	190	967	1,561	1,020	1,793	39	1,405	–
남북경제협력(무상)	146	898	368	763	760	2,045	1,521	1,725	1,101
남북경제협력(유상)	5	461	667	547	814	568	710	1,400	366
경수로 대출	3,259	3,003	3,009	3,287	870	227	89	–	–
공자기금예수 원리금상환	190	391	2,124	3,250	3,895	3,658	8,713	6,337	1,512
원금상환	–	–	1,498	2,549	3,100	2,820	7,730	5,330	500
이자상환	190	391	626	701	795	838	983	1,007	1,012
기금관리비	3	5	6	8	12	16	18	19	21
합계	**5,499**	**5,941**	**8,624**	**10,965**	**8,671**	**10,419**	**13,441**	**13,513**	**3,844**

구분	'09	'10	'11	'12	'13	'14	'15	'16	'17
주민왕래지원	–	–	–	–	–	5	–	–	1
문화·학술·체육협력	30	21	26	23	21	28	61	23	36
이산가족	22	20	1	4	21	31	52	16	7
인도적 지원(무상)	294	192	102	24	132	148	122	7	13
인도적 지원(유상)	–	–	–	–	–	–	–	–	–
남북경제협력(무상)	415	177	167	421	2,037	441	283	4,489	600
남북경제협력(유상)	240	453	130	221	746	223	36	760	27
경수로 대출	–	–	–	–	–	–	–	–	–
공자기금예수 원리금상환	1,159	9,306	1,086	5,161	6,388	3,882	1,836	2,982	8,470
원금상환	100	8,200	–	4,000	5,300	2,916	905	2,070	7,650
이자상환	1,059	1,106	1,086	1,161	1,088	966	931	912	820
기금관리비	39	29	27	28	30	30	30	26	25
합계	**2,199**	**10,198**	**1,539**	**5,882**	**9,375**	**4,788**	**2,420**	**8,303**	**9,179**

구분	'18	'19	'20	'21	'22	'23	'24	'25	합계
주민왕래지원	25	–	–	–	–	–	–	–	**431**
문화·학술·체육협력	75	37	42	34	34	35	35	34	**921**
이산가족	51	44	12	23	10	10	17	9	**1,166**
인도적 지원(무상)	27	314	139	17	34	8	8	8	**16,962**
인도적 지원(유상)	–	–	–	–	–	–	–	–	**7,842**
남북경제협력(무상)	1,914	329	223	215	435	151	271	114	**22,071**
남북경제협력(유상)	26	26	26	23	267	20	–	–	**9,437**
경수로 대출	–	–	–	–	–	–	–	–	**13,744**
공자기금예수 원리금상환	3,420	2,610	6,056	2,831	1,486	4,749	5,712	5,166	**102,370**
원금상환	2,784	2,030	5,486	2,370	1,055	4,300	5,200	4,554	**82,447**
이자상환	636	580	570	461	431	449	512	612	**19,923**
기금관리비	28	23	23	23	23	23	22	26	**585**
합계	**5,565**	**3,384**	**6,522**	**3,166**	**2,289**	**4,996**	**6,064**	**5,357**	**175,529**

※ 연도별 합계액과 현황표상 개별 합계액은 반올림으로 차이가 날 수 있음.

Ⅳ. 통일부 국정과제 현황

국정과제	실천과제	주요 내용
114. 화해·협력의 남북관계 재정립 및 평화공존 제도화	1. 통일부 조직·기능 정상화를 통한 평화·협력 추진 역량 강화	• 남북대화·교류협력 전담부서 복원 및 역량 강화 추진 • 한반도 평화구축 기능 중심으로 조직 재설계 • 지속 가능한 대북정책 추진을 위한 국민적 합의기반 확대
	2. 남북 연락채널 복원 및 대화 재개	• 남북대화 재개 여건 조성 및 역량 강화 • 남북대화 관련 국민 인식·체험 기회 확대 및 남북회담 지지 기반 확보
	3.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 및 신뢰 구축	• 남북 상호 간 적대적·대결적 행위 청산 • 접경지역 평화 및 주민 안전 지원 강화 • 「9.19 군사합의」 복원 및 이행 조치 추진
	4. 지속 가능한 남북 평화공존 기반 구축	• 평화공존의 새로운 대북정책 수립 • 「평화통일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 등 평화공존 정책 추진 기반 제도화 • 「남북기본협정」 체결 추진
115. 국민이 공감하는 호혜적 남북교류협력 추진	1. 남북교류협력 추진기반 재건 및 실질적 지원체계 구축	• 남북교류협력 법·제도 정비·개선 • 민관 남북교류 거버넌스 구축 및 제도화 • 민관 거버넌스의 허브로서 「(사)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역할 강화 • 「남북교류협력시스템」 이용자 편의성 제고
	2. 종교·문화·체육 등 다양한 민간교류 지원	• 종교, 체육, 문화예술 등 교류 지원 및 「융합적 남북교류」로 확대 • 역사문화 분야 기존 중단사업 재개 및 발전적 확대 추진 및 유네스코 협력 확대 •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교류협력 지원 및 소통 강화
	3. 기후 공동대응과 인도적 상황 개선을 위한 협력 추진	• 인도적 지원 법, 제도 기반 정비 • 민간 차원의 인도적 활동 적극 지원 • 국제기구와 협력하여 인도적 상황 모니터링 및 적시 대응 • 대북 인도주의 이니셔티브 추진을 위한 분야별 구상 마련

국정과제	실천과제	주요 내용
116. 분단고통 해소와 인도적 문제 해결	1. 이산가족·납북자·국군포로 등 인도적 문제 해결 노력	• 남북 간 대화를 통한 이산가족 및 납북자 가족 등 인도적 문제 해결 노력 • 이산가족 교류 기반 구축 지속 추진 • 이산가족,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가족 등 분단으로 인한 국민의 아픔 위로 및 대내외 공감대 확산 노력
	2. 북한주민 인권의 실질적 증진을 위한 협력 강화	• 북한주민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정책 재정립 • 남북인권협력 관련 사회적 공감대 형성 및 북한주민 인권 증진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 • '북한인권 실태조사' 및 '조사기록 메커니즘'의 새로운 방안 모색
	3. 지역협력형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체계 및 사회통합 강화	• 하나원 기초 사회적응 교육 및 심리 프로그램 강화 • 거주지 맞춤형, 생활 밀착형 지원을 통한 북향민의 실질적 자립·자활 기반 확충 • 촘촘한 안전망 구축을 통한 취약계층 사각지대 보호 강화
117. 국민과 함께하는 한반도 평화·통일 정책 추진	1. 대북·통일정책에 대한 사회적 대화 활성화	• 사회적 대화 활성화를 위한 법령 제정 등 안정적 추진 체계 구축 • 사회적 대화 기구 구성·운영, 국민의 정책 참여 확대·제도화 • 사회적 대화 방식의 대국민 소통 강화
	2. 국내 평화분위기 확산 및 평화통일 공공외교 확대	• 국민참여형 평화·통일문화행사 기획·운영 및 통일인식 확산 사업 추진 • 지역별 「통일⁺센터」 설치·운영 내실화 • 평화통일 공공외교 강화로 한반도 평화공존에 대한 공감대 확산 • 통일·북한 연구 생태계 강화 지원
	3. 평화·통일·민주시민 교육 추진	• 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 관련 개념 정립 및 추진 체계 구축 • 학교 및 지역사회 통일교육 체계를 통한 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 확산
	4. 북한자료 대국민 공개 확대	• 국민 알권리 보장 및 북한자료 공개 확대를 위한 법제 신설 • 국민 눈높이에 맞는 북한자료 공개 확대 및 분류체계 개편 • (가칭)동북아평화자료원 건축 준공 및 개관
118. 한반도 평화경제 및 공동성장의 미래 준비	1. 한반도 평화경제 미래비전 수립 및 이행	• '평화경제' 철학에 기초한 「한반도 평화경제 미래비전」 마련 • 한반도 평화경제 구상 실현을 위한 여건 조성 노력 지속 • 한반도 평화경제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 추진
	2. 평화경제특구 조성	• 「평화경제특구 기본계획」 확정 및 특구 지정 • 평화경제특구 협력 네트워크 구축·운영 • 실효성 있는 특구 지원제도 마련 및 시행
	3. DMZ 국제 생태·평화관광 협력지구 개발	• 「DMZ 국제 생태·평화관광 협력지구」 개발 여건 조성 • DMZ 평화적 이용을 위한 국내외 관심 제고
	4. 경제협력 사업 재개 및 다자협력 추진	• 남북 철도 및 관광협력 재개 추진 • 개성공단 사업의 발전적 정상화 추진 • 국제사회와의 다자협력을 통한 남북협력 추진 • 남북경제협력 발전모델 개발·추진

찾아보기(INDEX)

*영어와 숫자는 한글 발음으로 정리

ㄱ

강원권 통일+센터 41~42
개성공단 89, 106~107
개성 만월대 82, 93, 110~115
겨레말큰사전 81~82, 93, 112
경기권 통일+센터 15, 39~43
공동성장 25, 70, 94~97
광복 80주년 34~36, 56, 214, 232~233
9.19 군사합의 21, 26~29, 144
9.19 평양공동선언 21, 24, 29, 141
국군포로 120, 125~127, 135
국립6.25전쟁납북자기념관 128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144, 207~218
국립평화통일자료원 68, 76~77
국제 한반도 포럼(GKF) 15, 22, 53~58
글로벌 통일인식조사 61

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141, 149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남북교류협력법) 91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81~83, 102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 81, 93
남북 이산가족 교류촉진 기본계획 119~120
남북 이산가족 생사 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119, 122
남북이산가족찾기 118, 121~122
남북출입사무소 35, 102, 146
남북통합문화센터 153, 193~198
남북하나재단 178, 186, 192~193
남북협력기금 68, 80~84
남북협력기금관리심의위원회 81
남북회담 140~149
남북회담본부 70~71, 140, 144
남북회담문서 공개에 관한 규정 143
납북자 26, 120, 125~129, 135
노동신문 28, 75
누리소통망(SNS) 44~47, 62, 217
누리집 44~47, 75, 121~122, 144, 215

ㄷ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16
동양평화론 24
DMZ 통합시스템 구축 사업 81~83
DMZ 평화의 길 98
DMZ 평화적 이용 범정부 협의체 97
디지털 아카이브 75~76

ㅁ

마음건강센터 164~165
미래행복통장 153, 181~182
민족공동체통일방안 24, 57~58

ㅂ

북한이탈주민의 날 41~42, 191~19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북한이탈주민법) 152, 157, 173, 183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 154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 156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154
북한인권결의안 127
북한인권 국제회의 130
북한인권기록센터(기록센터) 135
북한인권법 135
북한인권정책협의회 130
북한자료센터 68, 74~76, 144
북한정보포털 73~74
북향민 26, 36~43, 152~198
북향민 통합지원시스템 187~188
비무장지대(DMZ) 14, 27~30, 97

ㅅ

사회적응교육 154~158, 166
사회통일교육과정 211~212

ㅇ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22, 29, 31
억류자 120, 125~127
영농정착 성공 패키지 181
유엔안전보장이사회(유엔안보리) 244
유엔인권이사회 127, 243
유해 발굴 14, 29, 250
6.15 남북공동선언 20, 24, 141
6.25 전쟁 납북자 기억의 날 126~127
6.25 전쟁 납북 진상규명 위원회 125
6.25 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6.25납북자법) 125~126
이산가족 46, 63, 110, 118~124
이산가족 영상편지 81~83, 121
이산가족 유전자 검사 81~82, 120
이산가족 유전정보 데이터베이스 121
이산가족의 날 119~123
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남북이산가족찾기) 118
인천 통일+센터 39~40

ㅈ

적대적 두 국가관계 14, 16, 19, 22
전시납북자 125, 128~129
전후납북자 125~128
전후납북자피해가족연합회 127
접촉신고 88~91
정전체제 24~26, 31
정착금 127, 154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정책협의회 92
지역적응센터(하나센터) 153~154, 189~190
지역통일교육센터 217, 225~227

ㅊ

찾아가는 北스토리 36~37
찾아가는 하나마음 프로그램 167
찾아가는 학교 통일교육 220
충청권 통일+센터 15, 39

ㅌ

통일관 203, 230~232
통일교육 선도대학 202, 204, 217, 222
통일교육 연구학교 204, 221~222
통일교육위원 228~229
통일교육주간 75, 206, 216~219
통일교육지원법 225
통일NOW 47~49
통일로가요 43
통일문화행사 34, 63
통일방송(UniTV) 15, 47~49, 62
통일법제추진협의회 78
통일+센터 39~43
통하나봄 34~35

ㅍ

판문점 견학 144~146
판문점 선언 24, 98, 142
페이스메이커(pacemaker) 15, 22~23, 31, 52
평화경제특구 104~106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평화경제특구법) 104~105
평화공존 14~33, 52~57
평화교류실 70~72, 91~92
평화적 두 국가관계 22
평화체제 24~26, 30~31, 60
평화통일고문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51
평화·통일 공공외교 56, 60
평화통일마라톤 35, 47
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 연구센터 218
피스메이커(peacemaker) 15, 22, 31, 52

ㅎ

하나둘학교 160~161
하나마음쉼터 167
하나센터 153, 165, 184~186, 188~190
하나원 154~170
하나의원 162~163
한독통일자문위원회 59~60
한반도 국제 포럼 56
한반도통일미래센터 234~238
한반도평화경청단 51, 70~72
한반도평화공존연구단 49~50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 14~27, 116, 140
호남권 통일+센터 41, 144
화천 분소(제2하나원) 166~168

ㅍ

판문점 견학 144~146
판문점 선언 24, 98, 142
페이스메이커(pacemaker) 15, 22~23, 31, 52
평화경제특구 104~106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평화경제특구법) 104~105
평화공존 14~33, 52~57
평화교류실 70~72, 91~92

통일백서

UNIFICATION WHITE PAPER

인쇄일 2026년 5월

발행일 2026년 5월

발행처 통일부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전화 02-2100-5564

팩스 02-2100-5679